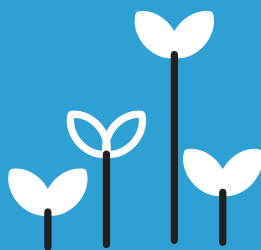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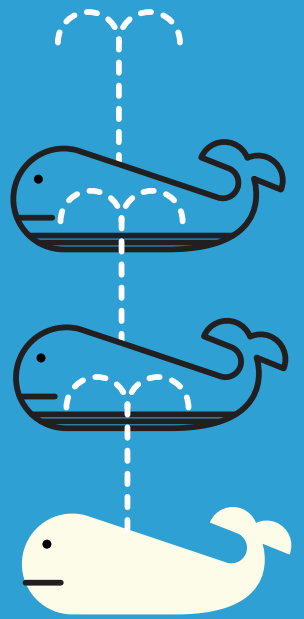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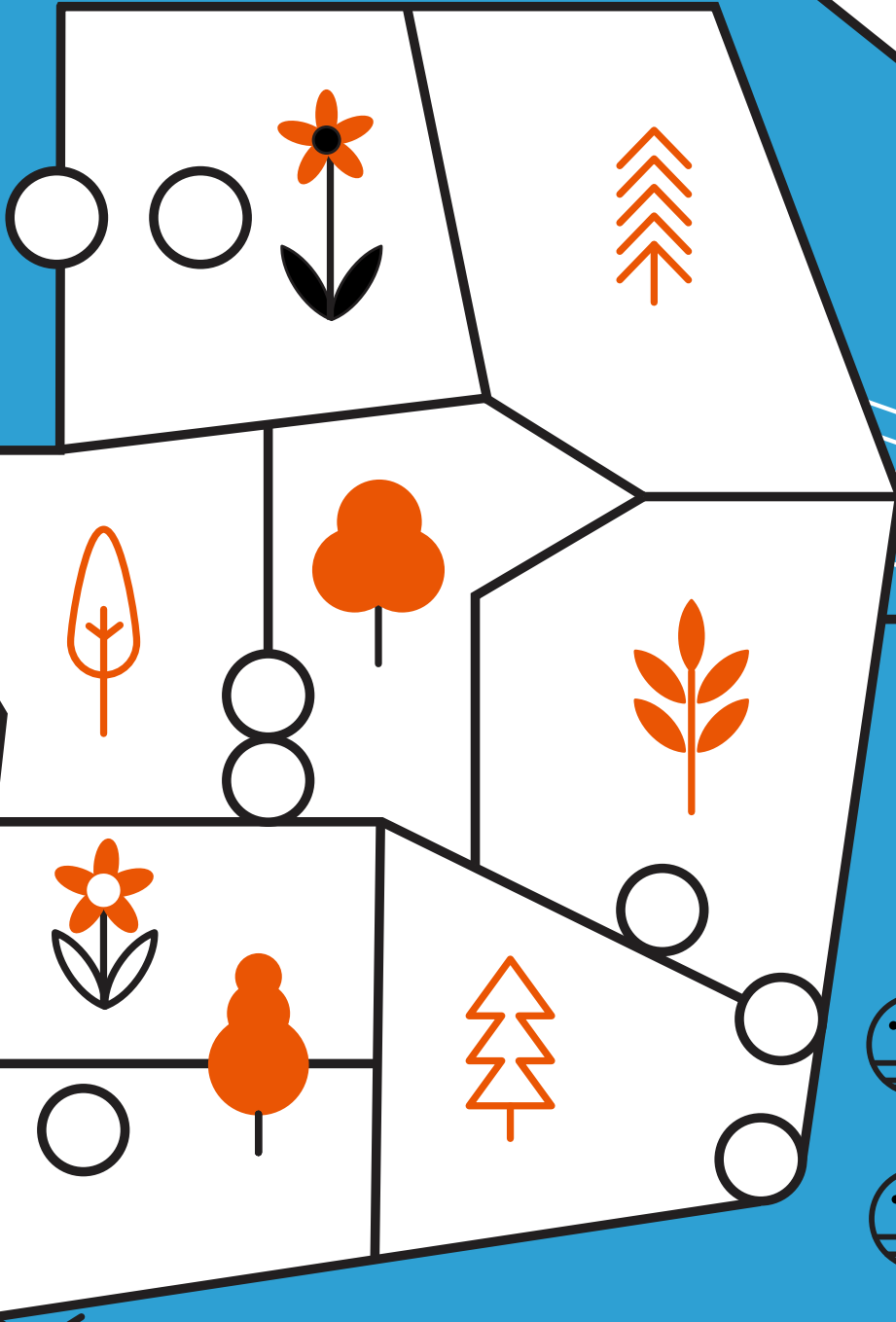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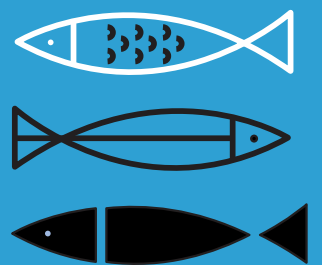


# 기초습득

2022 여름  
#012



**Bas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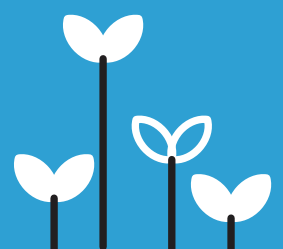


**Income**

**Magazine**



**Issue No.12**



## CONTENTS

<b>사진 속의 말</b>	<b>005</b>	자존을 지키는 어떤 벽 _ 양희석
<b>머리글</b>	<b>006</b>	기본소득으로 자본주의 잠식하기 _ 백승호
<b>이 계절의 이슈:</b>	<b>009</b>	미완의 기본소득 대선, 기본소득당의 분투 _ 오준호
2022년 대선 기본소득	<b>016</b>	‘어떤’ 기본소득을 옹호할 것인가-신자유주의의 재등장과 기본소득 논의의 향방 _ 고봉준
의제화 평가 및 향후	<b>021</b>	내가 겪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과 기본소득 _ 윤형중
기본소득 운동의 방향	<b>029</b>	기본소득은 가까워지고 있는가? _ 김찬휘
<b>논점:</b>	<b>035</b>	코로나19 하에서의 기본소득, 지역화폐, 그리고 지역순환경제 _ 양준호
지역균형발전과	<b>039</b>	지역균형발전과 농민·농촌 기본소득 _ 박경철
기본소득	<b>044</b>	“정선군민 기본소득”은 도입되어야 한다 _ 이관형
<b>화제의 인물</b>	<b>049</b>	[안효상] 다시 올 ‘기본소득의 시간’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_ 인터뷰어 이관형
<b>상상인터뷰 [파문]</b>	<b>059</b>	[고미숙] 백수가 인류의 미래다 _ 인터뷰어 한인정, 정우주/ 정리 류보선
<b>지상중계</b>	<b>076</b>	[김세준] 이제 다시 시작이다 _ 인터뷰어 한인정, 서희원/ 정리 류보선
<b>문학</b>	<b>088</b>	[시] 꽃이 굽이치는 자리 _ 김승희
	<b>089</b>	[시] 묘지명(墓誌銘)-장미 _ 장석남
	<b>090</b>	[짧은 소설] 영숙 미자 경주 정희 왔다감 _ 김금희
	<b>095</b>	[짧은 소설] 경순의 잘못 _ 황시운

## CONTENTS

동향	101	[국내동향] 기본소득을 말하는 한국교회: 성취와 남은 토론거리 _ 이건민
	111	[해외동향] 돌봄혁명 _ 이지은
특별기고	123	프란치스코 교황과 기본소득, 가톨릭 사회교리와 신학의 맥락에서 _ 마르쿠스 Schlagnitweit/ 소개글 금민/ 번역 이관형
함께 만들어가는 기본소득	137	네오오페라이스모의 기본소득론 _ 진성철
	142	김종철과 기본소득 _ 안찬수
기본소득과 나	147	푼 돈? 내겐 ‘삶’을 살게 하는 돈, 기본소득 월 65만 원 _ 윤희주
	150	기본소득, 존재의 권리 _ 최진석
기본소득의 새로운 지평	153	성남시 청년배당의 정치적 궤적 _ 김지현
	157	지역에서 기본소득 운동이 나아갈 길 _ 이재섭

# 자존을 지키는 어떤 벽

양희석 사진작가



2022년 5월 9일 저녁.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 단식농성을 벌이는 이들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렸다. 그 시간 그 바로 옆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들의 집회(혹은 기도회)가 열렸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들의 입에서는 온갖 혐오의 언어가 쏟아져 나왔고 그 말들은 스피커를 통해 확대되어 차별금지법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전해졌다.

두 집회 사이에는 3개의 벽이 막고 있었다. 그중 2개는 두 집회 참가자들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경찰이 설치한 차단벽과 경찰의 벽. 그리고 다른 하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참가자들이 세운 현수막.

두 집회 사이를 막고 있는 영성한 벽들은 ‘혐오의 말’을 막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날 때까지 세 번째 벽을 치우지 않았다.

세 번째 벽은 혐오의 언어에서 자신들을 자존을 지켜주는 벽이 아니었을까?

세 번째 벽에는 ‘성소수자가 요구한다’라고 적혀 있었다.

차단막과 경찰이 두 집회 사이의 충돌을 막기 위한 벽이 되었다. 어느 순간 차별금지법 집회에 참석한 이들이 현수막을 퍼 차단막 위에 펼쳤다.

# 기본소득으로 자본주의 잠식하기

백승호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장

지난 몇 년은 이상 속의 기본소득이 현실 정치를 만났을 때 어떤 역동들이 가능한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에서부터, 지역의 기본소득 실험들 그리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기본소득 목소리가 펼쳐졌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역동들에 대해 어떤 이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젖힐 기본소득이라는 씨가 한국 복지국가에 뿌려진 시기로 평가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이상 속의 기본소득이 성숙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현실 정치를 만났을 때 얼마나 무기력할 수 있었는지를 볼 수 있었던 시기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평가의 방향은 다소 다르지만, 이러한 평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지점은 긴 호흡과 살고 싶은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입니다. 좋은 씨를 다시 뿌리고, 뿌려진 씨가 자라나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 긴 호흡, 기본소득 운동이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분명한 미래 모습.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야만적 형태의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다양한 운동과 정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회주의 운동가이자 이론가였던 에릭 올린 라이트는 이러한 반자본주의적 투쟁을 자본주의 분쇄하기(혁명), 자본주의 해체하기(민주적 사회주의), 자본주의 길들이기(사민주의), 자본주의에 저항하기(사회운동), 자본주의에서 벗어나기(공동체 운동)로 유형화하기도 했습니다. 자본주의의 길들이기와 저항하기는 자본주의의 문제들을 ‘개선’하는 것을, 나머지 세 가지 전략은 자본주의적 착취 ‘구조’를 넘어서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본주의 저항하기와 자본주의에서 벗어나기 전략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상향식 반자본주의 투쟁이라면, 자본주의의 길들이기와 해체하기는 국가 중심적 하향식 전략에 해당합니다.

어떤 전략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역사적 비판들이 있었지만, 에릭 올린 라이트는 상향식 전략과 하향식 전략을 결합한 자본주의 잠식하기 전략의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하고 헤어질 결심을 하기보다, 서로 공유하고 있는 지점을 확인하고 함께 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 운동의 한 길을 가는 입장들이 공유하고 있는 규범적 가치, 미래 사회에 대한 공동의 비전입니다. 공유하는 가치가 다르다면 빠른 헤어짐이, 같다면 인내와 상호 이해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계간 기본소득에서는 지난 대선 기간의 기본소득 운동들에 대한 평가를 기획으로 담았습니다. 다

소 거칠게, 다소 날카롭게 서로의 다름을 확인하고 있지만, 그 행간에 공유하고 있는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독자의 몫일 것 같습니다. 기고해주신 오준호, 고봉준, 윤형중, 김찬휘님께 감사드립니다.

논점 코너에서는 꾸준히 지역 활동을 해 오신 양준호 교수님과 박경철 박사님께서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 지역 격차 해소의 관점에서 지역과 기본소득을 다루어 주셨습니다. 화제의 인물 코너에서는 요즘 Youtube에서 핫한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을 이번 호부터 연재합니다. 이번 호에는 고전 평론가 고미숙님과 기본소득 국민운동 본부 대표 김세준님 편입니다. 문학 코너에서는 김승희, 장석남, 김금희, 황시운 님이 소중한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학술동향 코너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신학적, 사회과학적 논의를 집대성한 책 『한국교회, 기본소득을 말하다: 기본소득에 관한 신학과 사회과학의 대화』를, 해외 동향 코너에서는 돌봄혁명의 제안자 중 한 명인 가브리엘레 빈커의 인터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기고 코너에서는 기본소득에 관한 교황의 입장을 가톨릭 사회교리의 관점에서 다룬 마르쿠스 솔락니트바이트 박사의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기본소득 코너에서는 전성철 님이 네오오페라이스모<sup>neo-operaismo</sup> 이론가들의 기본소득론을, 안찬수 님이 『발언III』의 출간을 계기로 김종철 선생의 기본소득을 다루어 주셨습니다. 기본소득과 나 코너에서는 기본소득당 동물권 생태의제기구 어스링스에서 활동하시는 윤희주 님이 기본소득과 동물과의 공존에 관한 글을, 문학평론가/〈뉴래디컬리뷰〉 편집인 최진석 님이 존재의 권리로서 주권자의 몫으로써 기본소득에 관한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본소득의 새로운 지평 코너에서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김지현 님이 석사학위 논문 「청년배당의 쟁점과 기본소득의 궤적: 정책-연결망의 형성과 변형을 중심으로」와, 제주대학교 이재섭 님이 박사학위 논문을 소개하시면서 공동체와 공동자원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시민배당의 관계에 대한 소중한 원고를 보내주셨습니다.

계간 기본소득은 이렇게 소중한 원고를 보내주신 분들의 한 줄기 희망으로 만들어집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BasicIncome Issue

## [기획자의 말]

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났다. 졌다. 아니, 이기지 못했다. 져서는 안되는 선거였고 질 수 없는 선거였다. 역사를 1980년 중반쯤으로 되돌리겠다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던 상대 아니었던가. 게다가 선거 기간 내내 지기로 작정한 것처럼 어처구니없는 짓을 수없이 남발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기지 못했다. 뿐인가. 멋지게 지지도 못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안되며 해서 기본소득같은 근본적인 대안이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국민이 감지하고 있었던 정치적 상황이었다. 그런데 나라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대통령 후보는 우리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밑그림을 선명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어떤 때는 혁신적인 정책을 과감하게 표명하다가 정작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물어오면 자신의 정책들을 몰래 감추고 스스로 부인하는 선거를 치렀다고나 할까. 당연히 정책 대결은 없었고, 서로에 대한 비방이 지루하게 반복되었다. 지고 나서는 더 참담했다. '부족했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했지만 무엇이 부족했는지 누구에게 미안한지예 대해서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그 상태로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임했고 역시 이기지 못했다. 비굴하게 졌다. 아니, 비굴해서, 졌다.

물론 '졌-잘-싸'라고 말하는 이가 없지는 않은 모양이다. 그럴 수 있다. 겉보기에는 역대 최소 표차로 졌으니. 또 졌어도 정치생명은 이어가야 하니. 게다가 그들은 철학자도 아니고 운동가도 아니며 정치인이므로. '졌-잘-싸'가 아니더라도 그들은 '졌-잘-싸'라고 말했을 것이다.

정치인인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치자. 그렇다면 정권 쟁취가 목적이 아니라 바람직한 사회의 실현을 꿈꾸는 이들은 지난 선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왜,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혁신 정책은 전혀 힘을 받지 못한 것일까. 우리가 뭘 너무 많이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 물론 우리의 반성과 성찰이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불평등, 불공정 등 우리 사회의 심각한 증상에 대해 대안은커녕 대책도 없이 오로지 능력주의의 강화를 통한 성장을 내걸었던 이가 대통령에 당선된 언어도단적 상황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불평등 등 신자유주의적 모순이 폭발적으로 증폭될 윤석열 치하에서 기본소득 운동 등 혁신 정치 세력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점검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차대한 문제로 보인다.

'2022년 대선 기본소득 의제화 평가 및 향후 기본소득 운동의 방향'이 이번 호의 '이 계절의 이슈'인 까닭이다. 쉽게 답하기 힘든 문제다. 이 힘든 작업을 오준호, 고봉준, 김찬휘, 윤형중 씨가 마다 않고 맡아주셨다. 감사드린다.



## 미완의 기본소득 대선, 기본소득당의 분투

### 오준호

20대 대통령선거  
기본소득당 후보.  
기본소득한국네트  
워크 운영위원.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저자

저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실현하고자 제20대 대통령선거에 기본  
소득당 후보로 출마합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누구나 나답게 사  
는 나라, 국민이 주인공인 나라, 모두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나라  
입니다. ... 좋아하는 문장으로 다짐을 갈음하겠습니다. 역경을 헤  
치고 별을 향하여! (PER ASPERA AD ASTRA)  
- 기본소득당 대선후보 출마선언 2021.11.11.

20대 대선은 한국 최초 ‘기본소득 대선’이 될 수도 있었다. 전 국민 기  
본소득 공약을 내건 후보가 둘이나 출마했다. 한 명은 오래 지지율 1위를  
달린 집권 여당 후보였고, 다른 한 명은 그의 기본소득 공약으로 부족하다  
며 ‘충분한 기본소득’을 제시하고 완주한 기본소득당 후보다.

그러나 미완의 기본소득 대선이었다. 끝내 기본소득은 대선의 핵심  
이슈가 아니었다. 나와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대선을 완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역경을 헤쳐 나갔으나 별에 다다르진 못했다.

기본소득당은 조직도 자금도 기성정당에 크게 열세인 가운데 대선  
을 치러냈다. 왜인가? 국민을 설득하여 실현코자 한 이상理想이 있어서다.  
‘모든 개인의 자유와 안정을 권리로 보장하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이 그  
이상이다. 기본소득당은 ‘전 국민 기본소득 월 65만 원’이라는 구체적 목  
표와 로드맵 그리고 이를 위한 조세개혁과 재정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기  
성정당 후보에게 소득보장 정책과 사회전환 비전을 내어 논쟁하자고 요

구했다.

집이 부서졌으면 새 재료로 새 집을 지어야 한다. 잔해를 모아 똑딱 뭉 만들어 이것도 집이라고 우겨선 안 된다. 코로나 재난 회복은 재난 이전으로 슬쩍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난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 위기 구조를 근본부터 전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시민의 가슴 속, 더 나은 사회로의 도덕적 열망을 끌어내는 회복이어야 한다.

저는 꿈꿉니다. 조건 없이 모두에게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 무한경쟁하지 않고도 누구나 존엄한 사회, 기술의 발전이 자연스럽게 개인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사회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획기적 규모의 전 국민 기본소득을 제시합니다. ... 지금의 위기를 넘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회로 나아가자고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는' 사회를 마침내 실현해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 본선 후보 등록 다음날 기자회견 2022.2.14.

대선에서 기본소득당은 기성 정치에 맞선 급진적 비판 정치로서 기본소득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기본소득 공약을 걸고 완주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선거 내내 나는 시대적 위기 해결에 무능하고 게으른 기성정당을 맹렬히 공격했다. 기성정당이 코로나 회복의 방안이라 내놓은 해법들이 얼마나 소심하고 심지어 반동적인지 신랄하게 비판했다. 대안 정치가 들어갈 틈을 만들려면 기성 정치세력에 대한 선명하고 가차 없는 비판을 통해 공론장의 기득권을 밀어내야 한다. 일반인들은 종종 정치인에게 그만 좀 싸우라고 질책하지만, 비판과 싸움이 없으면 기득권 세력은 견제 받지 않고 낡은 대책을 고치지 않는다. 나는 출마를 앞두고 싸움에 나서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

저는 한 잔 커피를 들며 글 쓰는 조용한 아침 시간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 그러나 제가 지금 뛰어 드는 곳이 어떤 전쟁터인지 잘 압니다. 이제부터 제가 가진 모든 무기를 가지고 맹렬히 싸우려 합니다. ...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다시 오기 바라며 지금은 니체가 남긴 말 "진실을 말하고 활과 화살을 능히 다루어라"를 가슴에 새깁니다.

- 출마선언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 2021.11.10.

윤석열 시대에 기본소득 정치의 역할도 여기에 있다. 기본소득 정치는 급진적 비판과 과감한 대안의 정치여야 한다. 기본소득은 또 하나의 현금복지나 골목경제 활성화 수단에 머물 수 없다. 기본소득은 사유재산에 근거한 현대 민주주의를 공유부 평등권에 근거한 공유자 민주주의로 혁신하는 무기다. 자연에 대한 착취적 관계를 끊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생태적으로 재구성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소득보장정책 논쟁은 제대로 벌어지지 못했다. 그 책임은 거대 양당에게 있

다. 민주당은 이 의제를 주변으로 미뤘고 국민의힘은 여기에 아무 관심이 없었다. 소수정당인 기본소득당은 의제를 정할 힘이 미약했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공격에만 몰두하며 정권교체면 다 된다고 큰소리쳤다. 이재명은 선거 내내 우향우하며 기본소득 공약을 뒤로 감췄고 감세 약속에는 적극적이었다. 심상정은 진보정치의 대변자를 자처하였으나 시대적 위기를 타파할 과감함이 없는 선별적 소득정책만 내세웠다. 토론하자고 요청했지만 외면당했다.

미래를 말하지 않고 현재의 익숙한 방식에 타협하며 급기야 과거의 성장우선주의로 되돌아가자는 기성정당 후보들의 태도는 실망스러웠다. 나는 가라앉는 기본소득과 소득보장 의제를 수면에 끌어올리려고 발버둥쳤다. 줄기차게 입장 내고 후보들에게 질문하여 논쟁을 시도했다.

내 문제 제기를 그들도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장면이 내가 초청받지 못한 ‘4자 토론’ 중에 나왔다. 안철수는 이재명에게 기본소득 공약이 “연 80조에서 많으면 400조까지, 5년이면 400조에서 2천조까지 든다”라며 재원 계획이 있냐고 물었다. 그런데 안철수가 말한 연 400조(5년간 2천조)는 기본소득당의 ‘전 국민 기본소득 월 65만 원’ 공약에 드는 예산이다. 안철수는 나의 기본소득과 이재명 기본소득을 묶어 질문한 것이다. 이재명은 2천조가 어디서 나왔느냐며 자기와 무관하다고 답했다.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그 자리에 초청받지 못해 말할 수 없었다. 이런 장면이, 소수정당 후보의 목소리를 지위 대안의 상상력을 가두는 현 선거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

### 기성정당을 향한 기본소득당의 선명한 비판

지난해 가을, 윤석열이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 갇은 말실수로 이미지를 깎아먹고 있을 때 국민의힘은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영입했다. 김종인은 미래통합당 정책 1번에 기본소득을 넣은 인물이다. 나는 윤석열 캠프가 김종인의 주도 하에 중도 유권자를 공략하기 위해 상당히 전향적인 소득보장정책을 제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짝퉁이더라도 ‘윤석열 기본소득’을 내리라고 봤다. 그러면 이재명도 뒷방에 넣어둔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걸고, 심상정도 가세해 소득보장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실제로 그랬더라면, 나도 논쟁에 끼어들면서 기본소득당의 정책과 사회전환 비전을 국민에게 알릴 기회를 더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거대양당 후보는 국민 삶과 직결된 소득보장 논쟁은 회피하고 대장동 의혹, 캠프에 무속인이 있는가 역술인이 있는가 따위 의혹으로만 서로를 두들겼다. 대안 논쟁이 사라지니 군소후보들이 마이크를 잡을 기회도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대안 논쟁을 끌어내기 위해 쉼 없이 기성 정당 후보들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나는 이재명에게 기본소득 지급 수준이 너무 낮다고 비판했다. 물론 지급 수준이 낮더라도 기본소득이 아닌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가진 매력과 이상적 취지는 살리기 힘들다. 이재명의 ‘용돈 기본소득’은

사회전환의 수단이 되기에는 너무 약하다.

이재명 기본소득과 기본소득당 월 65만 원 기본소득의 차이는 첫째는 금액의 차이이고 둘째는 기본소득을 통한 사회전환 전망의 차이다. 기본소득당의 계획은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조세개혁·재정개혁과 부동산개혁·에너지전환까지 추진하는 것이다.

출마를 선언하자 많은 사람이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한다는데 왜 굳이 출마하느냐’고 물었습니다. ...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을 소비진작 방안, 지역화폐와 연계해 골목 경기를 활성화하는 대책으로 주로 이야기합니다. ... 이재명 후보는 한강 물로 빨래하고 목욕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큰 배를 띄워 바다로 나가자고 말하겠습니다. ... 기본소득은 소수에게 집중된 부를 과감히 재분배하여 빈곤을 제거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나아가 일자리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적 자유를 부여하는 기획입니다. ... 이를 위해 기본소득은 삶의 최저선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 ‘기본소득 월 65만원’ 공약 발표 기자회견 2021.11.23.

이재명을 비판한 또 다른 지점은 기본소득 공약을 계속 뒤로 물리고 숨기는 태도였다. 이재명은 대선 기간 여러 차례,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기본소득(또는 토지보유세)은 하지 않겠다고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자신의 다른 공약에 대해선 ‘국민 동의’ 같은 조건을 단 적이 없다.

나는 이런 태도는 정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 취할 정직한 태도가 아니며, 이런 식이면 설령 당선 되더라도 기본소득 추진 동력을 상실할 거라고 지적했다. ‘테세우스의 배’를 언급하며 기본소득 도입을 용감히 말하지 못하는 이재명이 우리가 알던 이재명 맞느냐고 비판했다.

그리스 신화 속 영웅 테세우스가 고향에 돌아오자 사람들은 그가 타고 온 배를 보전하기로 합니다. 세월이 흘러 배가 여기저기 망가지자 사람들은 낡은 부품을 새 부품으로 하나씩 교체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부품이 싹 교체된 배는 테세우스의 배입니까, 아닙니까? 전 국민 기본소득 버리고, 토지보유세 버리고, 탄소세 버리고, 범주형 수당과 부동산 감세와 대규모 투자만 집어넣은 이재명은 이재명입니까, 아닙니까?

- 기자회견 발언 2022.1.4.

이재명의 이러한 오락가락하고 모호한 태도는 중도 유권자의 눈치를 본 것이겠으나 결과적으로 패배의 원인이 됐다. 이런 태도 때문에 이재명은 선거 내내 이슈를 주도하지 못했다. 윤석열이 쟁점을 던지면 이재명은 그에 반응하기만 했고 대장동 등 각종 의혹에 해명하느라 바빴다. 만약 기본소득 추진 의지를 확고하게 보이며 증세를 포함한 조세개혁까지 공약했다면, 윤석열이 이에 대응하고 나섰을 테니 이재명이 의제를 주도했을 것이다. 의제를 선점하지도 주도하지도 못하는 이재명은 ‘김빠진 사이다’

라는 조소를 듣고 선거에도 졌다.

심상정도 강하게 비판했다. 심상정이 ‘시민평생소득’이라는 소득보장정책을 제시한 점은 높이 평가했다. 시민평생소득 정책 중 핵심인 ‘시민최저소득’은 ‘진보판 음의 소득세’라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최저소득은 기본소득과는 다른 선별주의 정책이며 따라서 재분배 규모가 작다. 그래서 불평등 타파에 역부족이다.

시민최저소득은 중위소득(1인 가구 기준 약 200만 원)을 기준소득으로 정하고 시장소득이 그 이하인 국민에게 소득액과 기준소득의 차액의 절반을 차등해서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생계급여와 비교하면 지원수준이 높다. 그러나 중위소득 언저리에 있는 수많은 불안정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제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과 제도의 수혜자를 가르고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배제하는 제도는 확대 가능성이 낮다.

또 시민최저소득은 개인이 아닌 가구에 지원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안정을 시민의 권리로 보장하는 기본소득과는 비전 자체가 다르다. 결정적으로, 시민최저소득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 복지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는데 그 경우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 계획이 없었다.

오준호의 소득보장정책은 단순 명쾌합니다.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모두에게 든든한 소득안전망을 보장하고 그 위에 전 국민 소득보험을 도입합니다. ... 반면 심 후보는 저소득층은 최저소득, 일하는 사람은 소득보험, 그밖에 공익활동은 참여수당 등 매우 복잡합니다. 복잡한 제도는 필연적으로 강화된 선별심사를 낳습니다. 심 후보 정책에서 국민은 자신의 가난과 무능력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인정받아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 심상정 시민평생소득 비판 기자회견 2021.12.22.

끝으로, 나와 기본소득당은 모든 후보에게 코로나 회복이든 복지국가 전환이든 증세 없이 불가능하므로 증세를 포함한 재정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나는 기본소득 65만 원과 복지서비스 확대의 재원 연간 약 380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소득 목적세 신설과 소득세제 정비를 골자로 하는 조세개혁안을 제출했다. 장기적으로 기본소득 그린뉴딜·디지털뉴딜을 통해 국가가 혁신산업에 투자하고 그 성과배당을 기본소득 기금으로 확보하는 계획을 밝혔다.

최악은 윤석열이었다. 재정계획이 정말 무책임했다. 윤석열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청년원가주택 공급, GTX 신설, 병사급여 200만 원 지급, 복지 확대 등 막대한 재정이 드는 공약을 남발했다. 그러면서 감세를 약속했고, 돈은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다고 했다.

나는 윤석열의 공약을 다 시행하려면 드는 비용을 추계하여 5년 간 373조가 든다고 지적했다. 감세한다면 임기 중에 세수가 70조나 줄어드는데 어디서 재원을 마련하느냐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부예산 300조원에서

연간 70조원을 어디에서 깎을지 답해야 합니다. ... 심지어 윤석열 후보는 세금을 더 깎겠다고 합니다. 종부세와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고 인적공제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연간 12조원씩 세수가 감세됩니다. ... 거기에 윤 후보는 국가채무를 통제한다며 재정준칙을 만들어 재정건전성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 한손으론 373조짜리 공약을 던지고 다른 손으론 세수와 지출을 줄인다? 이게 양립할 수 있습니까?

- 윤석열 재원계획 비판 기자회견 2022.1.28.

윤석열은 정권교체만 되면 다 가능하다고, 별 따는 거 말고는 다 할 것처럼 큰소리쳤다. 그래놓고 윤석열이 당선되고 나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하는 시위를 향해 우선순위가 아니니(예산이 부족하니) 기다리라고 한다. 이렇게 얼굴이 두꺼울 수 없다.

재정계획이 부실하기는 이재명도 마찬가지였다. TV토론에서 이재명은 “임기 중 증세는 없다”고 못 박기까지 했다. 나는 이재명에게 “기본소득 대통령이냐 감세 대통령이냐 분명히 선택하라”라고 요구했다. 증세 없는 기본소득이 가능한지는 제쳐놓고라도 그것은 적어도 부의 재분배를 위한 기본소득이 아니다.

심상정은 윤석열과 이재명이 증세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는데 그 문제 제기는 맞다. 그렇지만 심상정의 증세 계획은 진보정당의 계획이라 하기엔 턱없이 부족했고 나는 그 점을 지적했다. 심상정의 증세 계획으로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규모가 딱 OECD 평균 수준에 이르게 된다. 기본소득당의 계획은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GDP 대비 복지지출 규모를 확 끌어올려 단숨에 OECD 최상위 북유럽 국가 수준으로 가자는 것이다. 심상정의 복지국가 플랜은 20년 전엔 한국의 진보적 미래였지만, 한국이 경제 선진국인 된 지금은 너무 평범하다.

## 씨 뿌리지 않고 다음은 없다

거대양당은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 전환의 비전을 논의하기를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시장에 맡겨 규제를 풀면 해결된다는 먼지 냄새 나는 신자유주의 교본을 되풀이해 읽었다. 민주당은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또 강조할 뿐 낡은 분배 패러다임을 바꾸고 사회를 생태적으로 전환할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정의당은 선별복지와 일자리 공급 위주 해법에서 못 벗어났고 분배계획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며 진보의 비전을 쇄신하지 못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 있는 복지국가로 가는 발판을 만들고자 기득권 정치세력과 힘을 다해 싸웠다. 먹구름 사이로 잠시 푸른 하늘을 본 사람은 장마가 끝나간다는 걸 안다. 기본소득당이 있어 누군가는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을 상상했으리라 믿는다.

에밀 졸라의 <제르미날>은 19세기 프랑스 탄광 광부들의 파업과 좌절을 그린다. 광부 파업에 앞장

선 에티엔은 파업이 패배하고 정치 없이 길을 떠난다. 그는 패배했으나 좌절하지 않고, 분노와 희망의 씨가 땅에 뿌려져 싹이 텃다고 확신한다. 프랑스 혁명기에 만들어진 새 달력에서 제르미날은 ‘싹 트는 달’을 가리킨다. 기본소득 있는 새로운 사회의 씨가 국민들 마음에 뿌려졌고 작은 싹이 자랐다. 싹이 낫다 해서 열매가 열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씨 뿌리고 싹 틔우지 않고 그 다음이 있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어떤’ 기본소득을 옹호할 것인가 - 신자유주의의 재등장과 기본소득 논의의 향방

고봉준

문학평론가,  
경희대 교수

\*

대선이 보수세력의 승리로 끝났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정치적 기반을 잃었던 보수세력은 놀라운 속도로 영향력을 회복했고, 현재로선 6월 초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실책과 무능, 다원화된 대중의 욕망에 대처하지 못한 민주당의 한계, 신자유주의의 내면화로 인한 전사회적 보수화 경향 등이 사태의 복합적인 원인일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양당정치의 장벽에 갇혀 약 80만표(2.37%)를 얻는 데 그친 것은 향후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뼈아픈 대목이다. 대선 막판 유권자들의 표가 두 거대정당으로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해도 심상정의 득표수가 200만에서 80만으로 급격히 줄어든 것은 ‘진보’의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진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87년 이후 한국의 진보적 사회 운동은 노동운동, 시민운동, 학생운동의 세 주축을 중심으로 움직여왔다. 그런데 21세기에 접어들어 이들 전통적 진보세력의 위상은 큰 변화를 겪었다.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의 포디즘적 계급 타협과 유사한 방향으로 흘러감으로써 대중의 지지를 잃어버렸다. ‘포디즘적 계급 타협’의 핵심은 노동운동이 노동시간을 둘러싼 투쟁에서 이윤에 대한 노동자의 몫을 주장하는 투쟁으로 선회한 것이다. 한편 시민운동은 비판적 성격을 상실하



고 친정부적인 경향을 띠었고, 학생운동은 신자유주의 이념과 사회의 보수화로 인해 일찌감치 수명을 다한 상태였다.

이들 세력의 영향력이 급감하는 사이 페미니즘, 성소수자, 장애인, 기후 환경,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 같은 새로운 흐름이 등장하여 대안적인 정치세력을 형성했다. 이 장면은 정치적 영역에서 기존의 정당 정치가 영향력을 잃어버리면서 다양한 NGO 단체가 전면에 등장하여 ‘정체성 정치’의 시대를 연 것과 유사한 변화이다. 문제는 이들의 운동이 각개약진의 양상을 띠는 점이다. 게다가 전통적인 정당 정치는 물론이고 87년 체제하에서 ‘진보’의 가치를 독점해온 기성의 진보세력은 이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현실은 대선에서 보수세력이 승리한 것보다 한층 깊고 심각한 상처로 되돌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가 알던 그 ‘진보’의 해체 내지 재편은 불가피할 듯하다.

★

최근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하겠다는 취임사의 내용과 연결된다. 한마디로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시장 중심)의 성장을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녹색산업을 성장시키고, 그것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 의존 경제를 저탄소·친환경 경제로 바꿔내는 그린 뉴딜, 그리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구성된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 정책과 정반대 방향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대기업의 낙수 효과에 기댄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것,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으로 요약된다면, 윤석열 정부는 경제의 주도권을 ‘민간’, 즉 기업과 시장에 넘겨주고 규제철폐 등을 통해 이윤 추구를 위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것은 대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낙수효과와 성장, 그리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전통적인 성장론이다. 예상컨대 이 변화는 노동관계법을 수정하고, 투자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기업의 기후 환경에 대한 책임은 덜어주는 정책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오늘날 OECD 국가에서 기업의 이윤 추구를 제약하는 대표적인 요인의 하나가 바로 기후 환경에 대한 책임과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다시 전면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 팬데믹은 인류에게 엄청난 상처를 남겼지만 ‘세계’에 대한 새로운 상상의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완전히 무의미한 경험만은 아니었다. 그 상상에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가능성, 기본소득의 현실성,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한계, 기후위기의 구체적 해결방안 등이 포함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하에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식량, 생필품, 과일, 육류 등을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남반구 국가를 통해 아웃 소싱했다. 오늘날 선진국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이나 상품 생산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다. 대신 그들은 지구 전체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단기적으로 엄청난 이윤을 발생시

키는 금융을 통해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2000년 이후 막대한 이윤이 창출되는 분야는 전통적인 산업이 아니라 부동산, 주식, 금융 같은 분야이다. 독일의 철학자 리하르트 프레이트는 이러한 변화를 가리켜 “글로벌화와 디지털화는 우리를 강제로 다른 사회로 이끌 정도로 노동과 삶의 세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금융을 통해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대신 소위 ‘제국적생활양식’(울리히 브란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상품을 다른 국가, 다른 대륙에서 수입했다.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상품은 가난한 나라에서 생산하고 환경적 영향이 거의 없는 금융, IT 등의 산업은 자신들이 담당함으로써 선진국은 막대한 부와 쾌적한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었다. 밀(우크라이나, 인도, 브라질), 팜유(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보카도(칠레), 목화(인도), 패스트 패션(방글라데시), 리튬(칠레), 코발트(콩고)···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상품을 매개로 한 이러한 지구적 네트워크는 결국 코로나 19의 지구적 확산이라는 재앙을 초래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한계를 드러냈다. 미국 앞바다에는 상품을 실은 수십 척의 컨테이너가 입항을 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정작 대형 마트에서는 생필품조차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진 것이다. 이 장면을 목격한 각국의 사람들은 로컬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것만이 아니다. 스웨덴의 생태학자 안드레아스 말름이 『코로나, 기후, 오래된 비상사태』에서 썼듯이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선진국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 물자생산법을 발동함으로써 GM과 포드가 고급 승용차 대신 인공호흡기를 대량생산하는 방법을 고민했다. 유럽에서도 프라다, 아르마니, 입생 로랑 같은 의류업체들이 생산 라인의 일부를 의료용 작업복, 마스크, 방호복 등을 생산하는 데 사용했고, 미국과 유럽의 몇몇 주류업체들은 보드카나 위스키 같은 고급술을 만드는 라인을 개조하여 손 소독제를 생산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불붙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이었다면 재원 마련의 비현실성이나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닮았다는 이유로 비판의 목소리가 컸겠지만, 코로나라는 재난상황 앞에서 다수의 국민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제도 자체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한국의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기 시작했다. 이재명, 김경수 등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자 당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문제를 검토할 시기라고 응답했고, 여기에 이낙연, 김부겸, 박원순 등이 논의에 가세했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10대 정책에 기본소득을 포함시키는 파격적인(?) 정강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강연에서 기본소득 논의의 배경과 관련하여 “빵 사먹을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게 보수가 추구하는 진정한 자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에 반대하며 선별적 기본소득을 골자로 한 한국형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기본소득이 기존의 복지제도를 폐지 또는 후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하여 유보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기억한다.

★

리하르트 프레하트의 주장처럼 향후 10년 이내에 유럽의 선진국들에서는 ‘기본소득’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화와 디지털화로 인해 산업화 시대에 인간의 노동이 담당했던 대부분의 일들은 기계(컴퓨터)의 몫이 될 것이고, 특히 선진국의 경제가 디지털 경제와 금융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한 엄청난 규모의 실업은 불가피해 보인다. 독일의 경제학자 칼 프레이에 따르면 1900년 뉴욕에는 저녁마다 햇불과 사다리를 이용해 가로등에 불을 붙이는 점등인이 600명 존재했었다고 한다. 불을 다루는 숙련도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이 직업은 1927년 전기가 뉴욕의 조명을 독점하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급격한 디지털화는 전 산업에서 이러한 장면을 불러올 것이다. 가령 19~20세기의 대표적인 산업인 자동차 분야는 전기차가 등장하면서 부품산업이 빠르게 해체되고 있으며,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반화되면 운전이 생업노동인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물론 디지털화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주장도 완전히 거짓은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디지털화가 만드는 일자리의 대부분은 플랫폼 노동이나 임시직 경제(gig economy)처럼 불안정한 일자리이다. 광범위한 실업과 극도로 불안정한 각경제는 많은 사람들을 최소한의 생계도 불가능한 상태로 내몰 것이며, 그러한 사회적 압력은 결국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이어질 것이다. 오늘날 보수적인 정치세력은 물론이고 일부 기업가들마저 ‘기본소득’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페이스북의 공동창업자인 크리스 휴스, 소프트웨어 개발자 마크 앤드리슨, 테슬라의 경영자 일론 머스크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과거에는 기본소득이 일부 진보적인 세력만의 주장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소위 우파로 분류되는 사람들도 공공연하게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있다.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인용되는 밀턴 프리드먼의 마이너스 소득제 같은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한국에서도 기본소득 문제는 더 이상 진보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다. 사태가 복잡해지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현재 독일 및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 진영이 각축을 벌일 예정이다.

왜 이 상황이 문제적인 것일까? 그것은 유럽의 우파들에게 기본소득 제도는 기존의 복지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문제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진보 진영은 기본소득과 복지국가 지향은 별개의 문제이며, 따라서 기존 복지정책을 유지한 상태에 기본소득을 추가함으로써 생업노동과 인간의 가치의 연결고리, 즉 노동하는 인간만이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관념을 해체하려고 한다. 반면 우파의 기본소득 담론은 기본소득과 기존의 복지제도를 통합하는 방향이 원칙이므로 복지제도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본소득 제도가 물질적인 궁핍을 완화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여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적 합의의 파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향후의 기본소득 논의는 프리드먼의 ‘자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보수적인 정치적 구조 속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것은 2000년 이후 점차 확장된 복지제도는 물론이고 복지국가 지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릴 가능

성이 크다. 이른바 복지국가 담론을 신자유주의적 능력주의 담론이 대체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가 통치의 일부로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 썼듯이, ‘복지국가’는 단순히 복지정책과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환원될 수 없다. 근대적 의미의 복지국가는 한 사회의 구성원 모두를 그 사회가 공동적으로 책임진다는 상호성의 원칙에 기초한다. 이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실업자, 범죄자, 기타 노동 능력이 없는 노약자 등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간주하고, 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동체의 책무라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다. 반면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상호성의 원칙과 공동체의 책무를 오로지 개인의 몫으로 간주함으로써 개개인이 보험, 연금 등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요한다. 신자유주의는 왜곡된 ‘능력주의’를 표방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개인의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그리하여 우리를 맑스가 지적한 두 가지 자유(노동력을 판매할 자유와 굶어죽을 자유)와 맞닥뜨리게 만든다. 물론 ‘선거’라는 제도가 존재하므로 신자유주의에서도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 등을 완전히 배제하는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노동하는 존재, 소득이 있고 세금을 납부하는 존재만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이라는 인식(생업노동과 인간다움의 가치를 동일시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으며, 실업자를 포함한 사회적 타자들은 자신의 가난과 무능력을 입증해야만 복지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보수화된 분위기 속에서 확산되는 기본소득 논의를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이다. 중요한 것은 보수세력의 승리라는 현상이 아니라 그것으로 대표되는 사회 전체의 보수화이다. 기본소득에 관해서라면, 당분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근거 없는 불안이기를 기대하면서 살아 가야 할 지도 모르겠다.

# 내가 겪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과 기본소득

## 윤형중

기본소득연구소  
연구실장,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정책조정2  
팀장

나는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에서 일했다. 정당에선 선거 때마다 수많은 조직들이 만들어진다. 그 중에 ‘본부’는 상근자들이 일하는 조직이다. 보통 본부는 홍보, 조직, 정책, 직능, 전략 등 역할별로 나뉘어져 있다. 대선 때 조직되는 수많은 위원회들을 총괄하고, 실제로 액션을 취하는 역할도 상근자들이 있는 본부가 맡는다.

정책본부는 공약을 총괄한다. 하지만 이 외에 다른 업무도 많다. 후보가 유세 혹은 소셜미디어에서 발표할 정책 관련 메시지를 만들어 메시지팀에 보내야 하고, 후보의 인터뷰 답변을 작성해 공보실에 보내야 한다. 각종 단체들이 선대로 보낸 질의서에 답변서를 작성하고, 방송토론의 예상 질의답변을 만들어 방송토론팀에 보내는 것도 정책본부의 업무다. 여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들을 취합해 공약화할 것들을 선별하고, 필요할 경우 내용의 조정 및 구체화도 한다. 사실상 선거에서 필요한 모든 정책 관련 업무를 맡는 곳이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정책본부는 80여명으로 구성됐다. 대다수가 전현직 국회 정책위 전문위원, 보좌진들이고, 일부가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와 호흡을 맞춰 일해온 사람들이다. 나는 이 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지만, 기본소득을 담당하러 정책본부에 합류했다. 정작 정책

본부에서 일하며 기본소득 외 기본금융과 세금제도 뿐 아니라, 경제성장 전략인 ‘전환적 공정성장’ 정책을 담당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분배정책과 성장정책을 함께 맡는 아이러니한 역할이었던 셈이었다. 예상치 못한 업무들이 쏟아졌지만, 주어진 업무를 잘 수행하면 언젠가 나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이란 기대를 품고 진심으로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이런 기대 자체가 이 거대정당서 내 목소리뿐 아니라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반적으로 힘을 못 쓴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그래도 내부에서 조금씩 균열을 내려 노력했다.

그 일환 중 하나가 지난 2021년 12월 9일, 정책본부와 이재명 후보와의 간담회 때의 일이었다. 나는 이렇게 물었다.

후보님께서 최근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토지보유세도, 기본소득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침은 원래 우리 공약에도 있던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 후보님의 발언이 국민적 동의를 얻어 기본소득을 시행한다는 ‘절차’적인 내용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이재명이 기본소득 공약을 후퇴했다고 보도하고 있고, 이에 대해 후보님과 당은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적극적인 재분배의 의지도, 부동산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약해졌다면, 도대체 후보님은 왜 정치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후보를 지원하는 선거 조직과 후보 간의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는지 모른다. 내 질의가 끝나자마자 눈살을 찌푸리는 몇몇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물론 후보는 동요하지 않고 차분히 답변했다. 당시 간담회를 녹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 내용을 정확히 복기하진 못하지만, 이런 식의 답변이었다.

기본소득과 토지보유세는 꼭 할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겨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정책들을) 조금 뒤로 밀어뒀습니다.

## 우여곡절 끝에 발표된 기본소득 공약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하는 과정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민주당은 기본소득 공약을 대선 경선 기간인 2021년 7월 22일에 발표했다. 제1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을 발표하고서 4일 뒤였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이 제1공약이 아니다”, “기본소득은 공약이 아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재명 후보는 “아직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약

이 아니고, 기본소득은 당연히 할 것”이라고 해명하긴 했지만, 이미 다수의 언론들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가 한 차례 불식된 계기가 바로 기본소득 공약 발표였다.

당시 발표문에는 기본소득의 취지 뿐 아니라, 구체적인 지급 액수와 재원 방안, 기대효과 등이 두루 담겼다. 지난 대선에서 ‘기본소득이 사라졌다’는 지적을 주로 받았지만, 공약의 내용만큼은 의미있는 수준으로 채워졌다고 본다. 공약 발표문은 선거 캠페인과는 별개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약 발표문을 꼼꼼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이 양극화를 완화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란 취지부터 강조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물론 생존마저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생산력은 높지만, 소비역량은 부족합니다. 투자할 돈은 남아돌지만 투자할 곳은 찾기 어렵습니다. 국가재정을 공급에 집중하면 고용과 소비가 늘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양극화 완화, 즉 분배강화가 경제성장에 도움 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대전환의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대적 정부 역할도 중요한 성장 수단이지만, 세계 최저수준인 공적이전소득(국가의 가계소득 지원)과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성장의 길입니다. (발표문 中)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설명하는 방식도 단순했다.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발표문 中)

이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체험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이 경제적으로도 의미 있는 정책임을 호소했다.

지난해 전 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를 상기해 보십시오.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이기에 앞서 경제정책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지역 골목 경제 활성화와 매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현금과 달리 경제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발표문 中)

## 조세저항 넘어 중부담 중복지로 가는 전략

당시 발표문에서 기본소득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며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전략임을 명확히 했다.

저 이재명이, 기본소득을 국가정책으로 도입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며, 저부담 저복지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국가로 가는 대전환의 길을 열겠습니다. (발표문 中)

조세저항을 완화할 수 있는 증세 전략임도 덧붙였다. 내가 조세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로 자주 쓰는 표현은 ‘취약계층과 중산층을 한 배에 태우는 전략’이지만, 이재명 후보는 고소득층에게 더 부담을 주고, 증세를 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하진 않았다. 하지만 역대 대선에서 최초로 ‘증세’를 공언했다는 점은 분명 의미가 있다.

기본소득은 부족한 기존 복지를 통폐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증세 없는 복지’를 하자는 기만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는 선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는 OECD 평균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조세부담률도 현저히 낮습니다. 조세부담률을 올리고 복지를 늘리려면 증세해야 하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과 조세저항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증세로 인한 부담보다 받는 혜택이 더 많다고 확신하신다면 증세에 대한 국민의 동의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증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조세부담률을 올리고, 복지지출을 늘리면서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입니다. (발표문 中)

기본소득에 대한 진면목을 알리면 충분히 지지를 얻을 수 있을거란 근거도 제시했다.

기본소득은 아직 낯설지만, 국민께서 내용을 알면 아실수록 필요성에 공감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에서 공론화를 위한 숙의 토론을 두 차례 진행한 결과, 기본소득 도입 찬성 여론이 토론 전에는 50%였지만 토론 후에는 79%까지 높아졌습니다. (발표문 中)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충분히 공론화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 실행할 것임을 명확히 한다. 이 부분은 나중에 오해를 야기하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공약에 포함된 내용이었다.

증세를 동반한 본격적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효용과 증세의 필요성을 국민께서 체감하고 동의한 후에야 가능합니다. 저 이재명은, 대통령 직속 국가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정책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발표문 中)



기본소득의 방식으로 전국민 기본소득과 범주형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범주형 기본소득(categorical basic income)을 부분 기본소득(partial basic income)이라고 표현했다. 2016년도에 본격화된 국내 기본소득 논의에선 학계에서조차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논의가 다수 있었고, 이런 혼란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범주형은 연령, 지역, 직종 등의 범주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이고, 부분형은 낮은 금액의 기본소득을 의미한다.

저 이재명이 구상하는 기본소득은 전 국민 대상으로 소액에서 시작해 고액으로 늘려가는 보편기본소득과, 청년 등 일부 계층이나 농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고액으로 시작해 대상을 확대해가는 부분기본소득이 있습니다. (발표문 中)

### 공유부를 언급한 최초의 기본소득 공약

기본소득의 목표 금액과 공약으로 제시하는 지급 수준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으나, 차기 정부 임기 내에는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 원(4인가구 4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발표문 中)

지급 대상과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기도 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약 700만 명)에게 보편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 원(4인가구 400만 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습니다.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1인당 25만 원씩(4인가구 100만 원) 1회로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4인가구 400만 원)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농민,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문화예술인 등을 비롯해 지방의 위기지역 등 다른 분야의 부분기본소득은 해당 분야 정책공약 발표과정에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문 中)

이렇게 기본소득이 시행될 경우 2023년부터는 1인당 연 25만 원이 지급된다. ‘푼돈’ 기본소득이란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 개인의 경험에 기반해 반박했다.

40여 년 전 매월 7천 원만 있었다면 제가 학원비를 벌려고 공장을 다니다 팔에 장애를 입고 군대를 못 가는 불행은 없었을 것입니다. 기본소득제도로 송파 세 모녀에게 월 30만 원만 있었으면, 가족들의 극단적 선택도 없었을 것이고, 코로나 장발장이 굶주림에 달걀을 훔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발표문 中)

기본소득 재원도 나름 구체적으로 밝혔다.

도입기인 차기 정부의 기본소득은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긴급한 교정과세(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로 시작합니다. (발표문 中)

재원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1) 재정구조 개혁,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 세원관리 강화: 25조 원 이상.
- 2) 연간 60조 원을 오가는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 25조 원 이상
- 3) 긴급한 교정과세분(국토보유세, 탄소세)(발표문 中)

국토보유세와 탄소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담겼다.

토지공개념실현,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 원 가량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께서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되어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 투기억제 등의 복합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발표문 中)

기후위기를 맞아 탄소 제로 경제로 전환하려면 탄소세 부과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톤당 5만 원만 부과해도 약 30조 원인데,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8만 원 이상으로 올리면 64조 원입니다. 이 탄소세 재원 중 일부는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상승에 직면할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면, 에너지 기본권 보장은 물론 조세저항이나 물가상승 피해가 적고, 탄소배출자의 저탄소사회 적응, 화석연료 사용 감축, 소득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라는 복합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발표문 中)

놀라운 부분은 이 공약 발표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주창해 온 기본소득의 원천인 ‘공유부’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점이다.

기본소득 토지세나 탄소세는 부동산투기나 탄소배출로 생기는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는 불공정경제를 시정하여 공정경제로 바꾸고, 주권자가 공유부의 실제 주인이 되어가는 전환적 정책입니다.  
(발표문 中)

공유부라는 단어를 언급하긴 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주요 키워드는 ‘경제적 기본권’과 ‘복지적 경제정책’이다. 경제적 기본권이 비록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의미하는 한계가 있지만,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의미도 있었다. 복지적 경제정책은 ‘경쟁성장’에 얽매어는 단점이 있지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메시지 없이 기본소득을 설득하기 어려운 ‘현실론’이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공약 발표문엔 이런 취지의 문장들이 나온다.

경제적 기본권에 기초한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정책에 더하여 온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40여 년 전 박정희 정권 당시 불안정하게 만들어진 의료보험이 지금은 세계에 자랑하는 최고의 복지체제로 발전했듯이, 한국형 기본소득은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불굴의 용기와 추진력으로 박근혜 정부의 반대를 뚫고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했던 것처럼,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으로 대전환의 시대에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 성장이라는 새 역사를 만들겠습니다.(발표문 中)

### 왜 기본소득이 사라진 대선이었을까

이재명 후보는 잘 갖춰진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을 후순위로 삼는 선거 캠페인을 벌였다. 이런 판단을 누가 주도했고, 주요 논리와 근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 선대위 조직에선 ‘전략본부’가 이런 판단을 하는 역할을 맡지만, 이 단위가 아닌 다른 인사들의 판단인지도 알지 못한다. 분명한 건, 기본소득 뿐 아니라, 돌봄국가책임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보장법, 전국민 고용보험 등 개혁적인 정책들을 잘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들을 전면에 내세운 선거 캠페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같은 사안에 있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시기를 2024년에서 조금이나마 앞당기는 등의 기존 진보진영의 의제들을 적극 수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은 성장정책을 앞세웠고, 후보 본인이 경제에 유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게 중도층을 공략해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공약 실무자인 나는 이런 기조에 맞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기본소득의 정당성, 효과 등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하리라 예상했고, 이를 위해 논리와 근거들을 충분히 준비했지만, 써먹을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나마 공론화된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토지보유세가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와 근거들을 정리해 제공하고, 토지보유세의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의 강남훈 위원장과 함께 명칭을 ‘토지이익배당’으로 바꾸자고 선대위에 제안하는 정도였다. 이런 상황이니 기본소득에 대해 더 할 일은 정당성을 두고 제대로 토론을 하기 위한 준비가 아닌, 후보가 공언한 기본소득 2.0이란 이름으로 발표할 계획이었던 농민, 농촌 기본소득을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범주형 기본소득을 확정하는 것도 선대위 내의 여러 조직 간의 이견으로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그 사이 내가 하는 일에서 기본소득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작아졌다. 각종 조세감면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내거나, 재정기조(특히 기축통화 논란)에 대한 논리를 준비하고, 예상 질의응답, 발행할 논평 등을 쓰는 등의 역할이 점점 컸다. 80여명의 정책본부 구성원 가운데 유일한 기본소득 담당자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업무보단 내가 소속된 ‘정책본부 기획재정팀’의 업무가 더 많아졌다. 아마 이것도 기본소득이 사라진 대선의 한 장면일 것이다.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지만, 해외 언론들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에 지속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질문도 많았고, 상세하게 답변할수록 기사에서도 충실히 다루는 게 역력하게 보였다. 해외 언론들은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그것의 의미를 ‘기본소득의 실현’이라고 해석했고, 윤석열의 당선을 ‘반페미니즘의 기치를 내건 정치세력의 세계 최초 집권’이라고 봤다. 안타깝게도 후자가 현실화됐다.

물론 현실 정치에서 기본소득 의제를 전면화하는 것은 단순히 의지와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 특히 토지보유세에 대해 기본소득론자들은 순수혜자가 많기 때문에 조세저항을 돌파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에선 순수혜가 예상되는 이들은 이런 정책의 실현을 기대하며 단일한 정치적 입장을 가지기가 어렵다. 오히려 보유세 부담이 커진 이들은 아주 명확하게 단일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다. 또한 순수혜자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받게 될 연 몇만 원의 소득은 한 해에 수억 원씩 시웃는 집값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처럼 토지보유세에 기반한 기본소득이 제대로 설득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부동산 세제를 어떻게 개혁할지, 또한 기본소득의 재원 중에 부동산 세금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러 아쉬운 점들이 많고,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서지 못한 후회가 남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가능성이 있던 정당에서 기본소득이 중요 공약이 되었고, 그 공약의 담당자였던 경험은 개인으로서 무척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이 경험을 사회화하는 게 숙제다. 기본소득 뿐 아니라 사회를 진보시킬 수 있는 정책을 현실화할 때에 여러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필력이 부족해 이 글로 그 경험을 다 표현하지 못했고, 여러 예민해질 수 있는 사안을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부족한 점을 앞으로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의 활동과 교류로 채우고자 한다.

# 기본소득은 가까워지고 있는가?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

때는 2016년 7월 서강대. “사회적, 전환과 기본소득”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아시아에서 최초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대회가 열렸다. 나는 사회운동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열리는 대형 국제 행사에 신이 났다. 독일 국회의원 카티아 키핑을 수행하기도 했고, 이 세션저 세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발표와 토론도 들었다. 브라질의 에두아르두 수플리시 의원의 선창에 따라 모두 함께 밥 딜런의 *Blowing in the wind*를 부를 때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하지만 내게 그것은 유토피아<sup>utopia</sup>였다. 그 말뜻 그대로 그것은 ‘어디에도 없는 곳’이었다.

2022년 제20대 대선.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한 후보 두 명과 ‘국민배당금’을 공약으로 한 후보 한 명이 출마한 대선. 그중 한 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한 대통령이 생기는 첫 나라가 되는 것이었다. 현실에서 기본소득은 성큼 다가와 있었다. 2016년의 기본소득은 내 맘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의 기본소득이 가까이 온 2022년, 나는 그것이 한없이 멀게 느껴졌다. 왜 그랬을까?

## 기본소득은 위로부터의 정책 시행으로 충분한 단계에 이르렀는가?

한국에서 기본소득은 오랫동안 제도 밖의 사회운동 혹은 시민운동이었다. 그러다 2016년 성남시 청년배당이 시작되면서 기본소득은 지자체 내에서 시행되는 ‘정책’으로 격상되었다. 2019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시행되고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구성, 기본소득 박람회 개최, 농민기본소득 시행, 농촌 기본소득 시범 실시 등이 숨 가쁘게 진행되면서, 기본소득은 어느덧 ‘관 주도’로 시행되는 일련의 정책 방향으로 확고히 정착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어렵게 기본소득 운동을 해왔던 연구자, 활동가 중 상당수도 기본소득의 정책 시행에 힘을 실었다.

어떤 사회적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아 물질적 힘을 얻고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단계에서 공적 기관의 정책으로 발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기본소득의 지자체적 전개가 기본소득 운동의 충실한 발전을 통해 사람들의 충분한 지지로 동력화된 결과인가 하는 점이다. 그와 함께 지자체의 기본소득 정책 시행이 역으로 기본소득 운동의 저변 확대와 심층화를 가져왔는가 하는 점이다. 두 질문에 대해서 Yes라고 답할 수 없다면 기본소득 운동은 점점 특정 인물과 관련된 것으로 축소될 것이고, 포퓰리즘 동력에 의존하게 되어 리더십이 주체가 되며 대중은 객체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2009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창립 이후 소수의 문제의식에 불과했던 기본소득은 2016년부터 못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 2016년에는 한국 사회에서의 기본소득 논의에 불을 지핀 다섯 가지 사건이 있었다. 첫째는 3월 알파고 바둑 대결, 둘째는 6월의 스위스 기본소득 개헌안 국민 투표, 셋째는 7월의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서울 대회 개최, 넷째는 4월 총선에 녹색당과 노동당이 기본소득 공약을 전면으로 내걸고 참여한 것, 마지막으로 성남시 청년배당이었다. 2016년 이후 기본소득에 관한 책과 강연 등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고 2017년 대선을 경과하면서 그를 둘러싼 논쟁도 가열되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백화제방, 백가쟁명’은 이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다. 2019년을 경과하면서 기본소득의 논의 방식은 특정 인물에 대한 찬반으로 도식화되었다. 누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기본소득의 대중적 저변, 사회적 기반, 운동적 지평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력 정당 유력 대통령 후보의 ‘대표 정책’으로 표상될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이었다 해야 할 것이다. 누구는 그 정당이 싫어서, 누구는 그 후보가 싫어서, 어떤 이는 자신이 그 정당/후보와 연관되어 비쳐지는 것이 꺼려져서 시나브로 기본소득과 멀어져 갔다.

2019년 지자체 기본소득 시행과 2020년 총선 및 2022년 대선을 경과하면서, 시민운동과 사회운동 내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언급이 현저하게 줄었다. 2020년 기본소득당과 기본소득국민운

동본부의 출범은 그동안의 기본소득 운동의 조직적 성과인 면이 있지만, 기본소득 운동을 ‘게토화’하는 결과를 낳지 않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 이슈 정당’의 존재는 한국의 정치 풍토에서는 다른 정당들이 그 ‘원 이슈’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 같다. 정당의 연대는 모름지기 서로 공통분모를 이루는 특정 정책의 연대가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그 정당의 ‘모든 것’과의 연대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기본소득국민운동은 기본소득의 공간적 확장과 저변 확대에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기존의 기본소득 운동과의 연속성이 결여된 분절적인 것이었고, 기본소득 운동을 특정 정치인과 관련해 연상하는 대중의 이해 방식을 오히려 강화해 줄 수밖에 없었다.

기본소득이란 용어와 기본소득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늘었지만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가져올 주체와 새로운 사회관계의 형성, 각개약진의 신자유주의적 인간성의 변화와 새로운 공동체적 생활 양식의 함양의 계기는 전혀 없이, 차기 대통령 선거와 관련되어 호명되기에 이른 기본소득 운동은 과연 이제 어떻게 ‘운동’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 기본소득의 설명 방식이 올바른 것이었는가?

기본소득이 멀게 느껴지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대선 기간 기본소득 논의의 양상 때문이다.

첫째, 기본소득 논의가 ‘액수 공방’으로 축소된 것 같은 느낌이다. 1인당 연 100만 원(월 8~9만 원)이 옳은 것인가, 1인당 월 65만 원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성인 1인당 월 150만 원이 옳은 것인가? 어차피 대통령이 안 될 것이므로, 당장 지키지 않아도 될 약속이므로 최대한 높은 액수를 부르는 엔터테이너가 등장하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세금 제도와 사회의 변화 없이도 시행가능한 최저의 액수를 부르는 상황이 된 것은, 대선 기간 기본소득 논의의 지형이 얼마나 뒤틀려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실례이다.

특히 국민 얼마, 청년 얼마, 노령 얼마, 농촌 얼마 식으로 액수를 각각 정하고, 그래서 농촌에 사는 청년은 국민+청년+농촌 기본소득을 합친 얼마를 받게 된다는 식의 논리 전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것은 기본소득을 ‘수당’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특정 연령, 특정 지역에 한정된 범주형 기본소득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일 뿐인데, ‘국민 기본소득’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그와 동시에 청년/노령/농촌 기본소득이 별도로 시행되는 것은 괴상하다. (농민기본소득은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되는 참여소득이므로 보편적 기본소득과 공존할 수 있다.) 더구나 ‘국민 기본소득’ 액수

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 지급 총액을 청년, 노년, 농촌 인구에게 늘리기 위한 편법으로 기본소득의 논리가 동원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증세 없이 기본소득을 ‘시작’할 수 있다는 주장도 그 자체로 틀린 것은 아니다. “마트에 있는 맛보기 음식처럼 기본소득을 증세 없이 소액으로 지급해 국민께서 효용성을 체감한다면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증세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대통령 후보는 말했다. 낮은 수준의 부분기본소득 시행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의미 있는 액수의 기본소득, 충분한 기본소득으로 발전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다. 하지만 그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서 기본소득은 점점 뒤로 숨었다. 기본소득이 주요 공약인지도 나중에는 희미해졌다. 기본소득이 숨으면서 증세도 함께 숨었다. 증세가 숨었다는 것은 ‘사회적 전환’에 대한 논의도 숨어버렸다는 뜻이다.

기본소득과 생태배당, 토지배당 등 성격이 다른 제도를 한데 섞어 기본소득의 전체 지급액을 표시하는 설명 방식도 피해야 한다. 명심할 것은 배당을 하려고 탄소세를 걷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탄소세를 올리기 위해서 배당을 하는 것이다. 배당은 목표가 아니라 철저히 수단이며 목표는 탄소 배출 감소이다. 따라서 탄소세에 기초한 생태배당은 지급 방식이 기본소득의 5대 원칙을 충족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기본소득 모델이라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탄소세와 탄소배당의 종식이 그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배출되는 탄소가 없어져 탄소세도 없고 따라서 탄소배당도 없는 세상이 이 모델의 최종 목표다.

토지보유세-토지배당은 없앨 수는 없겠지만 역시 줄어들수록 좋은 것이다. 강력한 토지보유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려야 한다. 토지보유세를 올리기 위한 방법론이 토지배당일 뿐이다. 토지초과이득세로 기본소득 재원을 삼자는 주장은 더 황당하다. 토지초과이득은 생기지 않거나 생기더라도 아주 적게 생겨야 하고, 토지보유세가 실효성 있게 작동한다면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에 반하여 데이터 배당은 커질수록 좋을 것이다. 데이터 사용에 따른 편익도 증대하면서 빅데이터 과세도 늘어난다면 좋은 일이다. 결국 성격이 다른 여러 개의 재원을 섞으면 전체 액수를 키워 보일 순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된다. 현금 수급액을 늘리기 위해서 탄소를 더 배출하거나 부동산 투기가 더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니겠는가?

기본소득은 사회적 총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물질 생산량과 에너지 소비를 줄여 탈성장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소득불평등은 탄소불평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초부유층일수록 지위재 소비와 과소비로 인한 탄소 배출이 과다하고 이 탄소 배출의 격차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일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런데 기후위기 시대에 오히려 기후운동가들 사이에서는 탄소세-탄소배당의 지지가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적 경직성으로 인한 탄소세-탄소배당 모델에 대한 오해가 근본적 원인이지만, 앞서



언급한 잘못된 기본소득 설명 방식이 그 오해를 부채질하는 면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탄소세-탄소배당을 지속적인 기본소득 재원이라거나 충분한 기본소득으로 나아가기 위한 재원으로 설명한다면, 기본소득 운동가들은 ‘기본소득 지상주의자’처럼 보일 것이고 기후정의운동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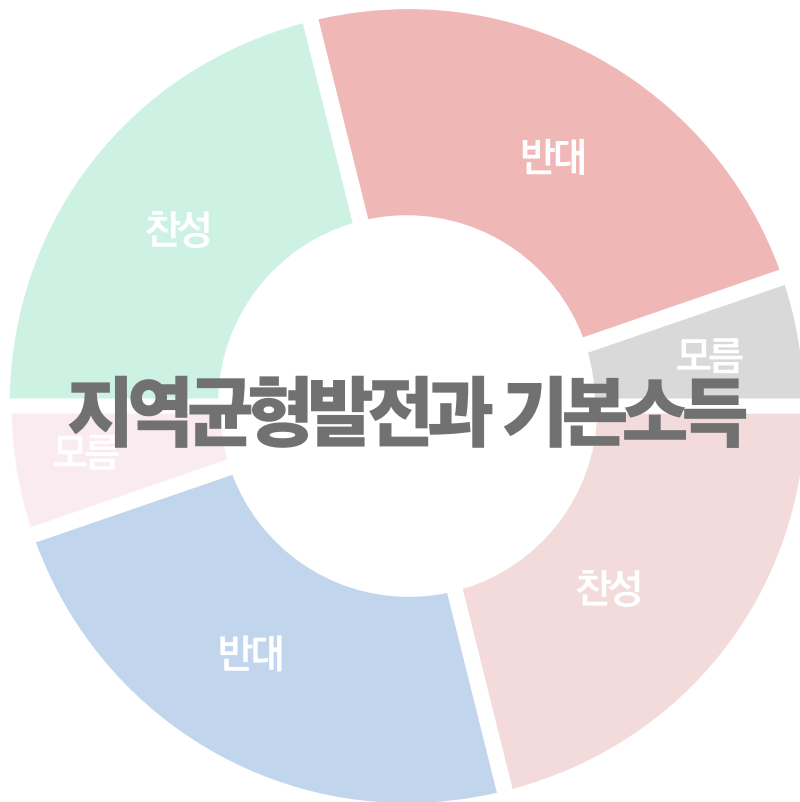
### 기본소득운동은 조급성 버리고 긴 호흡 준비해야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매우 강력한 헌법 기관이다. 하지만 리더십 교체를 통한 포퓰리즘적 변화 전략이 과연 지속성 있고 효과적인 사회적 전환의 전략인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그런 방식을 경험했던 중남미의 많은 나라들에, 의미 있는 사람의 변화, 관계의 변화, 제도의 변화가 수반되었는지, 수반되었다 하더라도 후속 리더십 아래에서도 지속되었는지, 필자는 알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본소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기본소득은 무엇인가? 기본소득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본소득은 어떤 사람의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가? 기본소득은 어떤 생활 양식을 만들려고 하는가? 기본소득은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가? 그에 대한 진정한 질문과 단단한 주체 형성 없이는 기본소득은 한 번 유행하다 사라지는 아이디어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특히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1.5도 상승이 7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기본소득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기본소득은 기후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가? 기본소득은 어떤 정책과 결합되어야 탄소 배출 감축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을까? 기본소득은 생태적 전환을 위한 수단인가, 총수요 진작을 위한 경제 정책인가? 이 주제가 부각될 때, 탄소세-탄소배당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 많은 사람이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BasicIncome: 논점



## [기획자의 말]

이번 호 논점의 주제는 ‘지역균형발전과 기본소득’이다.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의도와 달리 성과는 긍정적이지 않다. 지역소멸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지 오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기본소득 방식을 활용하려는 사례들이 시도되고 있다. 지역화폐와 기본소득, 농촌·농민 기본소득이 대표적이다.

첫 번째 글은 지역화폐를 꾸준히 연구해오신 양준호 교수님께 보내주셨다. 기본소득을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풀어주셨다. 두 번째 글은 박경철 박사님은 지역 소멸을 막고 실질적인 지역균형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농민·농촌 기본소득의 가능성과 의의를 짚어주셨다. 세 번째 글은 이관형 회원님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정선군은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방식의 기본소득을 활용하여 지역소멸을 막고자했던 절박함이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 과정에서 좌절되는 과정과 정선군민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해주셨다.

이상 속의 기본소득과 달리 현실에서의 기본소득은 다양한 방식으로의 변형을 통해 다양한 목적들의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지역균형 발전과 기본소득’이라는 이번호의 논점을 통해 지역소멸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가능성에 대해 성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코로나19 하에서의 기본소득, 지역화폐, 그리고 지역순환경제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 소장,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에 직면한 세계 각국은 지금 ‘기본소득’으로 불리는 정책 개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영국 우파 정치세력의 수장이라 볼 수 있는 보리스 존슨 총리가 코로나19 대책으로 제기된 기본소득에 대해 ‘꼭 고려해야 할 정책 아이디어 중 하나’라며 강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기본소득 제도에 관한 관심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물론, 시장주의적 성향이 매우 강한 영국이 경제위기에 직면했다는 이유로 금세 기본소득을 제도화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집단면역의 구축’을 운운한 바로 얼마 후에 자기 자신이 코로나에 감염되어버렸던 존슨 총리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보수 우파가 정권을 잡은 영국에서조차 기본소득이 도입될지도 모른다는 기대 또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듯,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의 기조가 시장주의와 성과주의에 경도되어 왔던 미국과 영국 등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성향이 매우 강했던 나라들에서조차 기본소득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이는 정부 재원으로 국민들의 소득을 보전해주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팬데믹 경제위기 하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아주 절박한 정책적 문제의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급속히 냉각되기 시작한 민생,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

원금을 지원했다. 이를 계기로 이와 같은 정부가 지원하는 대국민 현금 지급 정책을 상시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기 시작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과 논쟁은 학계 또는 시민사회 영역을 넘어 지금은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의 김종인 전 대표가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기본소득을 향후의 핵심 정책 어젠다로 내세우면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기본소득 담론을 정치권에서는 가장 먼저 대중화해온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의 정책적 노력과 그 선도적 문제의식이 기본소득 논쟁의 정치적 확대재생산에 기여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듯, 국내외 정세 전반을 고려해서 볼 때, 지금은 기본소득의 시대임에 틀림없다. 기본소득과 같은, 고통에 허덕이는 국민들에 대해 국가가 현금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고서는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든 것에 틀림없다.

## 기본소득의 지역화폐화

그런데, 이와 같은 기본소득, 즉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또 동일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Seed Money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를 지역화폐로 지

급하자는 주장과 그 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 이는, 기본소득 지급의 필요성은 고조되고 있고,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또 유통되는 지역화폐가 그 지역 중소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려 고용도 늘어나고 나아가 부가가치세까지 늘어나게 하는 지역경제적 선순환을 이뤄냈다는 객관적 사실을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국내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이와 같은 기본소득의 지역화폐로의 지급을 가장 먼저 시도했다. 이러한 배경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경기도는 지난 9월 11일에 제2회 기본소득박람회의 국제컨퍼런스에 ‘기본소득, 지역화폐,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세션을 편성하여 관련 논의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판’을 깔아주었다. 우연히도 지역화폐를 연구해온 필자가 그 세션의 좌장을 맡았는데, 발제자였던 스페인의 수산나 마틴 벨몬테(Susana Martin Belmonte) 박사가 소개한 기본소득의 지역화폐화 사례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북동부 Eix Besos의 빈곤지역 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B-Mincome’으로 불리는 기본소득의 25%를 그 지역에서만 발행, 통용되는 REC(Real Economy Currency)라고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기본소득을 통해 빈곤 주민을 구제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 기본소득+지역화폐=지속가능한 지역 순환형 경제

그곳의 기본소득은 2018년 9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기간은 약 1년 정도다.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한 것부터 관련 여러 정책적인 기획들을 주관한 것은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 등과 같은 시민사회 단체와 이들의 의견을 존중해온 바르셀로나 시의회였다. 빈곤지역 600여 가구에 대해 매월 1,000 유로(약 140만 원)를 지급해오고 있는데, 그 중 25%는 13개월 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한화로 약 27.3억 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량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적은 돈이 지역 내에서만 돌고 도는 ‘종자돈’으로 유통되었다. 이와 같은 기본소득의 지역화폐로의 지급 실험은 투입 예산이 매우 적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즉 골목상권 승수효과는 19.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로화의 무려 5배나 높은 수치임을 주목해야 한다. 그간 지역경제적 차원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피폐화 일변도를 보여 왔던 빈곤지역 Eix Besos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가 접합된 정책적, 시민실천적 대응을 계기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골목상권의 영세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늘고, 그들에 의한 고용이 늘어나며, 나아가 이 루트로 인한 주민 소득 증대와 기본소득 지급이 맞물리면서 빈곤 주민들의 실질소비능력이 탄탄해졌다. 그 결과, 다시 골목상권이 활성화되었고 또 그 지역의 생산자들의 생산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스페인 최악의 빈곤 지역에, 필자가 그간 강조해온 지역 ‘내발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 즉 ‘지역순환경제’가 구축되고 있다. 이렇듯,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조합은 놀라운 성과를 발휘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빈곤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고 또 그 지역경제 역시 활성화시키게 되는 맨 처음의 과정은 공적자금 지원에 의해 담보되는 것이지만, 그 후에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일련의 지역경제 활성화 과정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의해 ‘살아나기’ 시작한 지역경제의 자체적인 회복 루트에 의해 담보되었다는 점이다.

## 우리 사회에서의 가능성

바르셀로나 Eix Besos 지역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는 더 많은 사례들을 폭 넓게 검토해봐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접합이 초래하는 효과를 더욱 탄탄하게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Eix Besos 지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그 ‘규모’가 차원이 다르다. 전 국민 또는 전 지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것을 계획하는 우리나라의 기본소득 구상과 무려 그 발행량이 스페인 REC에 비해 무려 100배 이상이나 많은 우리나라 지역화폐 정책이 조합되면, 스페인 사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지역경제 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 지금의 지역화폐가 경기, 인천, 군산, 포항 등지에서 상당한 수준의 지역경제 승수효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도를 구상하고 또 이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기도의 정책 대응은 정책 현실들에 대한 매우 정확한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시민화폐(Citizen Currency)로서의 지역화폐

단, 중요한 과제가 하나 있다. 세션 발제자 수산나 마틴 벨몬테 박사는 지역화폐의 영어표기를 ‘Local Currency’가 아닌 ‘Citizen Currency’로 사용했다.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이기 이전에 그 정책 프로젝트 전반에 시민이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사실 필자 역시 그간 지역화폐는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화폐이어야 지역화폐의 발행량도 더 늘일 수 있게 되고 또 그 유통속도 역시 더 높일 수 있음을 강

조해왔다. 그는 스페인 북동부 지역 실험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정책이 ‘Co-Production’에 의해 기획, 추진, 관리된 것에 의해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 지역화폐의 본질이 화폐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더 높이는 것에 있다는 점, 시민의 참여와 관심이 지역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점, 나아가 민과 관 간의 협치가 정책이 가야 할 이상형<sup>ideal type</sup>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시도에도 ‘Co-Production’은 반드시 키워드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사람들의 ‘필요’를 매개하는 지역화폐

또, 기본소득이 갖는 본질적인 특징은 보편성과 무차별성이다. 모든 이들의 생존을 위한 ‘필요’에 맞춰 보편적으로 또 무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이와 같은 보편성과 무차별성을 전제로 하는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면, 지역화폐 역시 그 난관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른바 ‘대중화’를 쉽게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시민의 대다수가 지역화폐 제도를 알고 또 그 의의에 관해 이해하게 된다는 것. 그렇게 될 때, 지역화폐의 발행량도 또 유통속도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다. 이는 사실 지역화폐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시민실천적 조건이기도 하다. 해서, 최근 들어 활성화되기 시작한 국내 지역화폐 정책의 성공적인 제도화를 위해서라도 기본소득은 그에 접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한 가지 중요한 과제가 남는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기본소득은 노동에 따른 소득이 아니라 주민의 생존을 위한 ‘필요’에 따른 소득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실 지역화폐 역시 주민들 간의 ‘필요’를 매개하는 통화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민 개인이 상점가에서 자신이 충전, 구입한

지역화폐를 쓰고 나면 그 돈은 법정화폐로 환전되어 소진되고 말지만, 지역화폐의 원래 기능은 주민 개인들 간의 거래를 매개하는 것인데 특히 시장에서는 확보 또는 구입할 수 없는 사회 서비스, 즉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의 ‘필요’를 화폐 지급을 통해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에 있다. 이와 같은 이상형Ideal Type을 갖는 지역화폐가 기본소득과 접합될 때, 생존권 소득을 통한 국민의 ‘필요’ 충족은 더욱 다채롭고 동학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또 기본소득의 원래 목적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지역화폐가 주민들 개인 간의 서비스 거래를 매개하는 수단으로도 그 모습을 진화할 것을 기대해본다.

# 지역균형발전과 농민·농촌 기본소득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1. 도시 건설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역 불균형문제를 화두로 정권을 잡은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지역 불균형문제가 그 전에도 심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문제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수반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간주하며 사람들은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우리사회의 핵심적인 불평등 문제인 지역 불균형의 문제를 정책의 전면에 내세워 이슈를 선점했다. 대선 기간에는 수도를 옮기는 과감한 공약을 던졌다. 국민들의 관심은 커졌고 논쟁은 가열됐다. 거의 가망이 없었던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대권을 쥐었다. 타고난 승부사, 무모하다는 그의 공약이 없었다면 그는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없었을 것이다.

지역 불균형문제는 국가의 존망을 가를 수 있는 핵심 중의 핵심문제이다. 현재와 같이 서울로 대변되는 수도권 일극 중심의 국가 체계로는 국가의 성장과 사회통합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어 행정, 법률, 재정을 뒷받침했다. 수도를 이전하는 그의 공약은 헌법재판소의 모호한 판결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고 이후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그래도 세종특별자치시라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만들어졌고 전국에 10군데의 혁신도시가 만들어졌고 수도권에 있는 약 120여 개의 공공기관이 이들 도시로 이전했다.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이 다져진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보수정권 9년 동안 약화됐던 국가균형발전을 다시 되살렸다. 이명박 정부에서 ‘균형’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바꾼 것을 다시 원래 이름으로 되돌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다하지 못했던 정책들과 새로운 정책을 추진했다. 추가 공공기관 이전, 지역균형 뉴딜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도로, 철도, 항공 등 지역균형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정부의 예타 사업을 면제했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SOC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수도권 경제권에 맞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고 대전·세종·충남·충북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는 메가시티 사업을 추진했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현재 진행중에 있다.

## 2.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역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기치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2002년이니 2022년 현재

까지 약 20년 동안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국정의 핵심과제로 추진되어 왔다. 물론 그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정책 자체를 없애려는 분위기도 있었다. 하지만 역대 정권들이 지역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의 열망과 기대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지난 20년간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어땠을까? 과연 성과가 있었을까? 물론 성과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조성되어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10개의 혁신도시(2021년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어 현재 혁신도시는 11개임)가 만들어져 지역경제의 핵심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 외 자치분권과 지역재정권 확대 등의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정책이 과연 성과를 거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 목표는 과도하게 밀집된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이었다. 수도권 과밀은 교통문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환경, 교육, 에너지 등 많은 부문에서 문제를 발생시켜 인구 집중으로 인한 성장보다는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들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분산 정책을 추진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보면, 2019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84만 9,861명 중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인구가 2,592만 5,799명으로 전체 거주 인구의 50.001%를 차지했다. 이들 3곳을 제외한 비수도권 14개 시도 인구는 2,592만 4,062명으로 수도권 인구보다 1,737명이 적었다. 우리나라 인구통계 사상 처음 발생한 일이었다. 문제

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20년간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결과물이 이렇다면 지금과 같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면 할수록 수도권 인구집중은 더욱 심할 수밖에 없다. 인구뿐만 아니다. 2019년 기준, 수도권은 전국 GRDP의 52%, 카드 사용액의 72%, 1,000대 기업 본사의 75%, 전국 대비 가구소득의 54.%, 종합소득세의 67.9%를 차지한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역설, 정책 담당자들은 인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이러한 정책 실패의 결과를 만들었다.

### 3. 인구 감소는 자연스런 현상

통계청 인구전망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2028년 5,195만 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해 2050년에는 4,774만 명, 2067년에는 3,929만 명으로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2000년 인구가 4701만 명, 1980년 인구가 3,812만 명이니 우리나라 인구는 2028년을 정점으로 정규분포의 감소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생각은 되지만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 추세라면 2117년에는 서울과 주변 일부만 남고 지방이 거의 소멸되는 극단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인구가 곧 국력이라는 말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가 많다보니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다 보니 삶의 여유와 여백이 없다. 사람 사는 세상이 너무 각박하다. 한정된 자원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좁은 땅에서 편을 갈라 싸우고 미워한다. 개발이 난무하



고 환경이 지나치게 파괴되고 있다. 무엇보다 많은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산업화된 농업이 발달해 농촌은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어렸을 때 대부분 야산이었던 곳들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개간이 되었고 함께 놀던 들판도 개발이 되거나 논밭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전에는 자연에 가까웠던 산과 들이 이제는 농경지와 개발지로 바뀌면서 자연스런 농촌의 모습은 사라졌다. 도시의 늘어나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농촌의 산과 들이 급속하게 파헤쳐진 것이다. 산업화된 농업이 주류를 이루다 보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화학비닐과 농약, 비료 등이 남용되고 조금 한적한 곳에서는 축사들이 우후죽순 들어서 악취와 수질오염을 악화시키고 있다. 겨울철에 그나마 농촌다움의 푸릇함을 유지했던 밀과 보리 등 식량작물은 시장경쟁력을 잃어 들녘에서도 자취를 감춰 겨울철 우리나라 농촌의 풍경은 황량하기 그지없다.

농촌에서 시작한 인구 감소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강화, 극심한 사회양극화의 지속, 대외 시장개방이 지속되는 한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고 어찌면 당연한 일이다. 이런 극단적 신자유주의체제와 승자독식 구조에서 아이를 낳아도 희망을 줄 수 없고 오히려 개인의 삶에 고통만 준다면 아이를 안 낳는 것은 자연스런 것이다. 우리나라 출생률 하락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파업이자 불행은 곧 후속세대 만들기의 거부와 포기이다. 현 세대는 지금과 같은 극단적 경쟁과 불평등의 사회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 수 있길 바라지 않는다.

중격차사회에서 인구 감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인구 감소도 불균형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서부터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별 인구소멸 위험지수 (20~39세 여성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46.1%)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또한 105곳 중 92.4%인 97곳이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최근 소멸위험지역은 일부 낙도지역이나 농어촌지역뿐 아니라 도청 소재지, 산업도시, 광역 대도시까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네이버 지식사전)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자체 개발한 인구감소지수를 바탕으로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선정된 지역이다. 인구감소지역의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들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들 지역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2년부터 연간 1조 원, 향후 10년간 총 10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해 이들 지역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한 개 지자체에 최대 16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되 성과에 따라 차등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 4. 지역이 소멸된다는 의미

최근 들어 지방소멸, 지역소멸이라는 용어가 정치계와 학계에 도배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다

#### 5. 농민·농촌 기본소득의 의미

이미 농어촌의 현장에서는 농어민수당·농민 기본소득이 실시되고 있다. 농어민수당, 농어민

공익수당, 농업인수당, 농민기본소득 등 이름은 다르지만 2019년 전남 해남부터 시작된 농민수당은 전국으로 확대되어 올해부터는 농어촌 지역이 있는 9개 광역자치단체 모두에서 농어민수당·농민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농어민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는 오는 6월부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연천군 청산면 주민 모두에게 월 15만원의 농촌기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어민수당·농민(농촌)기본소득이 도입될 당시 용어의 개념, 지급 범위, 지급 액수 등 지자체에서 많은 논쟁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남쪽 끝에서 시작된 농어민수당의 열풍은 마른 쉼에 불이 붙듯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 시작은 농어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농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국가와 사회가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농어민수당·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이 주장된 측면도 있지만 사실 농어민수당·농민기본소득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한 데에는 지역의 인구감소가 결정적인 이유다. 지자체 차원에서 보면 인구감소는 이미 공포 수준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에 대한 중앙정부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 예를 들어 농가인구가 감소해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관리할 인구가 줄어드니 더 효율적으로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현재 전체 인구 가운데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4.3%이지만 이를 더 줄여 유럽수준인 1~2%까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인구 감소로 국가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자신의 자리는 보존되기 때문에 인구 감소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지자체 공무원은 다르다. 인구 한 명, 한 명이 감소함에 따라 지자체 교부금이 줄어들고 지자체 조직도 줄어들어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자신의 문제로 인식된다. 농어민들의 농어민수

당·농민기본소득 주장에 지자체가 빠르게 조응한 것은 이러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농어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사업 방식으로는 지역에 희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농민·농촌 기본소득처럼 농민과 농촌주민에게 직접 지불하는 형태로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다.

## 6. 지역균형발전, 농민·농촌기본소득으로부터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국가균형발전은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그 실질적 성과는 긍정하기 어렵다. 세종시와 10개의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입지로 어느 정도 도시의 외형을 갖췄지만 수도권 인구의 유입을 촉진한 게 아니라 주변지역 인구를 빨아들이는 빨대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소멸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도시개발과 대형 인프라 건설을 통한 균형발전은 필연적으로 수도권 경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우리 국토의 맨 아래에 있는 농어촌부터 복원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국토의 실타래를 자 뿌리인 농어촌이 말라가는데 그 과실인 도시가 성할 리가 없다. 도시의 부동산, 환경, 교통, 교육 등 각종 문제의 근원은 농어촌의 파괴에 있다. 더욱이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변화로 식량위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을 겪으면서 밀집된 공간의 위험성과 농어촌과 같은 자연공간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지만 농어촌에서의 감소속도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된다면 결국 우리사회는 멸절의 시대를 맞이할 지도 모른다. 김종철 전 녹색평론 발행인께서 생태, 농사, 일자리를 위해서는 농민기본소득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이유도 그러한 연유다. 기본적

소득보장 없이 농민·농촌의 지속은 어렵다.

도농 격차, 인구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이제까지 수많은 정부사업이 실행되었지만 지역에 희망이 있다는 얘기는 없고 소멸에 대한 공포만 높아가고 있다. 사업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팬데믹 시기 제1차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잠시나마 지역의 경제와 사회가 어떻게 활성화되고 통합되는지 경험했다. 이제 이러한 경험을 체계화하고 지속시켜야 한다. 농민·농촌에서부터 기본소득을 실시해 이러한 효과를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농어촌에 사람이 있어야 식량을 생산하고, 홍수를 막고, 산불을 끄고, 생태를 보존하고, 문화와 공동체를 지킨다.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생명의 싹을 틔우듯 기본소득도 국토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 희망의 싹을 틔어 올려야 한다. 그런 날이 꼭 오리라 믿는다.

# “정선군민 기본소득”은 도입되어야 한다

이관형 계간《기본소득》편집위원

정선군민 기본소득은 지난 3월 3일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사보위)의 검토 결과 ‘재협의’를 통보 받았다. ‘재협의’는 말 그대로 하자면 다시 협의하는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한 도입안에 대한 사실상의 ‘불가’ 판정이다.

사보위의 검토의견은 ‘재협의’ 판정이유를 다음과 같이 적시한다.

1) 정선군민 기본소득은 기존 인구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서의 논거가 미비하며 그 효과도 불확실하다.

2) 재원과 관련하여 재원의 안정성이 부족하다.

3) 기초수급자를 지급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소득역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제도조정위원회(‘22. 2. 11.)의 의견에 따라 1) 사업효과 논거 보완, 2) 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 3) 기초수급자 대책 마련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재협의 판정은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판정이라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기본소득이 그간 우리 사회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그런 만큼 제도 도입과 관련한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했으나 기존의 과정을 무화 내지 퇴행하는 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 글은 먼저 2) 재원의 안정성 문제, 두 번째로 3) 기초수급자 배제 문제를, 끝으로 1) 사업효과와 불확실성 문제의 순으로 이 검토 결과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 1. 재원의 안정성 문제

정선군민 기본소득은 약 36,000명의 정선군민 모두에게 연간 20만 원을 보편적,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온전한 형태의 기본소득 제도를 말한다. 소요예산은 약 72억 원<sup>1)</sup>이다. 재원은 군이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이다. 정선군은 강원랜드 전체 주식의 약 5%를 보유하고 있다. 정선군은 이를 통해 매년 약 100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아 왔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2년간 강원랜드가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개장 이래 최초로 2020년과 2021년 배당을 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는 데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보위가 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문제 삼은 것은 당연할 수 있다. 사보위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재원이 없으면 제도 도입은 어려울 것이다. 변수는 여

1) 2019년 기준이며, 최근(2021) 인구가 더 줄어 실제 소요예산은 70억 원 이하이다.

표. 2015~2019년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주식배당금	10,276	10,381	10,494	9,605	9,663

\* 정선군 보유주식수: 10,736,543주(2019년 12월 31일 기준)

출처: 정선군 내부자료

전하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를 속단할 수는 없다. 주식시장도 강원랜드에 대해 아직은 기대반, 우려반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회복을 기대할 만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강원랜드 산하 하이원 워터월드가 4월 15일부터 정상 운영을 시작했다. 카지노 역시 정상 운영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따라 주가도 우상향 중이다.

정부(중앙이든 지방이든)든 민간이든 정책 수립은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선군의 기본소득 도입도 이런 방향에서 나온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 특이적 상황을 잣대로 (그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정책 도입 자체를 문제 삼는다면 현재 수립된, 무수한 정책 또한 똑같이 재고되어야 한다.

정선군은 제도를 준비하되, 코로나19 상황의 추이에 따라 제도를 시행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없다. 아무튼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보위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고 있고,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라는 측면을 고려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부연컨대, 정선군은 예상 배당금(약 100억 원)에서 기본소득 소요예산(약 70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약 30억 원)을 기금으로 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재원의 안정성 확보와 함께 향후 지급액의 확대까지를 도모하고 있다. 앞으로 ‘재협

의’에서는 해소될 수 있는 문제여서 더 이상의 상론은 하지 않는다.

## 2. 기초수급자 배제 문제

이 문제는 심각하다. 기본소득 제도 도입의 ‘원천 봉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국기법)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만큼 보전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수급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다. 사실상 국기법에 의한 수급자는 기본소득을 받을 수가 없거나 기본소득 수급에 따른 실익이 전혀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막는다면 어떠한 기본소득 제도도 도입을 할 수가 없다.<sup>2)</sup>

앞서 이 글은 사보위의 이번 ‘재협의’ 판정이 기본소득 도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여기서 ‘원점’은 2015년 서울시 청년수당과 연이은 성남시의 청년배당 도입과 관련한 일련의 마찰상황을 가리킨다.<sup>3)</sup> 이 때 여러 쟁점이 제기되었는데, 과연 이들 제도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해당되는 것인지 즉 사보위와의 협의가 필

2) 국기법 상의 생계급여기준(583,444원, 1인 가구 2022년 기준)을 넘어서는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는 한 그러하네, 생계급여기준을 상회하는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은 국기법의 해체 내지 기본소득 제도로의 변경을 의미한다. 즉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3) 이에 대해서는 서정희(2018).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기본소득 실현 가능성에 대한 법적 고찰”. 『사회복지정책』, 45(4), 171~206을 참고하라.

요한 것인지 하는, 근원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 아울러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에게는 청년배당이 무용지물이라는 보도가 나온다.

결국 서울시는 복지부와 타협을 통해 본안에서 후퇴한 제도시행에 나선다. 반면 성남시는 강력 반발하며 지방세 교부금 삭감과 같은 불이익을 감수할 각오로 제도 시행을 감행한다. 이 와중에 여러 송사가 진행되었으나, 정권교체(2017) 이후 복지부가 조건부 수용을 택함으로써 모든 상황은 일단락하며, 제도는 지속된다.

저간의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사보위의 검토결과는 그래서 실망과 우려를 낳는다. 기본소득 도입은 여러 허들들을 넘어왔다. 그런데 그 허들들을 다시 넘으라는 것이다. 이 문제를 제기한 이상 ‘재협의를’ ‘허수고’일 것이다. 성남시 청년배당 도입과정에서와 같은 ‘마찰상황’으로 가든지 제도 도입을 포기하든지 해야 한다.

문제는 복지부가 왜 지난 과정을 도외시키고 과거로 회귀하는 판정을 내렸나에 있을 것이다. 성남시 청년배당부터 경기도의 기본소득 시리즈, 즉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본소득은 현행 법 체계에서는 기초수급자 배제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런데 각 제도의 도입 때마다 잡음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 도입되었다. 왜 이런 기준이 정선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

다른 것은 논외로 하자.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정선군민 기본소득과 무엇이 다른가? 전자는 실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답할 것인가? 그렇다면, 정선군민 기본소득도 실험이라고 하면 수용할 것인가?

복지부는, 기초수급권자 배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인정해준는데 그치지 않고, 국기법을 우회하여 기초수급자에 대

해서도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다. 복지부와 경기도의 협의에 의하면, 기초수급자에 대한 일시금 지급은 일생 동안 한 번 받는 것으로서 정기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협의를 통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기초수급자도 작년부터 기본소득을 지급 받고 있다. 국기법 등의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공적이전소득이 ‘정기성’을 기본 요건으로 규정한 만큼, 기초수급권자인 청년에게는 청년기본소득을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그동안의 걸림돌을 제거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도 정선군민 기본소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선군민 기본소득은 분할지급이 아니라 일 년에 한 번 지급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이를 분할지급으로 바꾸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일시금을 준다고 해도 어차피 평생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성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복지부로부터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조건부이든 아니든) 인정하고, 기초수급자에게도 기본소득수급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수용했다는 데 대해서 높게 평가한다. 그런데 왜 다시금 정선군민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 배제 문제를 제기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다시 말하지만 기본소득제도는 현행법상 기초수급자 배제 문제를 피해갈 도리가 없다. 그것을 잘 알고 있고, 이 문제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을 수용해온 복지부가 이것을 계속 제기한다면 마찰 역시 피해갈 도리가 없다.

### 3. 사업효과와 불확실성 문제

정선군은 다른 농어산촌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겪고 있다. 정선군은 최

근 인구정책을 바꾸었다. 인구유입정책에서 인구 유출방지로 전환한다. 인구유출방지는 정선군이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려는 여러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이에 대해 사보위는 과연 연 20만 원의 기본 소득 지급이 인구유출방지책이 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나아가 청년층의 유출이 심각함을 고려하여 차라리 이들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후한 액수를 지급하는 정책수립이 어떻겠냐는 지적을 덧붙인다. 일리 있어 보이는 지적이다.

연 2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이 인구유출방지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논외로 치자. 그런데, 청년으로 지급범위를 좁힌다 해도 ‘상대적으로만’ 후한 액수이지 청년의 유출을 막을 정도로 후한 액수(그것이 정확히 얼마일지는 몰라도)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정선군의 인구정책 변경에는 그간의 경험과 고뇌가 담겨 있다. 정선군은 청년층의 인구유출을 막을 수 없다고 본다. 청년이 도시로 몰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로서 전국적인 차원의 구조변화 없이는 이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살고 있고 살아갈 사람들에게 살기 편한 고장을 만들어서 이들의 유출이라도 막아보자는 것이다. 그것이 인구정책 변경의 이유다.

이런 의미에서 사보위는, 정선군에서 말하는 인구유출방지책으로서의 기본소득 도입취지를 오해한 듯하다. 다시 말해 정선군의 인구유출방지는 당장의 유출을 막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끝없는 유출은 막아보자, 마지노선은 지켜보자는 의미다.

정선군은 교통여건으로 인해 귀농, 귀촌을 하려는 사람에게도 정선이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이 있다면, 우선은 사는 사람들이 사는데 일조할 수 있고, 귀농·귀촌자에게도 하나의 메리트가 생기는 것 아니

냐는 것이다. 별 메리트가 없는 정선이지만, 정선군민 기본소득은 정선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 좋은 의미의 차별점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정선군은 이런 자신들의 상황을 ‘절박함’이라고 표현한다.

마스다 히로아는 『지방소멸』에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을 다룬다. 많은 부분에서 그의 논지에 동의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지적은 새길 만 하다. “지방소멸 문제는 전국적인 차원의 문제라서 지방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소멸위기의 당사자인 지방이 손을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될 것이다. 지방은 자기 지방의 특색을 살린 정책들을 개발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우리에게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와 관련하여, 사업효과가 ‘확실한’ 정책이 있는가? 있다면, 지방의 인구감소 내지 유출은 왜 여전히 현재진행형인가? 이에 대해 정선군과 같은 소규모 지자체에서 도입할 수 있는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가?

당장은 몰라도 장기적으로 정선군민 기본소득은 정선군이 바라는 인구유출억제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인구유출대책 중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정선군민 기본소득은 분기당 지급한다면(실제 안은 연 1회 지급으로 되어있음) 약 18억 원이 일시에 풀리는 효과를 낳는다. 이 효과는 알래스카 영구기금의 사례를 보았을 때 약 3개월간 지속된다. 나아가 연대와 협동, 공동체에 참여 등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끝으로 하나만 첨언한다. 정선군은 폐광 이후 전성기에 비해 인구가 1/3 이하로 급감하는 격변을 겪는다. 강원랜드 주식 5%를 정선군이 소유하게 된 데는 이런 위기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지난 투쟁이 있었다. 소위 3·3투쟁이 그것이다. 정

선군은 정선군민 모두의 힘으로 획득한 이 재산의 위탁관리자일 뿐이다. 정선군민 모두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니 정선군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이 순리다. 어떤 정책이든 정책 대상으로 그 수혜 범위가 한정된다.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은 기본소득이 거의 유일하다. 정선의 경우, 사회 공학적인 계산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이다





# 다시 올 ‘기본소득의 시간’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인터뷰어

이관형

계간《기본소득》편집위원

서로 안지는 오래 됐으나, 공백이 크다. 내가 아는 한, 안효상 이사장은 개인사를 드러내는 성격은 아니다. 물론면 대답을 회피하지는 않으나 길게 말하는 법이 없다. (나한테만 그러는 것일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안효상 이사장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상노선적 변화와 그 이유가 궁금했다. 아무튼 매우 사심 가득한(?) 인터뷰였다. 개인사도 사적 개인사와 공적 개인사가 있을 것이다. 안효상 이사장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사회운동의 이론과 실천의 장을 지켜왔다. 그래서 이 인터뷰를 통해 안효상 이사장 개인의 사상노선적 변화의 과정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사회운동 변화과정도 윤곽 정도는 드러난다. 인터뷰에 응해준 안효상 이사장과 사진까지 잘 찍는 엄선미 실장께 감사한다.

이사장이 되셨는데, 요즘 뭐 하고 지내십니까?

- 뭐 하고 지내냐?

책 열심히 보시고?

- 책이야 열심히 보고 있고, 개인사는 큰 변화가 없어서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대선기간 중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에 참여했겠습니까?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여기 참여하는 기본소득후보 지원과 공동선언 등을 하기 위해 대표자 회의와 토론회 등을 했고, 지방정부나 지역 기반의 기본소득을 제안하는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나머지 활동으로는 기본소득 관련 연구와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사장님께서 기본소득운동에 접하시게 된 계기를 과거에서부터 되짚어봤으면 합니다. 개인사적이라고나 할까요?

## 2007년 대선을 계기로 기본소득과 만나게 돼

- 2007년 대선이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한국사회당 금민 대통령후보의 공약이 ‘국민기본소득’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같이 정제돼 있지도 않았고 가장 중요한 공약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선대본부장을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기본소득’을 알게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

본소득에 대해 좀 더 깊이 고민하기 시작한 건 2007년 대선이 끝나고 2008년 경제위기가 찾아올 때부터입니다. 2009년에 접어들면서 2008년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토론회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기본소득이 좀 더 전면에서 등장합니다. 이 토론회에는 강남훈, 박노완, 그리고 금민 선생 등이 참여했는데요, 기본소득을 좀 더 체계화할 필요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그해 여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다음 카페 그룹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서클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 무렵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프로젝트로 강남훈, 박노완 두 분이 프로젝트 보고서 냅니다. 2009년을 지나면서 기본소득이 당시 사회당 계열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2009년은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간 해여서 한국의 현실정치나 사회에 대해 여러 생각을 아니 할 수 없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 1월 이전까지는, 비록 저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 참여하고는 있었지만 열심히 기본소득을 연구해 봐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사회당 정치학교 교장이라는 걸 맡고 있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 공부하긴 하지만, 그것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소득이 저의 중심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0년 1월에 기본소득지구 국제학술대회가 서강대에서 열립니다. 거기서 ‘기본소득 서울 선언’도 발표되고 그랬습니다. 그 대회에 파레이스, 야마모리, 수플리시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당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일부 좌파들도 약간 호의적인 시

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 여름에, 이걸 매우 공식적인 역사 일 텐데요, 상파울루에서 있었던 13차 BIEN 대회에 가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공식적으로 지구네트워크에 가입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도 21세기 이후의 일이니까 세기를 거슬러 좀 더 멀리 올라가서 복기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학생운동 시절부터 해보지요. 우리 때 학생운동 화두가 처음에는 소위 ‘삼민’, 즉 ‘민족, 민주, 민중’이었잖습니까? 민족 문제는 통일문제로, 민중 문제는 계급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민주는 군부독재와 맞서 싸워야 하는 당대 현실과 결부되면서 주장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민주문제가 약간 물러나면서 민족문제와 민중문제를 하나로 뭉뚱그린 NL/PD가 등장하고, 이후에는 민족에 방점을 둔 NL과 민중에 방점을 둔 PD로 나뉘게 되는데, 이 과정을 모두 겪으셨잖아요? 아무튼 이 문제들은 지금의 기본소득의 문제의식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어 보이고 이사장님께서 이 문제들로부터 기본소득에 이르기까지는 또다른 긴 과정이 있었을/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 대해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적 공화주의 이념과 결부하여 기본소득을 이해

- 사실 아까 빼놓은 얘기였습니다. 당시 사회당 그룹 내에서는 기본소득이 독자적으로 얘기됐다기보다는 ‘사회적 공화주의’라는 이념하고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80년대 당시 현실 운동에서 ‘삼민’이라는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이념적 사상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맑스주의적인 경향, 그리고 현실의 전략과 조직 노선에서는 레닌주의적인 경향, 이런 흐름 속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87년을 경과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른바 제도화된 민주주의, 혹은 형식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적응해 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91년까지도, 그러니까 노태우가 집권하던 시절까지도 5공화국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런 ‘민주주의적 흐름이 과거로 퇴행내지 역전되지는 않더라’는

경험을 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실 운동에서 민주주의 문제가 좀 더 뒤로 물러났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민주주의 문제가 뒤로 밀렸다고 보다는 민주주의가 확장되고 거기에 적응하면서 독재-민주의 대립구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독재의 안티테제라는 의미의 민주는 더 이상 화두가 아니게 되었다는 의미로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소수자라고 하는 문제들이 90년 대에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민주주의 확장 시도, 확장기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또 다른 문제였던 ‘민중’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 맑스주의적인 경향에서는 이른바 ‘한국 자본주의 발전의 일반적 성격’을 강조했었죠. 산업자본주의의 발전, 그 속에서 노동자 계급의 성장, 그리고 그들을 조직하고 그들을 중심에 놓는 사회 변화 추구, 이런 문제의식과 구도에 놓여 있었습니다. 87년 여름의 노동자 대투쟁은 이런 문제의식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당시에는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89년(베를린 장벽붕괴), 91년(소비에트 해체) 사건이 터지면서, 한국 사회에 자본주의 모순이나 민족 모순이 여전하고 민중의 삶 역시 피폐해 있지만 그 삶들을 바꿔내기 위해서 지향했던 체제에 대한 실망 혹은 실제적 준거점의 상실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소련이 무조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 고상하고 이상적인 이론도 현실에서는 왜곡될 수 있어

즉 원래의 이념이나 이상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 쉽게, 잘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체제 자체의 붕괴는 파장이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체제에는 내부적으로 자정하고 바뀌고 개혁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는 거구나, 뭐 이런 정도의 잠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아래로부터’의 의미에 대해, 그때부터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세상을 사람들에게 제시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일로 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흔히 말하는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류의 생각이랄까요? 이런 사고가 저의 밑바탕에 자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에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이상적인 것을 주장하는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왜곡될 수도 있다. 여기에 있는 수단을 갖고 저기로 가는 것이 갖는 난점이랄까, 뭐 이런 생각들을 90년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90년대에 했던 다양한 공부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알튀세르 식의 태도, 즉 두 개의 전선. 그러니까 역사적인 공산주의 혹은 정통파와 싸우면서도 반자본주의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의미에서의 두 개의 전선적인 태도. 56년 흐루쇼프의 탈 스탈린화에 대한 태도였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사고로 당시에 한국에서 많이 유행하던 철학적, 사회과학적 흐름들을 공부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이전까지 학생운동에서 공부했던 사회과학은 한국 경제의 현실에 대해서는 매우 추상적인 이해에 그치고 있어서 현실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90년대 이후에는 다양한 변화에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변화, 1945년 이후의 변화, 1970년대 이후의 변화, 그 다음에 90년대 이후의 변화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그래서 좀 더 현실을 천착하려는 이런 식의 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개인적으로 더 주력해서 공부한 건 68이었습니다. 68이 뭘까? 당시 이해하려던 것은 세계적 차원의 운동으로서의 68입니다. 68이 세계적 차원의 운동이라는 것은 68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학생운동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소련과 동구 내부의 반체제 운동, 제3세계의 민족해방 운동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넓은 의미에서 68은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남북간의 세계 질서든 당대의 체제에 대한 반체제 운동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체제 대결에서 이 체제가 졌으니까 이 체제로 전향하는 게 아니라 왜 각각이 다 문제가 있었는가를 보는 방식으로 68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계급 문제로 환원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천착. 또 하나는 그 속에서 ‘폴리티컬 커렉트니스 political correctness’, 즉 정치적 올바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여기에 있는 수단과 관념과 생

활 방식을 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추구/실현하려는 데서 오는 난점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 19세기, 20세기 전반기의 서구의 공산주의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인종 차별주의자였던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와 같은 문제들을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론적이고 사상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21세기 초에는 이론, 사상을 현실에 정치적으로 구현하는 문제, 방법에 대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도적인 참여가 있을 텐데, 제도적 참여를 하려면 좀 좁은 의미에서 정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거에 나갈 때, 그냥 ‘자본주의 타도하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구체적인 당면 과제를 내놓아야 하지요. 거기서 나타난 게 2007년 대선 당시 사회당 내에서의 한편으로는 사회적 공화주의, 또 한편으로는 기본소득 정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뭘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넓게 ‘사회적 공화주의’라고 표현했던 것 같고, 그것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수단으로 기본소득을 내세우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말입니다. 궁극적인 목표 이른바 최대 강령을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당면한 과제를 외치는 것이 정치이고, 그 정치를 통해 어떻게 제도 안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제도라는 통로를 통과할 것인가 혹은 이용할 것인가, 이런 식의 고민들이 있었던 거죠.

## 현재적 수단과 관념, 생활방식을 갖고 더 나은 세상을 추구/실현하는 데서 오는 난점을 생각

민중과 민주 중에서 ‘민중’ 관련해서는 얘기가 된 것 같네요. 과도한 단순화이긴 하지만 이사장님께서서는 ‘민중’ 쪽의 운동을 주로 하셨는데, 80년대에 제기된 민족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세요? 지금의 입장에서요.

- 현대 국가의 민주주의 문제도 넓게 보면 인민 주권에 관한 문제, 즉 사람들 자신들이 직접 의사를 결정하고 해야 하는데 일부 혹은 소수가 독점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였지요. 그런데 주권 문제를 외부와의 관계에서 보면, 즉 주권이 넘대로 하자면 당연히 외국 군대도 없어야 되고 내정간섭도





받지 말아야 되는 거겠죠.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말에요. 아무튼 민족의, 흔히 말하는 국민국가의 자주권에 대해 반대한 적은 없어요. 문제는 이 문제가 한반도 분할 과정과 깊게 연루되어 있다는 점이겠지요. 해방 후 하나의 국민국가 형성이 과제였기는 한데, 문제는 분단 이후의 과정이 서로 너무 달라서 상당히 독자적인 나라로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각각의 나라들로, 두 개의 지역에 각각이 좀 더 온전한, 민주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저는 당시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정적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물론 반공 교육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0세기 공산주의 운동사 혹은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과정 속에서 이른바 김일성파가 권력을 잡는 방식, 그리고 그들의 국가의 운영방식 자체가 부정적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그냥 간단히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방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남북을 그냥 섞어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족 문제는 좀 시대착오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45년이었던 중요한 과제였을 텐데, 그 후에 독자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저는, 여러 맥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기는 했지만 왜 한

국이 자본주의 발전의 길을 걷는가, 독자적 사회구성체로서 한국의 자본주의는 어떤 모습인가, 여기서 민중 혹은 계급은 어떤 상황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도 바꾸고 싶으면 스스로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그런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 남북은 국가수립과정 현저한 차이 있어, 현재 시점에서는 각자 발전을 도모해야

현실의 제도 정치에 참여해야겠다. 그러려면 최대 강령이 아니라 정책을 얘기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일부 답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계급 문제에서 기본소득으로, 사상적 전환? 변화?를 겪게 된 이유나 과정이 무엇인지를 좀 더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 가장 큰 문제의식은 왜 노동자 계급이 이른바 세계사적 계급이냐는 점이었습니다. 과거 학생때는 사회가 부르주아화, 프롤레타리아화라는 양극화된 두 계급으로 발전한다고 이해했습니다. 나아가 노동자 계급은 생산자주의라는 관념에서는 억압받는 계급이지만 자본주의 발전의 전면화 속

에서는 미래를 움켜쥔 계급, 보편화된 계급이라고 추상적으로 이해했는데, 실제 현실에서 정말 그런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노동자계급은 전체 인구의 일부, 숫자가 많건 적건 일부인데 그들이 보편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문은 아까 말한 인종 문제라든지 여성 문제라든지 흔히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문제들과 접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생긴 것입니다. 결국 노동자 계급이 보편적 계급이 될 수는 없겠구나, 이건 좀 허구적인 가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90년대에 이론적으로 하기 시작했구요. 노동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지만 전체는 아니라는 의식을 지니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90년대 이후의 한국사회 변화 특히 IMF의 변화 속에서 노동자 계급의 이른바 동질화 체제가 깨지고 계급 내에서 분할이든 그 밖에서의 분할이든 어쨌든 분할들을 보게 됩니다. 노동자 외의 다른 정체성에서 보면 노동자 계급의 정체성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구나, 노동자 계급 내에도 하나의 정체성이 있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정치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라는 게 사람들을 계속은 아니지만 특정 시점에 하나로 묶어내는 행위구나, 그러다가 다시 깨지고 다시 묶어내고 이런 행위라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을 계급으로 호명하는 게 아니라 인민이나 시민으로 호명하는 것이 적절한 게 아닌가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이는 곧 사회적 공화주의에 동의하는 것이고, 이것에서 다시 기본소득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가깝죠.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계급과 상관없이 모두를 동등한 주체로 바라보는 것이니까요. 제 생각의 밑바탕에는, 철학이나 이론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해방이라는 게 뭘까 하는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해방되면 노동자가 아니지 않은가하는.

## 노동자 계급의 정체성이 보편성을 지니는지 의문들 어 사회적 공화주의 수용

그런데 사회적 공화주의가 뭔가요?

- 공화주의를 이해하게 된 거는 90년대 미국사에 대해

공부하면서 18세기 논쟁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공화주의’가 나와요. 그전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죠. ‘공화국’이라는 말이 흔히 쓰이니까 막연히 알고는 있었지만요. 공화주의는 이념적으로는 타인을 착취하지 않고 타인에게 착취당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연합체라고 봅니다. 물론 그걸 페티트 같은 사람은 비지배 자유라고 얘기하겠지만 말입니다. 매우 고대적인 개념이고 고대에서 동등자들이란 자영농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바보가 아닌 이상 현대사회에서 다 동등자니까, 모두에게 땅 나눠줄 테니까 농사 지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적으로 동등자, 동등권을 보장하는 책임을 지는 수단이 필요한데, 그 수단이 기본소득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의 물질적 보장, 그러니까 스페인의 라벤토스나 까사사스 식의 사고방식으로 초기에 기본소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사회주의 혹은 사회주의이론에는 정치적 토대라는 게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 도대체 사회주의가 되면 어떤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는지에 대한 이론이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즉 기존 사회주의 이론의 보충, 보완을 공화주의라는 틀로, 18세기 미국 혹은 고전고대, 아테네 로마 이런 것들을 경유하면서 받아들인 겁니다. 사회적 공화주의라고 사회주의는 아주 다른 것을지칭하는 말인데 당시 저 개인의 정치적 지향으로서는 그렇게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닌 어떤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공화주의에 대한 논의는 아주 오래된 것일 텐데 ‘사회적’이라는 관형사가 붙는 공화주의는 그냥 ‘공화주의’와는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 사회에서 동등자로 살기 위한 물질적 토대 보장이 사회적 공화주의의 핵심

- 적극적 참여 문제는 별개로 치더라도 동등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착취하지도 않고 착취당하지도 않기 위해서는 삶의 물질적 기반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래서 고대부터 18세기 제퍼슨까지는 땅을 주자는 생각을 한 것이고요. 토마스 페인도 15 파운드를 21살 때 주자고 했는데, 그냥 써버리라는 게 아니라 땅 사고 소 사서 농사 지어라, 이런 게 깔려 있는 사고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김상봉 선생 같은 사람이 공화주의하고 자본주의가 양립 가능하냐는 식의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동등자로 살기 위한 물질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사회적 공화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류하기에 따라서는 민주적 공화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공화주의의 가장 난점은 페티트에서 보듯 공화주의에 경제 이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공화주의에는 공화주의가 가능한 물질적 조건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 사회적 공화주의나 민주적 공화주의는 기본소득이 됐든 기초자산이 됐든 동등자들을 만드는. 그러니까 물질적인 양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타인에게 종속되거나 지배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고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이렇게 도식적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람한테 물질 토대를 제공할 수가 없다는 전제 하에 물질 토대가 있는 사람들만 정치적 동물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폴리스에 참여하려면 물질 토대라는 자격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고대와는 달라서 그 물질 토대를 사회가 제공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자는 것이 사회적 공화주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부연하자면 근대 민주주의의 이념은 누구를 미리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는 어떤 자격도 없다는 것이 자격이죠. 다시 말해 아무런 조건이 없이 누구나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이다, 발언권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공화주의는 민주적 공화주의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사회적 공화주의를 새로운 정치적 돌파구로 본 거죠.

**이번 대선까지 한국기본소득 운동의 한 사이클,**

## 정치적 통로 찾기 시도는 일단 실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를 거쳐서 이사장이 되었는데, 기본소득운동을 어떻게 해 나가실 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를 맡은 게 2015년 정도였을 겁니다. 2009년이 한국기본소득운동에서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본다면, 다시 말해 2007~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상황에서 한국기본소득운동이 태동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적 혹은 세계사적 트렌드와 우리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기본소득운동, 좀 더 정확히 말해서 기본소득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기본소득운동을 반추해보면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나름의 대답들을 하려고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제도화된 민주주의 하에서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통로를 모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번 대선까지의 과정을 통해 하나의 사이클이 끝났다고 보는데, 정치적 통로를 찾는 시도는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대선이라는 제도가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이니까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후보가 됐으면 또 다른 정세가 펼쳐졌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죠. 흔히 말하는 중앙 정치라는 차원에서는 일단 봉쇄된 거라고 봐야 겠지요

그러면 제가 기본소득 얘기를 했을 때 흔히 받는 질문이고 혹은 비판이기도 한데,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운동과는 달리 기본소득은 모두의 이익과 결부되기 때문에 아무도 주장하기가 어렵다는 흔한 비판이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노동운동이라면, 물론 노동자 내부에서의 분할도 있고 심하게 말해서는 이익단체화 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노동자가 주체가 돼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지속성을 갖고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에 비해서 기본소득이 그걸 필요로 하는 당사자로부터 발현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본소득의 운명, 위치라고 생각해요. 혹은 난점, 아포리아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정책처

럼 보이지만 매우 보편적이라서 누구는 정책으로 보고 비판하고 누구는 말씀하신 대로 정치운동,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기본소득이 어쨌든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굳이 기존의 정치론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포퓰리즘적 계기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기본소득 도입전략을, 기존 정치 틀 내에서의 그 등을 타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등을 타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2010년, 11년 월가 점령운동 같은 그런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할 수도 있겠죠. 그 중 하나는 기존의 정치적 틀 내에서 개혁적인 흐름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세와 그 나라의 제도나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스페인의 포데모스 같은 방식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기본소득이 그 운동을 만들어낸다는 게 아니라 대중의 정치적 흐름 속에서 기본소득이 그 흐름을 타는 방식이 되겠지요. 이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구별되는 독자적 운동이라기 보다는 흐름을 타는 거고, 그랬을 때 좁은 의미의 기본소득운동은 그런 흐름에 타기 위한 준비, 이런 것들을 하는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 기본소득 제도 도입에는 포퓰리즘적 계기 필요

대선 얘기 나왔으니 자연스럽게 포스트 이재명이라고 할까요, 이재명이 없는 기본소득과 혹은 이재명이 부활하는 상황과 이런 것에 기본소득운동이 많이 좌우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기본소득 의제의 사회적 확산에는 당연히 영향을 받겠지요. 다만 우리가 되고 안되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하고요. 어쨌든 대통령이 될 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재명과 관련하여, 이번에 대선을 지나면서 더 확실히 느끼게 된 것인데, 한국에는 정해진 포퓰리즘의 계기가 있다는 점입니다. 대중의 의식이 올바른건 올바른지 않건 그렇다. 그렇다면 다음 대

선에서 또 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누가 들고 나오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개인이 위대하나 위대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소득이 얼마나 설득력 있고 얼마나 현실적인 정책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가에 결국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구상하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관점에서 그가 성남부터 경기도까지 해온 것들이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런 과정, 혹은 경험을 의제화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직접적 경험인건 의제를 통한 경험인건 간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여쭙보겠습니다. 지난 번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관련 세미나에서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이 이렇게 소환될 수 있고, 이렇게 의제화가 되는 데 중요했던 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에는 다분히 이재명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 아니냐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E.H. 카 식의 대답을 할 수 있죠. 어떤 사건의 원인에 대한 답안지를 쓰라고 하면 하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C 학점이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B 학점이고, 이것도 저것도 중요하네 그 사이의 관계까지 설명해야 A 학점이라고 했지요.

A 학점짜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참 말하기 어려운 답변이긴 하네요. 예를 들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없이 그냥 이재명만 있었다, 그럼 어디서 기본소득을, 그냥 어디서 들을 수는 있었겠지만, 구체적인 정책안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었겠느냐? 반대로 예를 들면 이재명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기본소득이라는 게 지금처럼 확산됐겠는가? 적어도 시간적으로는 한국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주체가 된 기본소득운동의 흐름에 이재명이 동참한 것이고, 반대로 기본소득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적 통로를 찾아낸 거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이라는 답이 나올 수도 있고, 네트워크가 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의 정치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될 수도 있다고 생



각합니다

## 기본소득 정세적 하강기이나, 한국 정치에는 주기적 정상적 포퓰리즘적 계기 있어

그러면 적어도 기본소득이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의제화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 의제화 됐다가 그만큼 약화되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이재명이라는 현실 정치가 혹은 행정가를 통해서 하나의 정책으로 제시가 됐고 그래서 처음에 나름의 관심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이유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충분히, 열렬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좀 더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새로운 정책의 등장과 함께 이를 둘러싼 갈등이 생겼고 이 갈등 속에서 기본소득 의제가 지닌 여러 측면들이 희석화 되기도 했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이 속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봐야겠죠. 대선만큼 기본소득이 고조될 수 있는 정상적 계기는 없는 데, 아무튼 지금은 대선을 지났으니까 퇴조기는 퇴조기죠.

옛날에 기본소득의 역사 쓰시면서 ‘웨이브’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에게선 선거국면이라는 상시적인 웨이브가 있다. 그런데 기본소득이 채택되지 못하고 대선이 끝났으니 그런 의미에서 퇴조기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주기적이고 정상적인 포퓰리즘적 계기가 한국 정치에는 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미국정치에도 이런 계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08년 오바마가 처음 될 때도 2016년 트럼프가 될 때도 그렇고, 2020년은 잘 모르겠고. 특히 한국은 2002년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될 때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고, 한국의 경우는 이번에는 도리어 오른쪽에 그런 계기가 있던 것이 아닐까, 혹은 정확히 말하면 좌우 포퓰리즘이 충돌하는 계기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하고 싶습니다. 기본소득 관점에서 보면 이 충돌의 결과는 당연히 퇴조인데 어디까지 퇴각할 것이냐가 관건일 텐데, 어디까지 갈지는 정해져 있는 건 물론 아니죠.

## 지방선거 통한 그간의 성과 보전 및 확산 노력과 기본소득의 정당성 필요성 심층 연구 필요

그러면 기본소득네트워크가 현재 할 수 있는 최대한과 거꾸로 말하면 한계겠죠, 그런 게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세요?

- 최대한은 지방선거를 통해서 기존에 형성되어 있었던 거를 뒤로 후퇴시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확산하는 것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일인긴 하지만,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필요성과 관련하여 현실의 변화에 맞게 그것을 한편으로 깊이 있게 한편 넓게, 예를 들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람들이 좀 같이 집단적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2009년 이후에도 한 게 그런 거고. 그런 걸 통해서 이른바 재원조달 계획까지 가는 일련의 구상들을 당시에 했던 거고, 그것을 일종의 지적인 저장고 삼아서 청년기본소득 안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지금 또 다시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물론 이 작업을 꾸준히 하되 지방선거까지는 앞서 말한 제도적 확산 노력을 해야겠지요. 대선으로 하나의 순환이 끝났다고 했지만 지방선거까지 끝나야 그 순환의 결말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예요

그러면 국내적인 얘기만 했는데 기본소득 국제 운동의 참여라고 할까 또 혹은 기여라고 할까 그랬을 때 우리가 몇 년 전 총회를 통해가지고 공유부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나 이런 차원에서 이론적으로 의제화 하거나 이러는 것들이 좀 진행되고 있나요?

- 지금 우리가 그걸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깊게 정리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좀 정리가 돼야 하겠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 파문

[기획자의 말]

이번 호부터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을 지상중계한다.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기본소득연구소의 파문팀(류보선, 문지영, 서정희, 서희원, 양희석, 이선배, 장시정, 정우주, 한인정)이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프로젝트이다. ‘파문’은 한마디로 기본소득의 잠재성과 실현가능성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다각적으로 상상해보는 시간이다. 현재 한국 사회의 파국적 상황을 냉철하게 응시하고 그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의 실천가들을 초청, 한국 사회가 위기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과 그 길에서 기본소득이 행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향후 기본소득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경청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자기 영역의 닫힌 세계를 거부하고 스스로 파문을 길을 선택한 분들이 기본소득과 더불어 세상을 향해 불러일으킬 파문이 질풍노도의 물결이 되어 이 노골적인 불평등과 인류세적 위기 상황을 돌파해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그를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동참이 필요할 터, 독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

이번 호 ‘파문’의 초대손님은 고전평론가 고미숙과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대표 김세준 두 분이다. 국문학이라는 제한된 세계를 탈주해 고전평론가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고미숙 선생은 현재의 인류세적 위기가 과잉의 출혈 노동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백수를 인류의 미래로 제시하는 기발하면서도 혁신적인 발상을 제시하고 있어 인상적이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라는 전국적인 조직을 앞세워 기본소득 운동사에 한 획을 그은 김세준 대표는 돌연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자마자 돌연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의 대표가 되는 극적 과정을 흥미롭게 재연하는 한편 이번 대통령 선거 이후 주춤해진 기본소득 운동을 다시 추동시킬 의지를 불태우는 바 역시 경청할 만하다.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이 세상에 파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값진 자리가 된 데에는 지리산·부산 등 먼 곳도 마다하지 않고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달려와 매 인터뷰를 근사한 화면으로 담아주고 완성도 높은 편집으로 멋진 영상을 만들어준 미디어 데모스의 양희석 피디의 노고가 절대적이었음을 밝혀둔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건넨 지 못한 깊은 감사를 전한다.

# 백수가 인류의 미래다

- ‘파문’ 지상중계 #1, 고미숙 편

## 제 1부: 상상이 가능해지려면, 정신부터 해방하자

### 기본소득 물결을 위한 첫 팔매질

한인정: 안녕하세요 <파문>의 진행을 맡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한인정입니다. 오늘은 기본소득 집담회 <파문>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파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기본소득을 자유롭게 상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앞으로는 파문에서 다양한 영역에 계시는 분들을 모셔서 한국 사회의 고민과 대안을 들어보고 기본소득을 통해 가능한 변화들을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영상이니만큼 간단히 사회자 소개와 진행 방식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문>은 고정 MC인 저와 매달 변동되는 MC가 있으시고요. 이 둘이서 이달의

게스트에게 각양각색의 질문을 드리고 생각을 나눌 예정입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고정 MC를 맡고 있는 한인정이고요, 기본소득을 공부하는 글쟁이고 별명은 ‘팔매’라고 하는데 ‘돌팔매’입니다. 돌팔매 뜻은 직관적인 건데요, 어느 공간에서건 아주 작지만 조금이라도 변화를 일으키고자 ‘팔매’라는 별명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겸 MC를 소개를 해야겠죠. 오늘의 객원 MC는 정우주 선생님이신데요, 저도 오프라인으로는 사실 오늘 처음 뵈는 거예요. 온라인으로는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신뢰를 쌓아왔던 사이인데, 실제로 보니까 한 열 배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정우주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정우주: 안녕하세요. 저는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대표 정우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조그마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기도 하고 의사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많이 공부하고 싶고 더 배우고 싶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인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한인정 선생님 뵙고 싶었는데 뵈니까 역시나 반갑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소득 <파문>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왜 <파문>이라는 이름을 지었는가요?

한인정: 파문의 사전적인 의미는 ‘수면에 있는 물결’이라고 하거든요. 작은 변화의 물결무늬가 하나하나씩 생겨서 퍼져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희 기본소득도 작은 변화지만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넓게 퍼져나가길 기대하며, 그 이미지를 현실 속에서 제대로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 공부하고 읽으며 살아가는 사람 고미숙

한인정: 이제 오늘의 <파문>의 첫 게스트 소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매불망 기다려 왔고요. 저는 어제 사실 밤잠을 설쳤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팬이기도 하거든요. 정우주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우주: 오늘 게스트로 모신 분은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고 읽으며 살아가는 분입니다. 책도 많이 쓰셨는데요. 소개를 드리자면 『공부의 달인 호모 쿵푸스』,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 『낭송의 달인 호모큐라스』, 『나의 운명 사용 설명서』, 또 『몸에서 자연으로, 마음에서 우주로』 등등등. 굉장하죠? 그런데 현재는 감이당과 남산강학원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면 누구인지 대충 눈치채셨을 텐데요. 환영합니다. 고전 평론가 고미숙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고미숙: 안녕하세요.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고전평론가 고미숙입니다.

한인정: 정말 뵙고 싶었는데 초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

인 건 맞거든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찾아 주셨는지. 아마 핸드폰에 전화가 왔을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그 때부터 사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미숙: 제가 SNS를 안 해가지고 하루에 공동체에서 오는 문자 몇 개 말고는 전화가 오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스팸 메일, 스팸문자, 재난문자... 그래서 전화벨이 울리면 되게 신기해서 받아요. (한인정: 일단 신기했다?(웃음)) 왜냐하면 하루에 하나 이틀에 하나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보통 무슨 광고하는 그게 많이 들렸는데 제 이름을 불러서 좀 놀랐죠. 이건 진짜로 한 거네 이렇게.

한인정: 전화기 속에서 ‘기본소득 이야기를 같이 해보면 어때요’라는 말이 들려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고미숙: 진짜 좀 귀찮았죠.(웃음) 저의 모든 정서의 밑바탕엔 이게 귀찮은 일인가 아닌가 항상 이렇게 나누는 습관이 있는데... 작년에 좀 어이없는 그런 인연으로 제가 기본소득 잡지에 글을 쓰게 됐잖아요. 계간《기본소득》의 편집위원인 류보선씨가 10년 만에 한 번 전화를 할까말까 하는데 이름이 뜬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번호가 아직 이름이 저장돼 있네, 너무 신기해서 받았거든요. 불쑥 원고 청탁을 해가지고 정말 황당했는데, 하여튼 어쨌든 쓰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또 연락이 와서 그리고 인터뷰를 하자고 그러니까... 나는 그 뒤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다든지 더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강제로 막 관심을 환기하나? (웃음) 아무튼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조직이 이렇게 있다는 거 호기심이 생기기도 했어요. 저희는 공동체에서 돈의 순환에 대해서 늘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몇 년 전부터 기본소득이라는 이런 테마가 제 귀에 들리긴 했는데 좀 이게 막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조직이 있다니 신기한데, 어떻게 활동하지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그 전화를 받을 땐 귀찮음과 궁금함 사이에서 막 갈등을 했죠. 그러다가 이럴 때는 그냥 하는 쪽으로 선택하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정우주: 저희가 선생님을 알고자 왔는데 선생님이 사실 저희 조직을 파악하고자 오신 거네요.

고미숙: 그럼요. 제가 궁금하지 않으면 절대 안 옵니다.

정우주: 호기심이 이겼네요, 귀찮음을. 저는 의학 전공이다 보니, 또 한의학, 동양의학에 대한 늘 어떤 궁금증이 있었는데, 누군가 곁에서 고미숙 선생님이 쓰신 동의보감 그 책을 권해 주셔서가지고 읽었는데 와, 이거는 몸과 어떤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미숙: 본인이 우주 아니세요?(웃음)) (정우주: 네. 이름이 우주기도 해서...) 왜냐하면 의학은 굉장히 객체를 조각조각 내서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새로운 걸 알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책을 쓰신 고미숙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 존경심도 생기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오늘 또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고미숙: 되게 특이하신 거예요. 현대의학 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약간 반감이 많으세요. 동양의학이나 동의보감, 이런 거에 대해서.

정우주: 제가 좀 특이해서...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고... (웃음)

고미숙: 역시 이름이 그래서, 이름 때문인 것 같아요

정우주: 뭔가 우주에 대한 이러니까...

고미숙: 내 애기인가 이려고 읽으신 거 아닌가, 혹시...

코로나 2년, 혹은 아주 훌륭한 공부의 기회

정우주: 개인적으로는 기본소득도 이런 동의보감적 관점에 좀 연결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요즘에는 코로나도 좀 이렇게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근황은 어떠신지?

고미숙: 거의 변화가 없는데... 이제 코로나 2년을 벌써 겪었잖아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이게 전 인류적인 어떤 재난이었고 몸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는 그리고 인간과 자연, 바이러스와의 관계라는 게 인간과 자연의 관계니까,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큰 아주 훌륭한 공부의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거기서 생활하는 게 주로 읽고 쓰고 말하고 산책하는 거여서, 도심에 있지만 도시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어



면 뭘 포기하거나 막 뭘 참아야 되거나 이런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도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막 욕망을 교차하는 곳이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된 거죠. 거기에 코로나가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삶 자체가 도시와 자본의 욕망 좀 외부에 있다는 걸 코로나가 알려 준 거예요. 저희가 남산 밑이니까 서울 도심 한가운데인데도 코로나 2년을 청년들도 그렇게 불편하다 이런 거를 거의 못 느낀 것 같고. 근데 이제 세상이 막 이렇게 너무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나가니까 그거 자체가 우리가 배운 고전을 이렇게 연결하는데 굉장히 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정우주: 그러면 기존의 이렇게 해 오셨던 그 공동체 공부 공동체 내에서의 그런 삶의 형식이 코로나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런 생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은 지금 하고 계신 그런 형식이라고 생각하셨다고 보아도 되나요?

고미숙: 아니 그런 게 아닌데,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우리가 대안이 됐나? (웃음) 제가 20년 전에 중년 백수, 박사 백수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중년에 백수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21세기 돼서 본의 아니게 내가 백수의 원조가 됐나 그런 느낌과 비슷한 건데... 앞으로 이렇게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 이럴 때 우리가 그동안 실험했던 것,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나라고 했던 것들이 작은 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은 있죠.

한인정: 산을 가는 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산에 가 보면 원래 정해진 길 말고 꼭 누군가가 새로 가놓은 길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큰 길이 막혔어, 그러면 새롭게 작은 길을 만들어 가야 돼, 그런데 이미 그 길을 걷고 계셨던 그런 느낌인데... 그 지점에는 되게 좋은 벗, 고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고전 하면 고미숙... (웃음)

고미숙: 그래요? 좀 과장인데...

## 연암 박지원과의 사건적 조우 혹은 운명적 조우

한인정: 고전이 선생님의 친구고, 또 사실 스승이고 그런 건데, 삶의 되게 커다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아끼는 고전이 궁금해요. 고미숙의 원픽을 고르자면?

고미숙: 그건 너무 연예인들한테 하는 질문인데... 연예인들한테 질문할 때나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웃음) 고전을 일상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지금 읽고 있는 게 최고의 픽pick이에요. 지금은 초기 경전 『숫타니파타』나 『축의 시대』 같은 영성에 대한 텍스트를 보고 있는데, 이전에 읽었던 『동의보감』, 『열하일기』, 『임꺽정』 전부 다 그런 것들이 변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고 과거가 되는 게 아니라. 초기 경전 『숫타니파타』를 읽으면 『열하일기』가 새롭게 또 변주되고 카렌 암스트롱의 『축의 시대』를 읽으면 그 안에서 『동의보감』이나 『주역』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막 변주가 되는 거죠.

한인정: 고전이 소비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고미숙: 절대, 흘러가요, 흘러가. 파문도 이렇게 물결이 흘러가야죠. 그게 어디서 끝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전은 파동이에요. 그리고 고전이 친구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전을 읽으면 친구가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감이당, 남산강학원이 2060이 크로스 돼서 계속 같이 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고전이라는 스승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친구가 너무 없다 그런 분들은 고전을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친구들이 생깁니다.

정우주: 선생님 책을 일부 읽었지만 반복해서 연암 박지원에 대해서 인용하거나 그의 삶을 좀 풀어내시는 부분들을 보게 됐는데 짧게나마 박지원을 좋아하시는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고미숙: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제가 한국고전 문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대학원에 다닐 때는 연암에 게 1도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제도권 공부라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백수가 되고 교수 진입 포기하고 공부 공동체를 열었을 때 『열하일기』가 그냥 느닷없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미션으로. 그래서 만나게 됐는데, 그때 제 신체 조건이랑 사회적 조건이 바뀌었잖아요. 『열하일기』를 통으로 읽으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연암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 (웃음) 너무 강렬한 접촉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고전 평론가라고 제 스스로 이름을 바꾸고 『열하일기』 다시 쓰기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동의보감』 만나고 『주역』 만나고 불경을 만나면서도 연암이 퇴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나의 벗이자 스승이다, 늘 어쩔 이렇게 샘물처럼 계속 새로운 걸 생성시킬 수가 있지... 사실 21세기가 지향할 만한 어떤 가치가 기본소득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노마디즘이라든가 뭐 이런 우리가 정말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해야 할 새로운 비전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미 조선시대에 다 실험하고 구현했던 이 느낌. 우정과 지성의 향연. 지금도 저는 늘 연암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암의 친구들이 있었던 데가 저희 감이당이 있는 남산 밑이거든요. 그래서 이젠 또 무슨 이런 연대가, 이거 뭐지, 몇백 년 전에 여기 내가 백수였나, 여기서 딸깍발이었나 (웃음) 그 관점에서보면 연암은 정말 백수의 원조예요, 우리나라에서. 어느날 문득 그 길을 발견했어요, 그냥 대문호라고 얘기하면 그게 가려져요. 어느날 문득 스스로 관직에 나가는 걸 포기하고 자유인으로 살았어요. 그때는 ‘백두’라고 했죠.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는 뜻으로. 백수는 손이 비었다는 뜻인데... 근데 그 길을 청년기에 선택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 너무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거 있죠.

#### 오늘날의 청년이 연암을 만났을 때

한인정: 드라마에서 타임슬립해서 가잖아요? 그런 거 같네요. 시기도 비슷하고,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을 스스로 포기한 박지원의 삶과 선생님이 지금 하고 계신 그런 활동들

이요. 그런데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는, 선생님 책에도 나와 있다시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는 힘든 환경같아요. 그런 점에서 선생님의 책들이 던지는 메시지의 의미와 영향이 되게 큰 것 같구요. 그래서 선생님의 책은 물론 선생님의 책이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고전들을 많이 봐야 하고 또 구매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고미숙: 갑자기 왜 책의 광고를...

정우주: 이건 선생님이 전혀 의뢰하신 않으셨고... (웃음)

한인정: 저는 너무 좋은 책을 만나 가지고... 주변 친구들도 다 좋아하더라고요. 이 지식이라는 게 선생님 혼자서 생산하지 않으신 거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고미숙: 그래서 작년에 저희 20대 청년들이 『연암집』을 읽고, 문집을 읽고 에세이를 쓴 『청년, 연암을 만나다』라는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연암이 쓴 글을 읽고, 그 당대 최고의 문장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한문으로 나온 문장 중에 최고 수준이예요, 연암은. 그런 어마어마한 대문호의 글을 읽고 청년들이 우리 시대에 겪는 청년 문제랑 결합을 해서 에세이를 썼는데 그게 이제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죠. 연암이 쓴 글을 읽고 감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공무원인 친구한테 연암 얘기를 들려주고 싶다 이렇게 된 거죠. 연암의 친구들 중에 갑자기 비명횡사한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 읽으면 소리 소문 없이 목숨을 버리는 청년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막 이런 게 시대를 초월해서 오버랩되어 있어요. 책 홍보를 해야 한다면 『청년, 연암을 만나다』 홍보를 해주세요. 이 기본소득네트워크에서.

정우주: 선생님의 그 멘트만으로 바로 홍보가 되는 거 같은데요...

고미숙: 저는 그때 연암이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살아 있구나, 이렇게 청년들하고도 교감이 된다는 게 너무 기뻐

어요.

정우주: 저도 선생님 통해서 실은 연암을 만났는데, 실은 연암의 글을 읽진 못했지만, 선생님 통해서 만난 연암은 어쨌든 저를 굉장히 흥분하게 하고 또 굉장히 이런 방향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엄청난 자극을 주더라고요.

고미숙: 파문,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네...

한인정: 연암의 글이 나 잘났다 이런 글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던져주기 때문에 오늘날의 청년들에게도 와닿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말하자면 선생님의 말씀은 함께 배우고 함께 생산하는 그런 지식이 진정한 지식이며, 이처럼 무엇이든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릴 때 인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이걸 되게 의미가 깊은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더 많이 펼쳐지면 좋겠다 기대를 하며, 여기서 1부를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는 방금 얘기해 주신 ‘백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 그리고 『청년, 연암을 만나다』 그 책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제 2부: 온전한 자유인, 백수가 인류의 미래다

백수란 무엇인가, 무용지물 vs 탈 임금노예적 주체

한인정: 예, 금방 찾아왔죠. ‘백수가 인류의 미래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고미숙이 말하는 백수와 백수가 만드는 해방 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건데요. 제 손에는 지금 고미숙 선생님의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가 들려 있는데, 이 책이거든요. 출판사 직원이 된 느낌이에요. 이 책을 기반으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우리 정우주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정우주: ‘백수’를 찾아보면,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온통 부정적이에요. (한인정: 안 좋은 거 다 나와요. 별다른 직

업 없이.) (고미숙: 추리닝, 쓰레빠) 혹은 길에서 자는 모습이라든지, 낮에 평상 같은 데서 술을 먹는 모습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미지화되어 있죠. 실은 그래서 어디에 가서 쉽게 나는 백수야 말하는 게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미숙 선생님은 백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 여쭙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는 백수란 어떤 의미인가요?

고미숙: 백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동과 비노동을 이렇게 나눠 봤을 때 이 노동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외곽에서 했던 어떤 이미지? 그런 게 아주 무용하고 무익하고 게으르고 이런 거를 지금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오도된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평생 노동하는 게 그렇게 좋아? (웃음)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20세기까지는 누구나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걸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기회가 많았다’ 이렇게 말할 때, 저는 가끔 이걸 좀 정치적으로 토론해보고 싶어요. 그게 좋은 거였단 말인가?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그때는 일자리가 많았다 할 때 이걸 말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도 태어나서 매일 아침에, 예전에 새벽이 있죠, 아침에 출근해서 밤 늦게 오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간신히 쉬고 이런 삶을 평생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게 더 고귀한가요?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때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을 백수라고 했던 거를, 지금 21세기 누구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데, 그렇게 노동으로 일생을 바치고 싶어 하지 않은 시대에 백수 이미지를 그냥 갖고 있는 거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정말 그렇게, 그런 일을 정말 원하는 거야, 지금 청년들이 그런 일자리를 원해요? 아니잖아요.

한인정: 일단 아닙니다. 저부터도.

고미숙: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고귀하죠? 그냥 물건을 생산하고 거기서 오는 화폐를 얻고 그걸을 토크이 소비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게 어떻게 인간의 삶이



야. 그건 예전에 진짜 얘기한 임금 노예죠.

정우주: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방금 말씀하신 임금 노예,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퇴근하고 틈틈이 소비하는 그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두가...

고미숙: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80년대처럼 주 7일. 일요일까지 나가고 밤 10시에 오고 이걸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주 5일도 지금은 많고, 주 4일제도 벌써 나왔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일하고 싶다,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개념도 엄청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통계만 나오면 일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뭉뚱그려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섬세하게 변화하는 마음, 욕망의 변화는 보지 않고. 그래서 그런 식의 주 3일이든 주 4일이든 내가 일을 해서 자립을 하고 싶다, 이건 너무 당연해요. 그럼 나머지 시간에는 일단은 내가 마음대로 쓰고 싶죠. 근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소비 말고 없어요. 왜? 이 사회에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만나서 재미있고 의미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소비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소외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주 3일이든 주 4일이든 IT기업이든 택배든 대우가 좋은 데 들어갔다, 대기업이라도 상관없어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자긍심을 갖고 이건 너무 참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그런 일인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소외가 일어나요, 이중 소외가 일어나요. 그 진입에 성공한 청년들 지금은 중년이 됐죠. 돈도 잘 벌고 승진도 하고 소비도 마음껏 했어. 그 뒤에 뭐가 남을까요? 허무. 이 코스를 지금 전 국민이 반복하고 있어요. 아닙니까? 제가 얘기한 거에 어디 이의가 있어요?

한인정: 저는 지금 10,000% 공감하고 있어요, 10,000%.(웃음)

고미숙: 좀 뽕이 세시네요.(웃음) 이미 살아봤잖아요, 중년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삶이 이렇게 펼쳐진다, 임상자료가 너무나 많이 나왔는데, 근데 요 챗바퀴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야. 정치경제학에 대한 상상력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먹고 살 만한데... 어우

제가 대학 다닐 때 비하면 지금 너무 잘 살지 않습니까? 충분히 의식주의 자립이 가능하고 내가 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했는데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비루한 데로 집어넣어요? 노동의 소외, 소비의 소외. 저는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정말 좀 화가 나는 게 지금 50대, 60대 민주화 세대가 왜 자식을 그런 데로 몰아넣는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왜 명문대에 가서 그런 노동시장에 들어가라고 들들 볶는지 하여튼 이거는 진짜... 왜 이런 토론은 안 해요? 이런 토론하는 곳이 왜 없죠?

한인정: 얘기해주셨던 것처럼 임노동이 있는가 하면 그 임노동 밖의 다양한 상상도 가능할 텐데... 요새는 사실 좋아하는 걸 하면 돈 벌잖아요? 유튜버도 돈 벌고, 요즘은 유튜버가 사실 거의 최고의 직업이라고 하는데, 임금노동 말고 그 밖에서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5~60대 역시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단 한 번도. 내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걸 물려주고 싶은데 내가 아는 거라고는...

### 삶에 대한 상상력과 잠이 있는 삶의 회복

고미숙: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이라면 자유와 평등에 대한 상상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이거는 오로지 제도로서의 자유와 제도로서의 평등만 생각한 거야. 정치적 자유, 경제적 평등. 이거밖에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삶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고 총만해요. 이 영역에 대한 사유가 없었다는 것을, 이것을 먼저 자각을 해야 삶의 상상력으로 정치와 경제를 재구성하게 되겠죠. 삶이 일단 바뀌어야 해요.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정치, 경제 안에 묶여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뭐 3만 불이 되건, 앞으로 5만 불이 돼도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저는 정말 지루해요.

그래서 제가 현실정치와 현실경제에 상당히 거리두기를 시작해서, '아, 이런 기본소득도 있었어?' 하게 됐어요. 문제는 상상력의 문제예요. 삶에 대한 상상력.

정우주: 말씀 듣다 보니 제가 상상력이 부족하게 살다

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저희 부모님 세대로부터 주입된 일종의 엘리트 과정을 통해서 기득권에 편입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오다가 이게 뭔가 제 삶의 방식이 잘못됐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걸 자각하면서 상상력의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여러가지 책들이나 주변에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충분히 큰 자극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을 한다는 게 용기가 동반돼야 되더라고요. 삶에서 실천하려면. 더불어서 그 용기를 갖기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는 주변에서 대부분은 또 이런 상상을 좀 만류하거나 거기로 가면 안돼, 이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요.

고미숙: 그런 사람들하고 그냥 헤어지면 되고요. (웃음) 새로운 관계를 만나는 거예요, 길 위에서. 인생은 길이지 뭐. 초중고 대학 동창들 하고의 관계에서 삶이 결정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21세기의 디지털 문명, 그리고 AI, 로봇이 노동을 한다 그럴 때 인간이 노동에서 해방되네, 인간은 일을 안 해도 기계가 해서 생산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이 그 노동을 안 해도 사회적 부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구석기 이래 인류가 꿈꿔왔던 유토피아예요. 안 그렇습니까? 가장 인간을 괴롭힌 게 뭐냐면 농업혁명부터 시작이 됐어요. 뼈 빠지게 일을 해야지 먹고 사는, 그나마도 착취를 당하는... 그리고 기계가 생겨나면서 노동자들이 살 만해졌나 그랬는데 그런데 또 어마어마한 착취가 일어났어. 근데 디지털이 그걸 해소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류 최초의 기회가 생긴 건데... 그럼 누가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예? 백수가 당연히 이 시대를 향유하지.

진짜 잘나가는 직업일수록 너무너무 힘들어요. 방송계, IT업계가 얼마나 심한지 아시잖아요? 저는 방송 쪽은 인터뷰나 강의 때문에 종종 가서 작가나 PD님들 좀 만나거든요. 진짜 그 삶은... 저렇게 힘든 삶을 어떻게 살지? 퇴근이 뭐 밤 새벽 서너 시고, 그 다음에 찜질방에서 가서 자고, 새벽에 또 나가고. 이게 고귀한 삶이에요? 어떤 연봉을 준다고 해서 이게 고귀한 삶이 되죠? 그러니까 뭐가 전도가 됐냐, 단단히. 고귀한 삶은 일단 밤에 자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나까

아실 거 아니에요?(웃음)

정우주: 네, 잘 자야죠.

고미숙: 밤에 폭 자야지, 그게 만병을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걸 누릴 수 있어야죠, 일단. 백수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폭 잡니다.

한인정: 그렇게 말씀하시니 백수의 이미지가 달라지는 데요. 술도 마셔보고 잠도 한 번 폭 자보고. 저도 이전에 좀 아픈 적이 있었어요. 아프니까 산책도 다니고, 순환도로를 매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때 길고양이들의 삶을 봤는데, 때 되면 자기도 하고, 남의 걸 크게 뺏지도 않고 하며 살고 있었어요. 넘어지면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 같아요. 되게 어렵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게 오히려 기회고 그런 특성 때문에 백수들이 인류의 미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고미숙: 그러니까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면, 폭 자고 일어나면 몸이 상쾌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저절로 '참 사는 게 참 재미있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잠을 못 자고 밤에 야식 먹고 온갖 인터넷 화면을 서칭하다가 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에 대한 비판이 먼저 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산다면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낮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낮에 두 번 이상 산책할 수 있어, 와 이거는 뭐! 우리나라 어떤 부자가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합니다. 점심 먹고 하고 저녁 먹고 하고. 남산순환도로를 거의 뭐 저희 앞마당처럼 쓰거든요. 삶의 이런 질, 구체적인 내 용의 질을 따져서 좋은 삶과 좋지 않은 삶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싹 무시하고 연봉이 얼마인가, 아파트를 가질 수 있냐 없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기준이 몇 개 있잖아요? 주식. 이런 걸 하느라 잘 못 자고 산책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러면 이걸 뭐 10년 안에 반드시 병나잖아요, 그렇죠?

정우주: 그렇죠

고미숙: 병나쥬. 모든 병, 만병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삶을 꿈꿀 수 있어요?

정우주: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모두가, 모두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많은 정말 사람들이 뭔가에 지금 홀려서 이게 본인 스스로는 본인의 연봉과 혹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움직임에 늘 불안하고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본인이 추구해야 되는 삶인 양 좀 잘못 알고 쫓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미숙: 그래서 제가 주식의 달인인가 뭐 그런 분 얘기를 들었는데 언제 행복하냐 하니까 주식이 이렇게 상한가 칠 때인데 딱 30초 행복하대요. 그것도 하루에 몇 번 경험을 못 하고. 몸이 이렇게 쾌적하고 정말 몸이 완전히 릴렉스 돼서 너무 편안해 이런 순간이 있냐고 물었어요. 근데 잘나가는 연예인, 그런 주식 부자들이 있는 어떤 모임이었는데 한 번도 없대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이게 완전히 전도되지 않았나요?

#### 고전 읽는 백수, 혹은 가장 즐거운 에코바디

정우주: 떠오르는 옛 과거 사건인데 지금도 진행형일 수 있으나 그렇게 잘 나가는, 일종의 연예인이라든지 혹은 고액 연봉자라든지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결국에 수면을 잘 못 이루고 해서 약물에 의존하고 결국 그거에 중독되는 것들이 한창 이슈였었는데 진짜 그게 간단히만 생각해봐도 너무 비정상적인,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가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따라갈 경로가 아닌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이상하게 모두가 또 그쪽을 따라가고 있는 게... 그러면 선생님 말씀하시는 이 ‘백수가 미래다’라는 게 정말 와 닿습니다. 생산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르게 정말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만 바꾼다면 모두가 좀 백수가 되어 가고 또 마음의 여유를 찾고 잠도 잘 자고 옆에 있는 사람도 돌보고 고전도 읽고 산책도 하는 삶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확 전환하지 못하고 뭔가에 속박되어 있던 말이죠. 상상력이든, 현재의 어떤 삶이든, 경제적인 여건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생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부분부터 실타래를 풀어가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실지?

고미숙: 그러니까 기준을 몸에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많이 아프잖아요. 예전의 병이 사라진 만큼 또 많은 병이 생기는데 주로 마음의 병이에요. 몸이 건강하다고 해도 마음이 너무 헛헛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다 병이잖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 여기서 시작을 하면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세밀하게 관찰을 안 하고 마음이 헛헛하면 바로 술과 비슷한 것들에 취해서 잊어버리거나 더 센 어떤 투자나 뭐 이런 걸로 ‘살아 있어’라고 느끼고 싶어 한다거나 공허를 중독으로 막으려고 하는 이런 식의 회로가 이런 게 이 자본주의 안에 너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계발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일단 회피할 수 있는 거, 이거를 멈춰야 되고. 잘 관찰을 하면서 그러면서 데이터를 활용해야 돼요. 몇 십 년 살아보셨으니까, 지금 5~60대는. 그 사이에 역사의 변화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세계 전체도 좀 살펴보고 아~ 이런 삶은 결과가 너무 똑같구나, 어디에 살아도 마찬가지구나.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책이고 고전이예요. 고전을 읽으면 몇 천 년 전부터 인간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요. 최고의 금수저로 태어나서, 최고의 영광을 보고 그래서 심지어 몸도 건강해. 근데 마지막에 오는 이 허무를 아무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 코스에서는. 그래서 고전의 현자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철학, 공자, 노자, 붓다 그리고 종교의 선지자들. 이렇게 등장한 이유가 그 길이 아니다, 그 길에 가면 결론은 똑같아, 열심히 일하고 영광을 보다가 몰락해서 허무하게 죽는다. 이 데이터를 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디지털 문명이나 화성 여행도 그거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 몸이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백수가 돼서 고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몸이 좀 아파가지고 『동의보감』 배우게 돼서 이렇게 저를 투영할 수 있는 고전의 거울을 만나게 되면서 확신을 하게 된 거죠.



남산강학원의 '청공자'(청년, 공부로 자립하자) 프로젝트와 백수들의 탄생

정우주: 역시 고전, 고전으로 보는 내 몸, 거기서부터 출발하자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저희가 참 궁금한 건데 감이당과 남산강학원에서 같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고미숙: 2060들이.

정우주: 특별히 청년들이 많은 곳이 남산강학원 맞습니까?

고미숙: 네, 맞아요.

정우주: 그곳의 청년들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고미숙: 청년을 키워드로 삼은 건 얼마 안 되고, 그 전엔 대중지성, 대중과 엘리트가 나누어지던 시대가 끝났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글을 쓸 수 있으면 그

냥 그게 지성이다, 그렇게 대중지성 코스를 진행해왔어요. 그러다가 청년이라는 화두가 사회 전체적으로도 부각이 되고 저희들도 청년들이 생기니까 이 세대에 대한 어떤 태도를 정해야 되는 순간이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에게 촉발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안학교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개는 우리가 청년들을 위한 코스를 따로 진행하기 전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른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던 중 드디어 청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떠오르고 그때 제가 '더 넓은 곳에 가서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공부를 하게 해줘야 돼' 하고 마음 먹었는데, 개가 그때 청년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그때까지 거기서 공부해서 철학 책을 써냈어요. 20살에. 개가 책을 좋아하긴 하지만 무슨 대단한 천재성을 갖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학교 코스에서는 이게 안 되잖아요. 대학을 나와도 안 되잖아요. 대학원을 나와도 안 되고. 그런데 이 친구가 그동안 공동체 활동을 하고 철학 책도 쓰고 그러니까 너의 청춘을 마음껏 펼쳐봐라 그래서 뉴욕을 보냈어요. 본 인도 기꺼이 가겠다고 해서 뉴욕에 가서 거기 몇 년 있고 거기서 학교를 두 군데를 다니고. 왜냐하면 뉴욕에 거주하려면 학생이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쿠바를 갔는데 쿠바에 가



서 의학을 하겠다고 바꾼 거예요. 인문학을 하다가. 근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쿠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철수해서 지금은 스페인에 가 있어요. 같은 언어권이라서. 스페인의 대를 다니는데 진짜 학비도 너무 싸고, 쿠바에서는 너무 비싸가지고 고생이 많았었는데, 저는 무료라 그래서 얼른 들어가라고 그랬거든요, 한국은 또 부자 나라라서 일 년에 거의 천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스페인은 1년에 2백 몇 십만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페인에 대해서 그 급호감이 생겼지 뭐니까? 그래서 거기 갔는데 심지어 주유천(周遊天下)을 하는 중에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어요. 같이 국제 백수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계속 글도 보내고 책도 계속 내고 영어로 된 텍스트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애가 출발점이었고 그 이후에 청년세대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길래 ‘청공자’ 프로젝트, ‘청년, 공부로 자립하자’, 공부자 삶의 자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서 공자처럼 살아 보라, 공자처럼 주유천하 하면서 정말 철학적 완성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보자라는 본격적인 백수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죠. 지금 해마다 한 20명 정도가 거기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한인정: 저는 특히 이름이 독특했어요. ‘남산강학원’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남산강학원’이라고 소개를 해야 되는데, 강학이라는 뜻이...

고미숙: 그게 고전의 공부이예요. 스승이 강하고 배운다 그런 의미로 ‘강학’이라는 말이 아주 고전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나와요. 동양 고전에서.

정우주: 기존의 이런 학교에서 하는 공부량은 좀 다른 것이겠네요.

고미숙: 기본적으로 고전을 공부하는데, 고전이 또 삶의 여러 분야랑 연결이 되니까 실천, 행동 또는 사유, 여러 가지 영역이 있죠. 고전이 한 가지로 이렇게 뭉뚱그려지게 아니거든요. 동양 고전, 서양 고전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또 반드시 현대 과학이 결합이 되어야 해요. 지

금 시대는 동양 고대 지혜와 첨단 서양 과학이 크로스 되는 시점이에요. 지성사의 관점에서. 여기가 최고의 수준이에요. 동양 고전, 주역이나 불경 같은 거 하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하고 데이비드 봄(David Bohm)의 양자역학 이게 크로스 되면 인류 지성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하든 최고 수준의 지성에 도달하게 해야 해요. 연결시켜 줘야 해요. 근데 현재 우리 교육의 문제가 뭐냐 하면 진도를 맞춰 가느라고 굉장히 낮은 단계에서 머무르게 해요.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양 고전과 접속하는 순간 바로 최고 수준 하고 만나야 돼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초등학교에만 살면 초딩 사유만 하다가 끝나야 됩니까? 20대에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바로 그 지점에서 만나게 해주는 그런 방식의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거죠.

### 감이당, 정신 진화의 성소

정우주: 이해가 되네요. 저는 오늘 만남을 준비하면서 선생님이 ‘길 위의 인문학’이라는 데서 강의하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문학’을 좀 봤는데, 거기서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내시는 걸 정말 재미있게 봤어요. 특히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욕망이 화폐로만 향해 있고 그걸 축적하는 데 모든 게 맞춰져 있다, 그런데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결국에 마주하는 건 공황이나 우울일 뿐이다, 그 내용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반복된 일상, 조그마한 진료실 한 3평, 4평 정도 되는 곳에서 반복된 것들을 하고, 진료를 마쳤을 때 찾아드는 허무함이 있고, 또 통장에 찍혀있는 그 숫자뿐인 그것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이것 위해서 사는 걸까, 왜 이것 반복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좀 깨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감이당에서는 또 좀 이런 것들을 깨고 싶은 중년분들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감이당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미숙: 감이당에 온 중년, 우리가 대중지성이라고 하

는 그분들은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들이예요. 열심히 살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탄탄한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구축을 했는데, 그런데 50대가 되는 그 폐경기 혹은 갱년기가 올 때 생리적으로, 이 자리에 의사 선생님이 있으니까 이런 말하기가 참 편하네요. 몸이 ‘나 중산층이야 그리고 나 열심히 살았어’ 이걸로 내 몸의 호르몬이 알아서 ‘충만해’라고 돌지 않아요. 이게 뭐야, 이렇게 살려고 나 지금 여기까지 달려온 거야. 이런 메시지를 막 보낸다구요. 이거는 공통적으로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찾다 찾다가 우리가 삶과 삶의 일치니 뭐 이런 거를 하니까 오긴 왔는데, 와서, 진짜 제가 생각해도 황당하네, 저희는 공부, 제가 공부를 했던 과정이 있으니까, 『동의보감』도 하고 뭐 ‘사주 명리학’도 하고 『주역』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뜬금없이 오늘날 『주역』 공부를 하면서 너무 열심히 하고 갑자기 자기 삶이 진짜 우주적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5년, 10년 썩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쩔 이렇게 안 느냐고 저한테 맨날 온갖 구박을 받아도 너무 꾀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 하면 그 공허함이 사라짐과 동시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걸 정말 과학의 생물학적으로 풀고 싶은데, 인간은 진화를 해서 여기 도 달했잖아요. 우리는 물질적 진화를 여기까지 했어요, 뭘 해야 돼요? 정신의 진화를 해야 돼요. 정신이 계속 더 나아가야 돼요. 넓고 깊은 데로. 못 나가니까 거기서 생리적으로 역습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뭐 하러 살아? 이렇게. 절대 이거는 돈이나 아파트 평수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를 전 국민이 겪고 있는데도 정치적, 문화적 의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사항인데. 근데 저희는 그걸 핵심에 놓고 공부하는 텍스트들을 보는 거잖아요. 중년들이 굉장히 두터워져서 공부의 역량이 되면 다 자기 네트워크를 하도록 독립을 시키는 게 저희 조직의 방식이에요. 절대 조직을 키우지 않아요. 네트워크가 되면 감이당이란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어요. 무슨 프랜차이즈처럼 무슨 지점, 이렇게 하는 거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재

미도 없고. 그래서 지방에서 몇 년 동안 올라오던 분들이 각각 지방에 대구, 창원, 제주도, 이런 데서 자기 공부방을 차렸어요. 다만 감이당과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으로써만 우리는 함께 간다, 그것도 고전의 지혜를 통한 존재의 진화, 이거를 공유하는 한에서. 이렇게 해서 많은 중년을 구원을 했죠. 그게 청년들하고 딱 만나면서 청년펀드를 만들게 된 배경이기도 해요.

정우주: 백수로 구원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미숙: 그러니까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지혜의 비전하고 함께 하는 우정이에요. 이게 없으면 인간은 이 고립감과 단절감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정말.

정우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으면서 이게 진짜인가? 진짜 내 옆에서 일어나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미숙: 근데 진짜 내가 얘기를 하다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하고 충만한 분들은 소크라테스, 예수님, 공자님, 부처님이거든요. 그분들의 삶을 한 번 보세요. 어떻게 살았나? 정말 제가 얘기한 대로, 정신의 대자유를 위해서 살고, 항상 친구이면서 벗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죽었잖아요. 그 죽음을 너무나 충만하게 맞이했기 때문에 플라톤이 그 스승의 철학을 세세생생世世生生 전달한 거예요. 부처도 마찬가지고. 대자유를 얻은 다음에 항상 제자들과 함께 움직였어요. 공자님은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길이야, 유일한 길이야. 너무 패턴이 똑같지 않아요? 모든 문명권에서. 그런데 우리는 고립되고 단절된 채로 내 소유를 증식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당연히 행복은 포기한 거죠.

정우주: 그리고 소유를 증식하고 쥐는 방식으로 가면...

고미숙: 다 떨어지지. 사람이 없어요. 그건 필연지리必

한인정: 정우주 선생님은 점점 그 길로 근접해 가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의 대자유를 향하여. (웃음) 고립과 단절을 넘어서 정신의 대자유로 찾아가는 길.

저희가 백수에 대해서 사실 처음 이미지가 그랬잖아요, 술병에다 추리닝 입고 쓰레빠 짹짹 끌고 다니고, 그런 백수들이 그런 고민을 할 거 같아요. 고민이 실질적으로 그런 정신적 대자유로 이어지기까지의 가교로서의 ‘감이당’과 ‘남산강학원’이 있는데요. 이런 삶을 사유하는 사회가 진짜 멋있고 저도 사실 부럽고, ‘백수가 미래다’라는 말에 공감이가서 같이 백수를 꿈꾸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 거 같은데요. 반면 이런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려워, 그렇게 가기에는 너무 큰 용기가 필요해. 선생님이 아마 그쪽에도 해답을 갖고 계실 거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상을 찾았어, 이상도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내 현실은 지금 그렇지 않아. 이런 사람들에게 그 가교로서 어떤 게 필요할까? 선생님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실까 빨리 듣고 싶은데, 선생님도 얘기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2부를 마쳐야 하는가 보네요.

여기서 2부를 마치고, 3부에서는 과연 어떻게 백수로 갈 수 있고, 기본소득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희 궁금증과 선생님의 이야기가 맞닿으면 좋겠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 제 3부: 증여의 기쁨, 인류해방과 기본소득

#### 백수가 만난 기본소득, 백수가 상상하는 기본소득

한인정: 기다리셨죠? 금방 찾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저희가 백수천국, 백수만세, 백수미래 등등의 이런 해방 사회를 그려봤는데요. 그런 정말 좋은 그리고 내가 꿈꾸는 그런 모습을 가기 위해서는 가교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내가 그러고 싶은데 나는 그럴 수가

없어라고 외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와 같은 기본소득 덕후들은 ‘기본소득이 짱이다’, ‘기본소득이 그걸 가능하게 할 거야’, 이렇게 답하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혀 있을 거 같구요. 하지만 사실 꼭 기본소득만 있어서는 안 되고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명강사, 시대의 지성, 정신적 대자유의 삶을 살고 계신 고미숙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고미숙 선생님 기본소득 좋아하시나요?

고미숙: 기본소득은 그냥 알 듯 모를 듯밖에는... 사실 애매한 상태예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이 주어지는 걸 보고 뭔가 가까이 왔구나, 사실 저는 그게 귀찮아서 못 받았는데, 했어요. 근데 감이당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보면 기본소득이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 같아요. 당연한 전제. 왜냐하면 중년들이 대중지성을 하러 오시잖아요. 새로운 삶을 살겠어 하고. 그런데 오는 중년들은 상당히 경제적인 토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온다. 청년들은 자기 자산은 전혀 없죠. 부모님의 자산에 예속된 거니까. 그 예속을 뚫고 나와야 자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청년은 돈이 없고 중년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요. 감이당에서 그동안 프로그램을 하면서 기본 경비를 빼고 모아 놓은 돈이 있었거든요. 이 돈을 어디에 쓸지... 너무 뻘한 거 아니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거는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서 가야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런 네트워크가 있으면 자연히 돈은 그리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똑같이 N분의 1로 회비 내고 한다,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인간성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돈이 순환하는.

기본소득에는 돈을 대하는 태도, 윤리, 감각의 변화, 그런 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기본소득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래서 원칙이 청년은 자립해야 된다, 그러면 집을 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주거 비용이니까 주거비가 서포트가 돼야 되죠.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걸 해서 보증금 같은 것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그건 중년이 해야죠. 그리고 자립을 해서 부모로부터 나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

을 만큼의 경제적인 어떤 활동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내가 하고 싶은 여행, 내가 누구와 접촉하고 싶을 때 돈 때문에 못하는 그런 것들을 벗어나야죠.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자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유가 있어야 돼요. 나의 존엄성이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돈 때문에 못 하는 일이 없는 것. 이걸 사람마다 달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증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자본주의가 잊어버리게 한 것 같고 저는 민주주의 사회가 자유와 평등 안에 뭐가 빠졌을까 생각하면 인간이 원초적으로 증여 본능이 있다는 걸 까먹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모든 걸 다 제도에 맡겨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증여 본능으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제도에다가 제도적인 변화에만 위탁을 하고 본인들의 소유욕과 이거는 계속 그대로...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이 소유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을 보고 박탈감만 느끼는. 근데 돈은 기본적으로 도는 거예요. 저는 우리말의 ‘돈’이 너무 적합한 용어라고 생각해요. 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돌게 만들어요. 돌 중에 하나예요. 내가 돌거나 돈이 돌거나.

#### 남산강학원과 감이당의 돈의 흐름, 혹은 미리 구현된 기본소득

정우주: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남산강학원과 감이당에서의 이 돈의 순환이 저는 기본소득과 닮아 있는 지점이 그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뭐냐 하면 흐름 때 받는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 조건이 붙지 않는 것, 기본소득도 이걸 받는 사람이 어떻게 쓰든 아무도 관여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인 지급을 한다는 것이 낙인도 찍지 않고, 단서가 붙지 않는 게 남산강학원과 감이당에서 이루어지는 돈의 흐름과 기본소득이 닮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미숙: 그런 마음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는 같이 공부를 하면, 좋은 공부를 한다는 건

그 안에 재물을 어떻게 나누는가가 반드시 있거든요. 좋은 공부란 재물이 내가 과연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들 삶에 이게 막 돈이 돌아다니면서 흘러오고 또 청년들이 주방이랑 카페 운영을 하고 그러면 엄청난 음식 선물이 들어와요. 그럼 1년 내내 너무 잘 먹어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한다고 더 많이 들어왔는데, 뭘 고생했는지 모르겠는데, 매일 최고의 과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뭐가 순환이 되네, 그러니까 애네들은 돈은 도는 거다, 증여, 조건 없는 증여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근데 사회 문화적으로 그런 걸 배우는 곳이 없다는 거죠. 이게 너무 슬픈 일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청년펀드를 조성해서 감이당의 기본자금하고 청년들이 주로 조성을 했는데 너무 생각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거기에 결합을 하셔서 좀 놀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냐? 그런 식의 증여를 할 기회가 차단돼 있었다는 거죠.

#### 증여의 기쁨과 기본소득

정우주: 모두가 증여를 하고 싶었는데...

한인정: 근데 사실 기본소득은 지금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의 하나의 형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본소득은 빼앗기는 것, 세금을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국가에게. 근데 여기처럼 조건 없는 증여를 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기본소득을 하게 될 때 ‘청년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왜 내 돈을 빼앗아서 저런 백수들한테 줘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고미숙: 그건 정말 20세기 초기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감각인 거죠. 일단 거기에 노동에 대한 태도나 시스템에 대한 여러가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교정이 안 된 거고, 어떤 점에서 그걸 조장한 점도 사실 많이 있고요. 근데 어차피 세상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내 세금으로 이렇게 조건 없이 증여를 할 때 기쁨을 모두가 누린다 이런 철학과 더 나가면 영성이 결합이 되면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을 거



예요

저희 청년펀드가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무려 2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공동체 활동을 하게 했어요. 공부가 경제활동이 되게, 그러니까 어디에 고용된 게 아닌데 경제활동이 되게. 저희 공동체로서는 큰 돈이었어요. 1년에 인건비가 1억, 2억 들어가면, 다른 데서 보면 아주 작은 돈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아까 얘기한 노동의 소외, 소비의 소외, 여기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는 거, 이게 왜 불가능한가? 그래서 요즘 저의 고민은 사실 그 돈을 어떻게 돌려서 더 많은 청년들한테 줄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어떤 지점을 아주 잘 찾아내는 그런 것이 저의 유일한 고민거리예요, 사실은.

한인정: 그럼 혹시 감이당에 들어오신 중년 분들 중에 나는 사실 그런 청년 펀드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셨다가 실제로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더 공감을 하시게 된 분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고미숙: 많죠, 너무 많아요. 아니 그런 거 아예 상상도 못해 봤고 아예 돈을 그렇게 쓴다는 걸 상상을 못한 분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랬는데, 청년들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것만으로도 중년들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삶의 활력이 생겨요. 뭐라도 주고 싶은데, 돈이 많아요, 중년들. 저는 이 많은 돈들, 이것만 써도 기본소득은 다 될 것 같은데... 청년들한테. 우리나라 중년들이 주머니 열면 청년들 지금 20대 일자리 그렇게 얻으려고 발버둥칠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한인정: 선생님 말씀은 일단 기본적으로 해보면 어떤 변화가 있을 텐데...

## 2060의 우정의 공동체와 인간관계의 고리로써의 기본소득

고미숙: 그런데 문제는 저희는 이렇게 생활과 공부로 네트워크화되어 있으니까 증여의 기쁨이 자기의 삶과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세금을 통해서 가는 것은 너무 추상

적인 거야.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백수는 애가 너무 게으르고, 애가 성격도 이상해. 이렇게 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조건이 없어야 돼요. 그게 어떤 거든 증여에는. 고전을 배우면 다 나와요. 내가 그걸 갖고 생색을 내는 순간부터 이미 증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돈을 다 증여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태양의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태양에게 보답을 하지 않잖아요. 보답을 하십니까? (웃음) 아무 고마움도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우리에게 남는 것을 순환시킬 때 어떤 조건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그 자체로 기쁨이죠. 그 기쁨이 보답이에요, 유일한.

그래서 기본소득이 제대로 순환이 되려면 그야말로 곳곳에, 로컬 지역마다 청년과 중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해요. 사실 20대와 60대가 친구가 되기에 가장 좋은 나이에요. 이것도 제가 이걸 해봐서 알죠. 이거 생각을 못하셨죠? 친구가 동년배는 곤란해요. 왜냐하면 너무 경쟁이 심해요. 원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게 돼요. 나이 들면 동창에게 의지하는 거 아주 안 좋습니다. 나중에 혼자 남아요, 혼자. 맨날 빠지고 돌아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근데 60대하고 20대는 질투의 대상이 아니에요. 서로. 삼각관계가 생길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환상의 콤비예요. 저희는 그거는 진짜 확실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얘기할 수 있어요.

정우주: 세대적 관점으로 보는 게 맞냐, 아니냐? 그리고 혹은 이거를 세대 내에서도 그런 계급적인 것들을 좀 봐야 되느냐, 이런 여러가지 얘기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지금 남산강학원과 감이당에서 보여지는 이런 순환 그리고 세대 간의 우애 이런 것들을 좀 사람들이 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고미숙: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뉴스 보면 막 20대하고 60대가 지금 보면 가장 막 뭐라고 하지? (정우주: 정치적인 관점이 다르고 하여튼 서로 막...) 서로 굉장히 관계가 안 좋은 것처럼 나오는데 그건 정말로 사회의 고정관념이 만들어내는 표상이에요.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친구가 될 수 있다. 음양의 조화의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20대한테 60대 친구는 너무 편해요. 아무리 내가 밥을 얻어먹어도 괜찮은 상대예요. 그런데 또 자기 고민도 마음껏 얘기하고, 자기 단점 다 말할 수 있죠. 60대는 청년하고 친구가 되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노년이 재미있게 됩니다, 노년이 풍부해져요. 노년에 노년들끼리 있으면 안 돼요. 이걸 노년복지에서 정말 꼭 고려해야 돼요. 그거는 정말 쓸쓸한 소멸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순환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손자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가족 단위에서 이제 그것도 끊겼잖아요. 손자를 접할 수 있는 노년이 점점 드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친구가 있어야 돼요.

한인정: 진짜 아니 저 되게 뭔가 땡 한 게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할머니가 저한테 왜 이렇게 힘주고 사냐, 마음껏 웃고 살아가 하시더라구요. 그 할머니 보면서 사람이 죽는구나, 죽을 수 있구나, 어차피 그 유한한 삶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삶에 힘을 꽉 주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만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선생님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사실 가장 와 닿는 부분은 기본소득이 화폐로서만의 의미가 아니라 관계로서의 기능 (고미숙: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세대 사이의 관계와 세대공감...) 등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소득 외에 다른 조건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이 관계를 만드는 남산강학원...

#### 혈연과 가족을 넘어서는

#### 돈의 순환의 필요성과 기본소득

고미숙: 이 관계에서 또 중요한 게 혈연과 가족을 넘어가는 돈의 순환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친구가 되어야 해요. 세대는 뭐 이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혈연을 넘여가지 않는 돈, 이게 지금 자본주의가 사람들을 아주 불행하게 만든 원인이예요. 동네에 청년이 있는데 내 자식이고 아니고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 큰 다음에. 그리고 내 자식은 부담스럽지만 내가 나가서 만난 청년 친구는 너무 편

하고 좋아요. 친구잖아요. 그럼 거기 당연히 학비 주고 여행 보내주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자식한테 물려주는 건 뭐 여러 가지로 찜찜하고. 까르마 이론에 따르면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자식한테 돈 물려주는 건 여러 모로 모두를 진짜로 불행하게 만들지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근데 달리 길이 없으니까 자식한테로 다 물려가잖아요. 그러면서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트워크 안에 청년 친구가 있어, 근데 가난해, 부모님도 뭐 변변치 않아, 당연히 돈이 흘러가죠.

한인정: 진짜 선생님 얘기해 주신 거 들으면 백수만만세 사회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것 같아요) 기본소득과 제가 오늘 들은 것처럼 정말 네트워크를 정말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공동체들이 더 많이 형성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역시도 지금 제 주변에 정말 많은 백수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10년 전에 선생님 강의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도 생각하지 않고 돈도 없는 지금 제가 이렇게 행복한 거 같아요. 고미숙 선생님의 오늘 이야기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 출연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선생님 모신다고 그래서 약속하지만 선물을 준비했는데 저희가 특별 이벤트로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우주: 저희가 선생님 오신다고 해서 특별 이벤트로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나 뽑아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진짜 잘 뽑으셨네요. 굉장히 좋은 선물, (한인정: 정신적 대자유로 가는 선물인가요?) 선생님께서 뽑으신 선물은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지음, 박종철출판사, 2021)을 뽑으셨습니다. 와, 이렇게 잘 뽑으실 줄이야.

고미숙: 이런 식으로 책 광고를 참...

한인정: 이 책은 어떤 책이에요?



정우주: 이 책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지난 2년간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이 어떻게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까를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해서 그 결과물을 담은 책입니다.

고미숙: 다행히 생각보다 안 두꺼워서... 저는 두꺼울까 봐 아주 고민이었는데...

정우주: 신의 손이에요. 어떻게 이걸 딱 뽑으시는지, 대단하십니다.

한인정: 오늘 어떠셨어요, 선생님.

정우주: 저는 우선은 굉장히 감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전과 이후로 인생이 달라질..(고미숙: 여기는 대체로 좀 뽕이 많은 분들이 결합하는구나. 가슴이 다 헛헛해.) 아니 진짜로 마음속에 어떤 씨앗처럼 늘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깨야 되겠다 하는 용기를 더 얻는 그런 시간이었고 기본소득이 우리가 갖고 있는 화폐에 대한 감각, 관계에 대한 감각들을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인정: 저도 오늘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역시 백수로서의 정체성을 더 확립하고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더 이렇게 살겠다는 걸 다시 한번 공표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여기서, 너와 나의 연결고리 파문 정말 제대로 퍼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고미숙 '백수가 미래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파문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음 편에도 기대하시는 그런 인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제 다시 시작이다

- ‘파문’ 지상중계 #2, 김세준 편

## 제 1부: 일자리가 답이 아니다

‘돌연’ 기본소득운동을 참여하게 된 까닭은?

한인정: 안녕하세요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이신 김세준 대표님이십니다. 저는 고정MC 한인정이고요, 그리고 제 옆에는 객원MC로 오신 서회원 선생님 이십니다. 서회원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서회원: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 받은 서회원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 시민교육실현실 ‘해’ 대표를 맡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가치와 기본소득의 가치를 좀 더 널리 알리고자 공부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고, 현재는 민주주와 기본소득을 좀 더 알리기 위해 작은 책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인정: 책방을 하신다니, 부산에 이제 갈 곳이 한 곳 더는 것 같아요.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파문의 두 번째 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회원 선생님, 우리 게스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서회원: 김세준 대표님을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대표님께서도 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셨고, 학생운동도 하셨고, 대기업에 취업하셨고, 잘 나가는 헤드헌터로 닥스HR 대표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돌연 기본소득운동에 참여하여(웃음)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

대표가 되셨습니다. 정말 인생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김세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김세준: 안녕하세요. 김세준입니다.

한인정: 선거 끝나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김세준: 아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밥 잘 먹고. 한동안 약간 침울하긴 했었는데, 이제 좀 다시 밥을 잘 먹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다시 기본소득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다시 다짐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서회원: 밥심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뭐 걱정이 안 되는데... 그래도 바쁘신 일도 있으실 텐데 그 와중에 저희 프로그램에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김세준: 아, 제가 감사하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한인정: 저희 말고, 여기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웃음) 코난처럼 뒷조사를 좀 해보니까, 되게 이미지가 있으시더라고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되게 잘 나가는 강연, 그리고 저서들, 이런 것도 있으시고. 그래서 궁금했었는데요. 돌연 기본소득운동에 참가했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그전에 어떤 일을 하셨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김세준: 저는 그냥 평범하게, 열심히 살려고 하며 살아 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정치학을 전공했지만, 직장생활을 아시아나항공에서, 인사팀에서 채용 담당을 했고, 그러다가 IMF 때 구조조정 담당을 했어요. 사람을 내보내는 그런 리스트도 작성하고 통보하는 역할도 하고. 그때 제가 좀 약간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돌연. (웃음) 직장생활을 하다가 돌연…… 책을 여러 가지로 썼어요. 지금까지 서른다섯 권의 책을 썼거든요. 리더십 책도 쓰고, 동화책도 쓰고, 그다음에 취업 관련된 책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강연 의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업에서도 강연을 하고… 그리고 현재는 국민대학교 겸임교수로 일하면서 학생들의 미래 진로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상담도 하고 교과목도 맡아서 강의를 하고 전국의 대학에서 특강 같은 것도 하고 기업에서 특강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바쁘게 살아왔고 그러다가 돌연 또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인터뷰까지 이렇게 하게 됐네요.

한인정: 진짜 엄청 바쁘게 살아오셨네요. 아까 얘기하

시면서 회사가 아니라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런 스스로 먹고사는 걸로 기본소득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렇게 험난한 기본소득 운동에 뛰어들게 되신 어떤 계기나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김세준: 글썄요, 험난한 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험난해질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고 그래서. 그런데, 즐거운 험난함. 그리고 사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았을 때는 험난하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아실 거예요, 2020년 하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 ‘아, 국가에서 이렇게 조건 없이 줄 수도 있구나’라는 인식이 생겼고, 대한민국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장 급속하게 진행되어 왔고 사람들도 플랫폼노동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기본소득이 필요하구나 복지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인식이 형성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기본소득 국민운동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확산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확산세가 좀 컸죠. 근데 그건 아마 저희가 노력한 것보다도 저희는 편승해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험난하지는 않았고요. 네, 그렇게 온 것 같아요.

###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와 기본소득

서희원: 학교에 있으시면서 청년들 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으실 텐데, 지금 청년들이 더 힘들잖아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와 기본소득을 같이 묶어서 말씀해주신다면….

김세준: 기본소득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건 청년들의 일자리 때문이거든요. 대기업들이 사람을 너무 안 뽑습니다. 예전에는 공채 같은 것도 있었죠. 학교가 떠들썩하고 그랬거든요. 3월, 9월 되면 캠퍼스에서 채용설명회가 열리고 그랬었죠. 우리들 일자리는 그래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들의 일자리가 자꾸 사라지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국가에서는 자꾸 청년들에게 창업을 하라고 권하는데 청년들은 또 창업자금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창업에 대한 교육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너무 외로운 거죠. 그리고 코로나를 맞아서 아르바이트 자리도 사라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국가에서 이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기반을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단지 취업교육이라든가, 청년들을 위한 창업교육, 이런 거 이외에 기본적으로 적어도 1년 동안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뭔가 터전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기본소득이라는 걸 알게 됐죠.

특히 제가 예전에 이재명, 이번에 상임고문이 되셨지만, 대선 후보자의 책을 썼어요. 『이게 나라다 - 적폐를 청산할 전투형 리더 이제는 이재명이다』(2017), 『이게 나라다 2022 - 인간 중심 실무형 리더, 이제 이재명이다』(2021). 그분의 발자취를 이렇게 쫓다 보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청년들한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이러면서 요게 답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봤더니, 또 강남훈 교수님이 튀어나오고, 강남훈 교수님을 또 연구하다 보니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라는 조직이 있고, ‘이미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

구나’라고 해서 저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강연요청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산에서도 했고 안동에서도 했고… ..뭐 그렇게 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관심을 넓혀오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죠.

서희원: 기본소득이 청년들한테는 도전, 기회, 리셋할 수 있는 기회…

김세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청년을 위한 기본소득, 그러나

###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청년들

한인정: 그런데 사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는 좀 다르게 지난 정부에서도 일자리가 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청년들 역시도 기본소득보다는 우린 일자리를 원한다고 하는 경우가 더 많고, 인식 조사만 봐도 중장년층보다 오히려 청년층에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그런 결과도 나왔거든요. 그 현상에 대해서는 좀 분석해주신다면…

김세준: 청년들이 반대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충분히 이해는 돼요. 왜 그러냐면,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프레임 속에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도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누구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죠, 높은 급여와 높은 수준의 복지혜택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누구나 원하는데 이런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청년들한테. 필기도 준비를 해야 되고, 면접도 준비해야 되고, 게다가 요즘 기업에서는 또 중고 신입을 원하거든요, 경력(자) 같은 신입을 원해서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아르바이트도 없이 적어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점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다 보니까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은 이런 절대적인 시간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경제적으로, 물론 경제력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어떤 지원을 받는 학생들은 절대적인 시

간을 확보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건, 정말 개인들한테, 가  
장들한테 이런 걸 계속 요구하는 사회가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국가에서 청년기본소득이 조금이라도  
주어지면 경기도처럼 그러면 그래도 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 플랫폼 노동의 상당 부분을 청년들이 합니다. 예술  
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국가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그리고 또 창업을 하기를 원한다  
고 그러면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 여  
건이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창업현실은 창업을 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은 그냥 패자가 돼  
버리죠.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창업  
을 하면서도 실패를 했을 때도 먹고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강한 거죠. 그래서 기  
본소득이 주어져야 되고. 또 우리 끈대적인 생각이 그런 거  
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  
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자녀들한테 진짜 백억 원짜리 건물  
을 물려주고 몇백 억짜리 사업을 물려주고 그런 조건이 된  
다 그러면 고생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시겠어요? 정말 백 억  
짜리 사업체를 물려주는데 자녀가 고생도 안하고 이걸 받는  
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고생을 시켜야죠. 근데 우리가 앞  
으로 물려줄 사회는 결코 그렇지가 못해요. 정말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이 전염병이 2년 이상 가는 이런 세  
상, 가난할 게 뻔하거든요. 이럴 때는 힘들게 뻔하니까 오히  
려 없는 돈 털어서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오히려 고기를 사  
주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바로, 전국민기본  
소득은 못하더라도, 청년들한테 먼저 기본소득을 좀 해주는  
게 국가에서 밥 한 끼 대접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측  
면에서 저는 청년들 먼저, 범주형 기본소득으로서 실시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좀 찬성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  
에서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인정: 범주형 기본소득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과  
연 안정된 일자리를 위한 기본소득, 그리고 그게 전국민기  
본소득으로 이어지는 어떤 논리도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세준: 그러니까 범주형 기본소득은, 여기 전문가들  
이 많이 있으시지만, 기본소득에서 범주형 기본소득은 원래  
고전적인 의미에서는 없죠. 보편성이 훨씬 중요한데... 저  
는 이번에 한국형 기본소득으로서의 청년기본소득을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현실  
에 맞게 현금보다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주고 이런 것들도 한  
국 현실에 너무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이 이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한데 청년들한테 먼저 주거나 혹  
은 농민, 좀 급한 분들한테 먼저 지급을 해서 국민들이 이런  
것들이 오히려 경제를 살린다는 체험을 한다고 그러면 오히  
려 보편적 기본소득을 확산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기본소득이라도 먼저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범주형 기본소득을 저는 찬성  
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정: 이렇게 딱딱 맞네요. 가교로서의 어떤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어떤 현실에서 출발한  
문제 인식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본소득 지지자가  
되었고. 이 고민들을 중요한 거는 혼자만 하신 게 아니라 함  
께 풀어나가고자 만든 단체가 있잖아요? 그게 기본소득국민  
운동본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아마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에 대  
해서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세준: 네 드디어 기대하던... 사실 저희 본부를 소개  
하러 나왔는데, 그걸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한인정: 이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 홍보, 시작하도  
록 하겠습니다.

## 2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기본소득을

기본소득을 향한 거대한 파도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의 탄생



한인정: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를 이제 전면 해부해 볼 생각인데요. 우선 기국본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 대표님한테 기국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탄생 비화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김세준: 알에서 깨어났습니다, 박혁거세처럼.(웃음) 죄송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원래 10월에 군산에서, 여기 서정희 선생님도 계신데, 자발적인 모임이 생겼어요. 기본소득연구회라는 곳이. 시민들이 점차 기본소득 없이는 살아가기 힘들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만든 단체예요. 발족할 때 제가 거기서 기본소득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 강의를 보고 이제 많이 고민했던 분들이 기본소득 전국적인 운동을 해야 되겠다... 국민운동은 새로운 전기가잖아요, 그전에는 전문가 분들이나 학자 분들 아니면 정치인 분들의 이너서클 안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던 것 같고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저희는 운동본부잖아요, 국민운동본부.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분들이 모여서 이걸 확산시키자는 그런 운동본부이기 때문에 이걸 시작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꽤 있으셨던 거 같아요. 기본소득 농민운동도 사실 2010년도부터 시작되고 상당히 뿌리가 깊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걸 어떻게 만들까, 그전에 시도했으면 별로 이런 식으로 확산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 2020년 말쯤에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제가 강의한 걸 보고 몇 분이서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같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10월 말쯤에. 저도 얼떨결에 나갔는데 상당히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고 저도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발족을 시켜보자, 뜻을 모은 거죠. 그랬다가 12월 초에 특히 강남훈 교수님께서 또 합류를 해주시고 이래서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강남훈 교수님 하면 정말 거목이시잖아요. 그분이 공동대표로 참여를 해주시고. 저는 그분이 상임대표를 맡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직책이 있으시고 학자로서 또 뭐 정치인과 또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있으셔서. 약간은 좀 고사를 하셨고 그러면서 저한테 상임대표를 좀 맡아보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고민을 했어요. 저

는 뭐 진짜 이렇게 들보잡이기도 하고 그런 공격도 좀 많이 당했어요. 네가 뭔데라는 공격도 많이 당했어요. 진짜로. 그런데 제가 그때 생각을 했던 건 진짜 국민운동본부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좀 말아야 되지 않을까, 피부로 현실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느끼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본부가 꾸려져야 되지 않을까 너무 대중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한 거죠. 이렇게 한 거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통했던 것 같아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그래서 발족식을 했고 그리고 걱정을 했죠. 이걸 어떻게 확산시킬까? 그런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언론에 나가고, 국회에서도 이렇게 출범도 알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연락들이 오니까, 전국에서 우리가 이 지역에 출범을 하고 싶다 그래 가지고 2020년 12월 22일에 경남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막 내려가는데 여기로 또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 최배근 교수님이 또 합류를 하셔서 그날 같이 토크쇼도 해주시고 그런 게 유튜브 생중계에도 나가고. 그러니까 1월부터 정신 없이 출범이 막 시작된 거죠. 이것들 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해가 있었어요. 이재명 조직 아니냐 이런,, 이따가 또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지만 정치 조직 아니냐고 그랬는데, 아니었어요. 정말 순수하게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특히 상주 같은 데 가보면 정말 농촌이 소멸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너무 간절하게 원하시더라고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기본소득밖에 없다, 그래서 막 참여해 주시고. 마을잔치 같은 분위기도 나고 막걸리 마시면서 출범식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저희도 모르게 이렇게 막 온 것 같아요. 전철역에 아침에 특히 신도림역 이런 데 보면 출근시간에 거기는 정말 난리가 나서 안 걷고 있어도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철을 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열기가 뜨거울 줄 몰랐습니다.

####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에 대한 오해들

서희원: 대표님께서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기국본을 이

재명 대통령 만들기 외곽조직으로서 인식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오해를 조금 풀 수 있는...

김세준: 그러니까 그게 언론의 힘이 컸던 거 같아요. 그 당시에 논쟁이 아주 치열했었죠. 작년 1, 2, 3월에. 저희는 되게 반가웠는데... 여당 내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이재명 후보 말고 다른 분들은 유력하신 후보들은 기본소득에 상당히 부정적이셨어요. 그러니까 막 서로 첨예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이 퍼졌죠. 그러면서 기사에 뭐라고 했다면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이렇게 기사를 내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비판적 지지를 했던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정강정책 1호로 기본소득을 내세우고 그래서... 저걸 지지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민주당 내에서 집권 여당이죠 여당에서 기본소득 관련된 법안이 발의된 게 별로죠. 오히려 국민의힘하고 기본소득당에서 해왔고 그래서 저희는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시민운동단체로서 근데 민주당 내에서 대선 후보 중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을 제일 적극적으로 하니까 저희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희가 축하 의뢰를 드리면 그분이 또 흔쾌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주요한 공약으로 내세우는 분이 또 축하를 다 해주셨거든요. 출범식마다. 사실 그분만 해 주신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순수 운동단체였고 대신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이번에 대선이 있고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내세우신 분이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되니까 우리는 이게 아주 좋은 기회다. 기본소득 논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한인정: 그렇게 이제 오해가... 종결이 된 거 맞죠, 여러분들? 사실 되게 급성장하게 된 배경에 막걸리 마시면서 마치 마을 잔치 같은... 그러니까 다 사람들 마음 안에 뭔가 기본소득에 대한 필요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성장한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전국 단위 조직으로 성장하게 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거죠?

때를 만난 사상의 힘과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의 폭발적 성장

김세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가 맞았던 것 같아요. 강남훈 교수님께서 항상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때를 만난 사상은 막강한 군대보다도 강하다.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항상 출범식에서 축하를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그랬던 거 같아요. 하필 그때 때를 만난 거예요. 2019년도 아니고 2018년도 아니고 2020년에 때를 만난 것이죠. 전국적으로 저희도 당황할 정도로 확산이 됐으니까. 그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인정: 혹시 생각 나는 예시 같은 거 있으실까요? 만났을 때 내 삶의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이런 걸 들으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김세준: 저는 상수도 기억이 나고, 특히 성남에서도. 성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모임에 인원 제한이 있었잖아요, 밖에서도 많이 기다리시고 못 들어오시고 그러셨는데, 성남 하면 체험을 하신 분들이죠, 이재명 성남 시장 당시에 청년들한테 기본소득을 주었으니까 기본소득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이었는데,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성남이 좀 더 뜨거웠죠. 제가 거기서 강연을 했거든요. 끝나고 연세가 지긋하신 여성분께서 떡볶이집을 하다가 좀 안 좋아지셨나 봐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오셨대요. 그분이 전국민 기본소득이나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모르셨을 거 같아요. 근데 답답해서 오셨대요. 듣고 나니까 이게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힘내라고 격려를 해주시기도 했고... 여수도 기억이 나는데, 여수는 청년이 처음으로 출범식에 참석을 했어요. 엄마가 어디 간다 그래서 자기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답한 걸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현금을 뿌리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이걸 다 떠맡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바로 이번 대선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공감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저는 기본소득 이슈가 핵심으로

등장을 해서 토론회도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대장동 사건, 뭐 이런 거에 다 파묻혀 가지고 기본소득은 나오지도 않았죠. 얘기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20대들에게 얘기할 공간도 부족했고.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 대선 이후, 혹은 실패 이후

서희원: 대표님께서 상임대표라는 큰 직책을 맡으셨잖아요? 지금 대선이 끝난 시점에서 상임대표라는 위치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계신지…

김세준: 저는 좀 더 제 역할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재명 대선 캠프에 각자 참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역할들을 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가 많을수록 후보자가 느끼는 압박도 좀 커질 것 같아서 저희는 참여를 해서 많은 역할들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헌혈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보자는 취지로. 저도 처음으로 헌혈을 해봤고, 굉장히 아프더라구요. 줍깅[줍기와 조깅을 합친 말] 행사도 하고. 그러니까 유세가 끝나면 우리들이 남아서 쓰레기도 줍고, 이게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운동본부 차원에서 참여를 한 건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역할들을 좀 해냈는데… 질문이 뭐였죠?

서희원: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국본이 시민운동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이재명 만들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유력후보의 외곽조직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는 소멸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거든요.

김세준: 아닙니다. 아, 이제 질문이 생각났어요.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기대를 많이 했어요.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분이 대통령이 되면, 이거는 이제 뭐 시간의 문제지, 보편적인 전 국민 기본소득이 실현되

는 정말 좋은 환경이, 더 좋은 환경이 마련되겠구나 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잘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기본소득도 같이 끝나는 건 아닐까라고. 약간 본의 아닌 착각들을 했던 거 같아요. 실망을 하면서. 이 대선이 기본소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좀 했던 거 같은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생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아니구나, 기본소득운동은 도도하게 흘러 오고 있었는데, 이 안에 큰 파도가 있었고 우리가 파도의 끝까지 올라갔다가 (파도가) 잦아드니까 차분하게 다시 돌아 오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지, 이거는 대선이라는 사건이 있었을 뿐이지 기본소득이 끝나는 건 아니었잖아라고 생각을 하셔서 다시 좀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면서 다시 해봅시다, 그리고 기국본이 다시 기본소득을, 기본소득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잘 살기 위한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해내자라는 격려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가 뭣했어요, 한 번. 반성도 하고 평가하는 걸 광주에 가서 했었는데, 뭐, 저희는 갑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는. 그리고 오히려 운동을 좀 더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사단법인화를 한다든가, 이런 거.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중심이 되지만,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기본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아직은 좀 걱정이 된다, 그렇지만 기본금융이라든가 기본주택 이런 거는 찬성한다 하는 이런 분들까지 같이 묶어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기본소득이 중심이 돼서 좀 더 묶을 수 있는 쪽으로 갈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역할들이 주어질 것 같아요. 기대가 큼니다. 압박이 올지 뭐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고개를 더 세우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여기 있는 우리들이 희망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힘들수록 우리를 쳐다보게 하고 우리가 그때 희망을 얘기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희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함께 일할 게 많을 것 같네요.

김세준: 그렇죠. 그동안 정치공동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왔잖아요. 저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얼마 전에 찾아왔을 때 기본소득 공동행동을 더 강화하자, 연대를 더 강화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계속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인정: 아까 얘기해주신 그 부분 중에 기본은 참 좋은데 기본소득은 우려스럽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 것처럼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에는 정말 다양한 색깔, 다양한 층위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장점일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통합을 해나가실 건지...

김세준: 그러니까 저희는 일부러 통합을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뭐냐면 일단 시간이 걸릴 거 같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그때 기본소득 공론화작업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확신이 있어요. 기본소득은 알면 찬성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높은 액수로 하는 것에 걱정이 있는 것이지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반대하는 분들 있죠. 기득권 세력들. 기본소득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분들도 이해해요, 왜

지금 기본소득이나. 이해하지만, 어쨌든 기본소득이 실제로 필요한데, 걱정이 많으신 분들, 너무 착하신 거죠, 저는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어느 가정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웠어, 그러다가 좀 살림 형편이 핀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한 거야, 자녀들한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아버지 우리들한테 용돈을 줬다가 예전으로 어려운 상태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제 정신이세요 하는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아 용돈 받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처럼, 앞으로 공론화 작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공론화 작업을 했더니 반대했던 분들이 상당수 찬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 안에도 다양한 스펙트럼들이 존재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려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급진적으로 좀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필요하다는 건 공통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 내부에서 앞으로 같이 토론하고 해나가야 하겠죠. 지금까지는 출범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공론화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우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뜻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

쥔. 그런 것들을 정치공동행동이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랑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 기본소득 관점에서 본다면, 20대 대선이란?

서희원: 또 한 번 대선 얘기를 조금 하면 대선을 준비하  
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왔다 갔다  
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기국본이 어떻  
게 바라봤는지...

김세준: 근데 왔다 갔다 한 부분은 전술적인 측면이 아  
니었을까 싶어요. 비전이나 목표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선 과정에서 청년들, 특히 이대남들  
이 좀 부정적인 것들이 많다, 그래서 이게 좀 반대를 결집시  
키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약간 후퇴를  
했었고 그런 측면이었죠. 전체적으로 큰 틀은 변함이 없었  
습니다

서희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정치적 프레임 싸움에 기  
본소득은...

김세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술적인 전략적인 차원  
에서 그랬고요. 특히 이번에 기대를 좀 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짜 기본소득 가지고 막 서로 얘기를 하고 안심소득 얘기하  
고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공론의 장이 사라진 거죠. 너무 그  
프레임, 정말 부정적인 프레임, 대장동 이런 것들, 그런 거였  
죠. 또 무슨 뭐 무당,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저희도 오히려 더 강력하고 전략적으로 더 적극적인  
전략을 썼을 텐데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해서 국가가 더 부담  
을 갖지 않느냐 이런 쪽에 강해져서 약간 전술상 후퇴, 이런  
것들은 좀 있었지 기초는 다 똑같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시차(時差, 視差)를 두고 본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한인정: 이번 대선에 맞춰 저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에서도 기본소득 로드맵이라는 책을 냈었는데 혹시 보셨나

요?

김세준: 아, 그럼요.

한인정: 당연히 보셨으리라 했었어요. 그때 로드맵으로  
저희가 제시했던 안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세준: 그때 서정희 교수님과 이사장님이라 다 해가지  
고 토론회를 했었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책을 보는데 학  
생운동 할 때의 심정으로 읽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  
서 리얼리스트가 되자 막 이러면서 막 여기 계신 분들이 쓴  
표현이... 정말로... 우리가 계속 읽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좀... 확신이 저도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당 떨어질 때처럼,  
그럴 때마다 읽으면 확신이 다시 생기고, 어쩔 그렇게 와 정  
말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합시다, 하자 이런 것처럼 구호식  
으로 책을 써 주셨잖아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좀 반  
가했습니다.

그리고 든 생각이 이거대로 됐으면 좋겠다, 몇 년 안에  
90만 원으로 가고. 근데 그 당시에, 토론을 했을 당시에 제가  
좀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었을 때였어요. 왜 그러냐면,  
출범식을 너무 많이 해서. 뭐 이런 거예요. 고성에 있다가 울  
산을 가고. 거의 매일 밤을 새다시피 다니느라 대상포진도  
오고 그랬었거든요. 또 그 당시가 공격들이 좀 많았을 때였  
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경선을 하면서 반대 의견도 많고. 그  
런 반대 의견을 자주 만나면서 그때 저는 약간 좀 조심스러  
웠죠.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고 다녔다면 시작은 좀 작게 합  
시다, 그래야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이게 좀 더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작은 액수에서 시작을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정말 예전에 바랐던 애  
기들이 나와서 나도 지금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를 하면서  
출범식할 때 얘기했던 그 얘기를 좀 하고 다니고 싶었던 거  
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어서, 그 토론회 때...  
서정희 교수님이 제 오른쪽에 앉아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시작하는 거로서는 너무 좀 많지 않느냐  
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오히려 너무 적극적이어서 좀 부



정적인 게 나오지 않느냐는 우려를 얘기하기도 그랬었거든요. 그거는 꿈과 같은 얘기죠. 그런데 이걸 실현시켜 나가는 게 저희 숙제잖아요. 몇 년이 걸리든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그 책을 읽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앞으로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 이제 다시 시작 -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의 자세

서희원: 6월 1일이 지방선거일입니다. 대선 일정이 이제 끝났고 지방선거 때 기국본이 기본소득 관련해서 어떤 할 일이 있을지...

김세준: 오히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가 더 자유롭게 더 적극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 같아요. 대선 때는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러웠거든요. 자꾸 어떤 후보랑 연관을 시키니까 그리고 선거법이라는 게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이제는 대선도 끝났고 그래서 이제는 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는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지를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대선과정에서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반응이 너무 뜨거웠어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에 계신 분들 중에 특히 경북, 충남, 전남 그런 데 계신 분들이 호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기초단체라든가 이런 데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유력하신 분들이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저는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안민석 의원도 그렇고 조정식 의원도 그런데... 조정식 의원님에게도 한 번 갔었거든요. 저희가 지지선언을 하러 간 건 아니고 기본소득 공약을 내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도 이거는 끝까지 지켜나가겠다 했던 것처럼, 이제 저희도 지역의 각 본부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아마 이런 역할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방선거를 통해서 저희가 더 많은 논의를 확산시키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희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김세준: 이제 그렇게 해 나가려고 다들 자발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에서 일을 하였던 분들이 지금 지선에 많이 나가고 계시요. 그렇기도 하고 전북의 천호성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상임대표님이세요. 그어니까 청년교육본부 상임대표님이신데, 이번에 교육감 선거에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분이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신데, 가서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지 얘기를, 이번 일요일날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회원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신 분들은 이미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서희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로드맵을 만들었듯이 기국본에서도 지방선거와 관련된 로드맵이 새롭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세준: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4월 중에 아마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여, 영원하라!!

한인정: 대선과 지선, 다 거쳐지고 나서 그 이후에도 기국본은 계속 유지되고 활성화될 텐데 그때 과제는 그럼 공론화 과정이라고 보면 될까요?

김세준: 공론화일 거 같아요. 공론화일 거 같고, 이번 새롭게 탄생하는 정부에서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도록 그리고 실현될 수 있도록 압박하는 역할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그 생각이 더더러고요, 막걸리 한 잔을 하고 있는데,



투쟁본부 같은 역할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단식농성을 할 일도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그냥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인정:머리를 이렇게 한 번...

김세준: 아니, 머리는 안 깎겠습니다. 수업도 들어가야 되고, 두상도 좀 미미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이제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 같아요. 근데 목표는 명확합니다. 저희는 뚜렷해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정관에도 있듯이 보편적 기본소득의 실현. 이제 출범도 거의 끝났어요, 전국 대부분의 곳에.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될 건 여기에 모인 사람들과 또 이런 동지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라든가 기본소득당, 이런 곳, 그 다음에 정치공동행동이랑 해나가야죠. 이제. 저도 이제 목소리 많이 낼 거예요. 뭐 하고 계세요, 이러면서 전화도 많이 하고 할 거예요. 왜 언론에 안 나오십니까, 할 거예요. 귀찮아지실 겁니다. 저 때문에.

#### 기국본이 그리는 '기본소득이 있는 한국'

한인정: 투쟁부터 시작해서 이제 천막도 곧 치실 것 같은데... 사실... 정말 되게 멀다고 생각이 드는 것보다 행복한 그런 상상인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대표님이 생각하시고 기국본이 생각하고 있는 '기본소득이 있는 한국'의 모습을 좀 소설처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김세준: 저는 그걸 상상만 하면 좀 울컥, 울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제 수업을 듣는 제자들의 표정이 밝아질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성남시에서 기본소득을 받아본 청년들은 그걸 얼마나 대단한지 압니다. 사실 1년에 백만 원이에요. 만 스물네 살이 됐을 때 분기별로 한 25만 원 정도 받는 건데... 기본소득은 정말 액수로 따질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꾸 그러죠. 용돈 수준(이라고). 근데 우리나라의 플

랫폼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2019년도에 50만 명에서 지금 220만 명으로 늘었거든요. 이분들 중에서도, 신문을 보면, 1억대를 버는 사람도 나온다고 자꾸 하는데 극소수고, 이걸 평생 할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가장들이나 예술인들이나 청년들이 지금 플랫폼노동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분들, 특히 가장분들도 플랫폼노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 지인 중에서도 플랫폼노동을 하는 분이 있어서 커뮤니티를 좀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면, 하루에 한 12시간을 일하면 한 10만 원 정도 가져간대요. 뭐, 비용 다 빼고. 한 10만 원을 가져가면 하루도 안 쉬고 30일 일하면 300만 원. 4인 가족의 가장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가 29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냥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걸 목숨을 걸고 정말 위험한 환경에서... 얼마 전에도 장례식을 하는데 그분들 막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너무 막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런 노동을 계속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연 100만 원이면 월 8만 3천 원 정도인데 이분들이 (한 달에) 10시간은 좀 휴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술인들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한 달에 10시간은 창작활동을 할 수 있고 청년들은 취업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액수가 늘어날수록 좀 더 여유는 많아지겠죠.

저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콘텐츠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대박을 터뜨리잖아요, 한 번 뭘 하면, 그런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 특히 연습할 시간도 없고 창작할 시간이 없어서 월 삼십만 원만 있어도 우리는 한다, 이 얘기를 듣고 좀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월 8만 원 수준이든 10만 원이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로드맵대로 정도 된다고 그러면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된 노동을 하는 농부, 이런 분들도 자기가 평생에 너무 기르고 싶었던 작물,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꽃을 가꾸고. 청년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플랫폼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친구라도 만나서 등산이라도 좀 가고 사우나라도 좀 가고 막걸리라도 좀 마실 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액수가 좀 더 많아진다면 그러면 그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협상력이 강화가 되고... 또 저는 예전에 월급쟁이일 때 제일 힘들었던 일이 뭐냐 하면 몸이 아파요, 정말 적성에 안 맞는 일 하는 분들 많



잖아요. 그리고 왜 3일만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 못 쉬잖아요. 그리고 이직을 할 때도 한 달간 좀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바로 일을 하고 그래서 몸이 아플 때 쉬지 못하죠. 한 달이라도 생활비를 안 갖다 주면 가정이 좀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근데 이제는 한 달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그러면서 재충전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봉사라는 일이 하나의 명예로운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제가 요즘 인류학 책을 많이 읽거든요. 기본소득을 공부하다 보면 인류학 책을 당연히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면 하루에 3~4시간 정도 일을 하고 이제 다들 자유롭게 살았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인간답게. 최소한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말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좀 활기를 갖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역동적인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인정: 시계의 초침이 좀 빨리 돌아서 그곳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세준: 저희한테 달렸습니다.

한인정: 이런 즐거운 상상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같이 얘기해주셔서 저희 오후를 이렇게 환하게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느 곳에서도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소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파문’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신 구독자님들도 앞으로 이렇게 같이 투쟁에... 투쟁으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오늘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세준: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요. 저희 CMS도 받습니다.(웃음) 저희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인정: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 독자 분들께도 감사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꽃이 굽이치는 자리

김승희  
시인

봄은 봄이고  
저절로 와야 봄이다  
봄꽃이 피어도  
저절로 피어야 꽃이다

아무도 없는 마당에 홍매가 저절로 만발했다  
저절로 극치에 닿았는데 여기서 무슨 의미론을 찾겠는가?  
피고 지는 것이 저절로 되어야 극치에 가는구나

꽃이 피면 바람의 세계가 저절로 열리는데  
아픔 없이 죽음도 저절로 왔다 갔으면 좋겠다  
복숭아꽃 살구꽃이 저절로 벙글어졌다 떨어지듯이  
아프지 말고 살아라!  
아프지 말고 죽어라!

어디까지 아파야 더 아프지 않을 수 있을까  
저절로 나을 때까지 아파야 그것이 봄이다

## 묘지명(墓誌銘)-장미

장석남

시인

오월 중순 장미들이 꺾충 피었는데  
한 가지를 꺾어다가 흰 호리병에 꽂아 두고는  
겹겹 싸인 내전을 엿보는데  
어디서 온 내력들을  
불디 붉은 문장들로 새겨 두었다  
나는 글 배운 바 없어 읽을 수는 없어서  
보며 웃을 뿐이었다

공의 성은 장씨이고 휘는 미이며  
허공이 고향이다 글 읽기를 좋아하고 전고에 대한 지식이 많으며  
질문이 있으면 척척 응답하여 의문이 없었다  
세상 소인들이 횡행하여 스스로 가시를 내어  
멀리하였다

눈 펄펄 날리는 날  
이러한 묘지명을 받으러  
어느 얼어붙은 빙벽을 방문할 것이다

서너 뺨 유리창에 머리를 들이받으면서  
벌 몇 마리가 잉잉댄다

## 영숙 미자 경주 정희 왔다감

김금희

소설가

영숙을 포함해 네 사람 모두 오랫동안 이 도시에 살았지만 납골당은 처음이었다. 큰 시장이 있어 지나만 다녔을 뿐이었다. 그런 곳과 자신들이 상관있으리라고는 상상이 잘 안 갔다. 그건 저마다의 나이를 생각하면 이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오히려 죽음에 대해 자주 떠올리고 연연해하는 건 젊은 애들 같았다. 영숙은 이따금 손녀의 노래들을 들었는데, 그건 너무 어둡고 슬프고 차고 늘 어딘가 죽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했다. 그래서 “요즘 그런 게 유행이니?” 하고 영숙이 물으면 “아니, 내 자작곡. 할머니가 처음 들었어.” 하고 손녀는 대답했다. 어느 날은 너무 젊어서 어려서, 바람만 불어도 마음이 떨어져 내리는구나 싶었지만 어느 날은 자기 잘못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요즘 세상에 자식들 뒷배가 못 되는 부모라니. 일흔이 다 되도록 손에 일을 놓지 않는데도 처지는 나아지지 않았다. 고약한 마술에 걸린 것처럼 벌었다고, 손에 쥐었다고 생각한 것들은 늘 어딘가로 흘러가버렸다.

“그냥 가서 이름 대면 되겠지 뭐.”

경주가 그렇게 말하며 일단 올라가자고 했다. 큰 공원을 끼고 있는 납골당은 올라가는 길도 산책길 같았다. 개망초가 피어 있고 붉고 흰 철쭉들도 환하게 울타리를 밝혔다. 그걸 보느라 네 사람은 걸음이 늦어졌고 정희가 “이 좋은 걸 추진만 못 봐서 어떡해.” 하는 바람에 또 길을 오르지 못했다.

추진은 본명이 아니라 친구가 일했던 보험회사 이름이었다. 네 사람이 서로를 자식들 이름으로 부르듯, 추진은 자연스럽게 다니던 회사 이름으로 불렸다. 추진에게도 다 큰 아들들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아이들을 함께 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네 사람은 한 동네에 살며 친해진 삼십 년 지기 친구들이었고 추진은 나중

에 가까워진 친구였다. 아마 보험설계사인 추진을 누군가가 소개해서 만나게 됐을 텐데 그 세월도 이십 년 가까이였다.

만나보니 추진의 남편은 전신마비로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 지내고 있었다. 추진은 보험이 아니었다면 남편 병원비로 길바닥에 나앉았을 거라고 이야기했고 그런 생생한 증언을 들으면 보험을 들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 추진이 아픈 남편을 살뜰히 챙기는 것도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주었다. 밖에서 일을 하다가도 남편 식사를 챙기기 위해 집으로 가곤 했다. 체격이 큰 사람을 일으켜 꺼안다시피 해야 하는 터라 정부에서 간병인을 보내줘도 못 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런 것까지 하라고 하면 간병인이 자꾸 그만둔다고. 힘들어도 추진은 남편을 무척 아꼈다. 뇌졸중이 일어난 날, 병원에 빨리 못 데려가서 그런 비극이 일어났다고 자책했다.

추진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마음은 아파도 이제 추진이 몸은 편하겠지, 하고 친구들은 생각했다. 애달프고 슬픈 일이지만 긴 병 환자가 떠나면 남은 사람이 편해지는 것도 사실 아닌가. 그런데 그 뒤 일 년도 되지 않아 추진이 세상을 떠났다. 코로나 19가 기승을 부릴 때라 부고도 늦게 전해졌다. 다른 친구들은 죽기 몇 달 전에 만나 암이 발병했다는 소식을 당사자에게 직접 들었지만 몸이 좋지 않아 못 나갔던 영숙은 정말 문자 몇 줄로 추진의 죽음을 알게 된 것이었다. 낙담한 영숙은 며칠을 시름시름 앓았다.

납골당 건물은 공원의 가장 안쪽에 있었다. 네 사람이 도착했을 때는 점심시간이라 안내 카운터가 텅 비어 있었다. 경비에게 물어보니 한 시가 되어야 직원들이 돌아올 거라고 했다.

“어마, 한 시간이나 기다리라고요?”

정희가 놀라 물었다.

“우리 그냥 납골당 번호만 알면 되는데 죽은 친구가 이경자예요. 이경자.”

경주가 그렇게 도왔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어린 티가 역력히 나는 경비는 난감해하며 자신은 명부가 든 컴퓨터를 다룰 수 없다고 했다. 자기는 데스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야, 그러게 내가 밥 먹고 오자고 그랬잖냐.”

아까 공원 입구 갈비집을 가리키며 먼저 점심을 먹자고 했던 미자가 세 사람을 약간 타박했다. 낭패감이 들었지만 기다리는 것 외에 별다른 수가 없었다. 네 사람은 다시 밖으로 나가 나무 벤치에 앉았다. 흰꽃가루가 동동 떠다니는 정오의 풍경은 아늑했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의 정신을 쏙 빼놓았다.

“오늘 애들 온다고 해서 장을 좀 봐야 하는데.”

정희가 그렇게 말하자, 경주가 메시지를 확인하며 오늘 딸이 나이트 근무라 얼른 가 봐야 하는데, 하고 걱정했다. 영숙은 오늘 월차를 내고 청소일을 나가지 않았지만 면접 간 손녀가 걱정



이었다. 노래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에게 나라에서 무슨 지원을 하는데 그게 되면 친구들과 무대를 꾸며볼 수 있다고 했다.

“한 번이 아니라 그런 게 자꾸자꾸 돼야 이름도 나고 그렇겠네.”

영숙이 말하자 손녀는 모처럼 활기 띤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 번이라도 어때, 할머니. 한 번이라도 하고 나면 나 정말 좋겠다.”

“얘들아, 저기 나비 보라.”

자기 말을 안 들은 친구들에게 좀 화가 나 있던 미자가 느릅나무 아래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정말 노랑고 하얀 나비들이 서로 자리를 바꿔가며 팔랑팔랑 날고 있었다.

“에고, 추진아.”

경주가 불렀고 네 사람은 또다시 슬픔에 빠졌다.

“남편 가고 이제 좀 편할까 했는데 아픈 남편 거기서도 아플까봐 따라갔니? 응?”

한시가 되자 안내데스크가 다시 열렸고 네 사람은 거기 서서 추진의 이름을 댔다. 그런데 이름만으로는 찾을 수 없었다. 명부에 이경자가 구십 명이나 있었기 때문이다. 네 사람은 이곳에만 죽은 이경자가 그렇게 많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다. 안내직원은 남편 이름을 알면 번호를 정확히 찾을 수 있다고 했다. 합장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추진의 남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대로 헛걸음인가 싶으면서 기운이 빠지는데 경주가 추진과 함께 일했던 또 다른 보험설계사를 생각해냈다. 그가 추진의 아들에게 연락해 겨우 납골당 번호를 알아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예 처음부터 아들한테 엄마 어딴냐고 물어볼걸. 그러면 기다릴 필요도 없지.” 미자가 말하자 경주가 “괜히 신경 쓸까봐 그랬지.” 했다.

그렇게 어렵게 찾아왔으면서도 유골함 앞에서 네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추진아, 우리 왔다.”

미자가 손을 흔들며 말하자 다른 세 사람도 어색하게 손인사를 했다. 그리고 각자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조심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여기에 왔었다고 남기는 건가봐.”

정희가 납골당 앞 작은 노트를 가리켰다.

‘할아버지 할머니 편히 쉬세요’

크게 크게 그림처럼 그린 글씨는 추진의 손자가 쓴 인사였다.

‘엄마 예리가 둘째 가졌어요. 우리는 걱정 말아요’

가장 최근에 적힌 소식은 새로운 식구에 관한 것이었다. 네 사람은 둘째아들이 아이를 또 가진 모양이라며 기뻐했다.

“그럼 우리도 여기에 쓰고 가자.”

경주가 말했다. 다들 좋은 생각이라고 했지만 정작 아무도 볼펜을 들지 않았다. 서로 네가 쓰라며 미뤘고 영숙도 마다했다. 그렇게 10분을 실랑이하다 이윽고 미자가 “야, 배고파 죽겠다.” 하며 볼펜을 잡았다. 그리고 수첩에다가 ‘은정, 동현, 지혜……’ 이렇게 평소에 부르는 아이들 이름을 쓰기 시작했는데, 영숙이 “아니 왜, 애들 이름을 여기다 적어?” 하고 다급하게 팔을 잡았다.

“응?”

미자가 당황해서 손을 멈췄다.

“우리가 부를 때는 그렇게 불러도 여기에는 그렇게 적으면 안 되지. 우리 이름 놔두고 왜 애들 이름을 여기 남겨?”

그러자 경주와 정희도 놀라 애들 이름을 지우자고 했다. 거기에는 친구의 죽음 앞에 뒤흔들고 가지런하게 자기 이름을 적어놓고 싶은 마음과, 이런 슬픔과 상실에 아이들 이름을 남겨놓고 싶지 않다는 분명한 거리낌, 그 오래고 절대적인 보호의 제스처가 함께 들어 있었다. 넷은 자신들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고 미자는 그걸 다 적고는 “왔다감”이라고 마무리했다.

납골당을 나온 네 사람은 다시 공원길을 걸어 내려왔다. 그들 중 추진만 운전할 수 있어서 그 차를 몰고 다같이 산정호수에 놀러 갔던 날이 생각났다. 그때 차가 무척 막혀서 추진이 거의 네 시간이나 운전대를 잡아야 했고 그래서 화가 많이 났던 것이. 옆에서 간식을 챙겨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예쁘다 고맙다 해도 좀처럼 마음이 풀리지 않던 것이. 돌아오고 나서도 한동안 사이가 서먹할 정도였던 그 호수행이 너무 먼 꿈결처럼 느껴졌다. 그런 다툼과 화해가 영원히 반복될 것처럼 무심하게 하루하루 보내다 이렇게 훌쩍 한 사람을 떠나보냈다는 것이. 사는 건 너무 아득하고 늘 해독할 수 없는 어떤 표정 같은 일이었다.

이윽고 식당에 도착해 네 사람은 연기를 푹푹 내며 고기를 구웠다. 자식 얘기, 손주 얘기, 월급 받는 얘기, 장사 안 되는 얘기, 집값 오른 얘기, 가족들 누군가가 집을 산 얘기, 판 얘기. 늘 하는 데도 늘 채워지는 얘기들이 테이블 위로 차려졌다. 미자가 가게에 코로나 손실보상금이 나왔다며 밥값은 자기가 내겠다고 했다.

“어렵다고 받았는데 쓰면 어떡해?”

경주가 그래도 고맙다며 씹을 써서 미자에게 건넸다.

“내가 써야 이 식당 사장이 안 어려울 거 아녀.”

미자가 카운터에서 잔뜩 인상을 쓴 채 뉴스를 보고 있는 남자 사장을 가리켰다. 네 사람은

땀은 그렇다고 쿨쿨 웃었다.

그렇게 해서 친구들은 다 버스를 타고 가고 영숙 혼자 집으로 걷는데 까닭 모를 눈물이 흘러 내렸다. 딱히 슬픔이라고 할 수는 없는, 모처럼 맘 편하게 친구들을 만났던 기쁨과 흥분과, 얼굴도 보지 못하고 보낸 추진에 대한 마음의 짐을 덜었다는 홀가분함과 든든하게 식사를 마치고 노곤해진 몸을 뚫고 나오는 이 특정할 수 없는 어떤 대상들을 향한 가없음과 애달픔 같은 것. 아이들 어릴 때 혼자 식용유 공장에 가서 일할 때 니엿니엿 지는 해를 보다가 왈각 그 어린 것들이 자기들끼리 잘 있나 싶어 눈물이 나던 그 시절을 환기하는 어떤 회한 같은 것이. 마스크 안까지 젖어드는 눈물을 내버려두다가 영숙은 이내 신호등 앞에서 손수건으로 얼굴을 잘 닦았고 손녀에게 “나라 면접은 잘 끝났니?” 하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다시 단단하게 추스른 마음으로 글자 옆의 ‘1’자가 지워지고 반가운 답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끝>

## 경순의 잘못

황시운

소설가

“하루 종일 먹고 자고 게임하고, 먹고 자고 게임하고, 그거 말고는 꿈쩍을 안 하려고 든다니까. 이 놈의 자식이 아주 내……”

피를 말린다, 고 말하려던 경순이 말끝을 흐리며 입을 다물었다. 아무리 무람없는 사이라도 남 앞에서 가뜩이나 딱한 아들을 깎아내리는 건 못할 일이었다. 더구나 자신의 비루해진 처지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기도 했다. 같은 단지에 살고 있는 미경과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며 어울려왔던 터라 달라진 현실이 더욱 비교가 됐다.

“그래. 알지, 알아. 썩어 문드러지는 자기 속을 내가 모르면 누가 알겠어.”

미경이 커피잔을 달그락 내려놓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경순은 안쓰러운 표정을 짓는 미경이 문득 아니꼽게 느껴졌다. 안 그래도 두 아들에 며느리들 자랑까지 줄줄이 늘어지던 미경이고 보면 더더욱 그랬다. 큰 며느리가 성과급 받은 걸로 냉장고를 비스포크로 바꿔주었다고 했다. 무슨 놈의 냉장고 가격이 오백만 원이 넘어서 기함을 할 뻔했다는 얘기도 빼놓지 않았다. 그런 끝에 아들의 흥이나 보고 있는 자신의 경솔함이 한심하기만 했다. 경순이 저도 모르게 한숨을 푹 내쉬었다.

“자꾸 한숨 쉬지 마, 자기야. 한숨 쉬어 버릇하면 들 어올 복도 멀리 달아난다잖아.”

걱정을 해서 하는 말일 텐데, 경순은 이번에도 배알이 뒤틀렸다. 작은 며느리가 생일 선물로 해줬다는 안면 거상 수술이 자리를 잡은 미경의 얼굴이 이전보다 죽히열 살은 어려 보이는 것도 거슬리기만 했다. 경순이 눈을 내리깔며 커피잔을 들어 후루룩 들이켰다. 커피가 아직 뜨거워 순간 입천장과 목구멍이 찻 달라붙는 것 같았지만 꺾 참았다. 뜨거운 것도 참고, 아니꼬운 것도 참고, 일

단은 다 참아야 했다. 어쨌든 아쉬운 쪽은 경순이었다.

“사람은 믿을 만한 거지?”

경순이 한 번 더 다짐을 두듯 물었다. 미경이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두말할 나위가 없다니까 그러네. 자기 나 못 믿어?”

미경의 말에 경순이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잘난 체를 좀 해서 그렇지, 여러모로 사람이야 믿을 만했다. 미경이 추천하는 사람이라면 틀림없겠지. 경순은 왠지 모르게 긴장되는 마음을 꼭 누르며 생각했다.

“어, 자기야. 여기.”

막 입구로 들어서는 사람에게 미경이 손을 들어 보였다. 늘씬한 체형의 여자가 환한 웃음을 머금은 채 다가왔다. 보는 눈이 다 시원해지는 것 같았다. 경순은 첫눈에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

아들 강이의 장애인활동지원사가 구해지지 않아 괴로운 마음을 혼자서만 끙끙 앓았다. 퇴근하고 돌아와 집안일에 강이의 목욕과 용변 처리까지 해주다 보면 누굴 만나 하소연할 틈도 없이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 걸, 우연히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던 병원에서 마주친 미경에게 지나는 말처럼 털어놓았던 것이 일의 시작이었다.

“그럴 거면 일한 값이라도 제대로 쳐서 받아야지.”

“내 새끼 뒤통다꺼리하는 데 누가 일한 값을 쳐준다고.”

“아휴, 자기가 이렇게 순진하니까 내가 마음이 안 놓인다, 정말. 그렇게 곧이곧대로 산다고 누가 알아주는 줄 알아?”

“응? 그게 무슨 소리야?”

경순이 커다란 눈을 깜빡이며 묻자 미경이 가볍게 혀를 차며 목소리를 낮추라는 시늉을 했다. 경순은 공연히 얼굴까지 붉어진 채 혀로 입술을 축였다.

면접을 보러 오는 활동지원사마다 고개를 가로저었다. 강이의 덩치가 커도 너무 크다는 거였다. 사실 경순도 그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경순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었다. 경순의 이용자는 시각장애인이었다. 매일 아침 이용자가 출근을 하고 난 뒤, 빈집으로 출근해 청소와 빨래를 하고 반찬을 만들어 저녁 식사 준비를 해 놓는 것까지가 경순의 일이었다. 이용자가 예민한 편이어서 일주일에 한 번꼴로 대청소도 해야 했지만 일이 어렵다고 생각되진 않았다. 처음부터 신체 지원 없이 가사 지원만 하는 점이 마음에 들어 선택한 일이었다. 이용자와 마주칠 일이 거의 없는 것도 마음에 꼭 들었다. 문제가 생기거나 전달사항이 있을 땐 전화 통화를 했다. 같은 값이면 덜 부담스럽고 조금이라도 쉬운 일을 찾는 게 인지상정이었다. 백 킬

로그를 훌쩍 넘는 거구 이용자의 신체 지원을 받으려는 지원사 찾기가 쉬울 리 없었다. 지원사를 구하지 못하니 집안 살림부터 이틀에 한 번꼴로 강이의 목욕을 돕고 대변을 받아내는 일은 고스란히 경순의 몫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경순은 수 년 전에 디스크 협착증으로 허리 수술을 받았고 양쪽 무릎엔 인공관절 수술도 했다. 최근 들어선 손목과 어깨 통증도 예사롭지 않았다. 어쩌다 일을 하겠다고 계약했던 사람도 금방 관두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센터에서도 이전 사람을 쉽게 소개해주려 하지 않았다.

남들은 마비가 되고 나면 근육이 빠지면서 살이 내린다던데 강이는 나날이 덩치가 커졌다. 그도 그럴 것이, 사고 이후 강이는 모든 욕망이 거세된 채 식욕만 살아 날뛰는 사람 같았다. 하루 종일 먹는 생각만 하는지, 매일 치킨이 먹고 싶다, 피자가 먹고 싶다, 족발이 먹고 싶다, 요구가 끝이 없었다. 처음엔 경순도 안쓰러운 마음에 원하는 음식들을 싹껏 먹게 내버려두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겁이 나기 시작했다. 강이의 덩치가 커져도 너무 커졌던 것이다. 먹는 양은 점점 늘었는데 움직임은 거의 없으니 건강 역시 급속도로 나빠졌다. 아직 삼십 대인데도 벌써 당뇨 진단을 받았고 고혈압에 지방간까지 있었다. 상황이 이러니 조금만 덜 먹고 더 움직여보자고 경순이 수없이 설득했지만 강이는 제 방에 처박힌 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강이가 장애를 입은 초반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아예 모른 채 경순 혼자서만 안달복달하며 빠르게 까부라졌다. 이러다 그때로 영영 돌아가게 되는 건 아닐지, 경순은 겁이 났다. 그때는 나이나 젊었지, 이제는 정말이지 힘에 부쳤다. 사실, 누군가 집안일만 좀 거들어준다고 해도 아무 도움도 못 받는 것보다야 분명히 나을 터였다. 그렇다면 애초에 가사 지원만 해줄 활동지원사를 구하면 되겠지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는 본인부담금이 들어갔다. 경순에겐 그것도 적지 않은 액수였는데, 지금 형편에 그 돈을 들여서 신변처리를 도와줄 것도 아니고 손바닥만 한 집안 청소나 말길 사람을 구하는 게 맞는 일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경순은 또다시 습관처럼 한숨을 내쉬었다.

아침에 출근해 오후 2시면 퇴근을 하는 경순이 받는 급여는 130만 원이 조금 넘었다.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조금 더 일을 하고 싶어도 이틀에 한 번 두 시간 가까이 걸리는 강이의 목욕과 세 시간씩 걸리는 대변 뒷수발을 들어야 해서 매일 출근은 불가능했다. 일단은 하루 걸러서라도 오후에 일할 수 있는 자리를 구해 달라고 센터에 부탁은 해 둔 상태였다. 운 좋게 일을 더 할 수 있게 된다면 조금 나아지겠지만, 현재로서는 강이의 장애연금 37만 원과 남편이 돌아가고 난 뒤부터 받게 된 배우자 연금 30만 원, 그리고 경순의 급여가 수입의 전부였다. 올해로 예순다섯이 되었지만, 경순은 노인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깔고 앉은 집값이 오른 탓이었다. 집값이 올랐다고 그 돈을 손에 쥐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게 왜 노인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경



순으로선 이해가 안 됐지만, 별다른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남편과 함께 젊은 시절 온갖 고생을 해가며 장만했던 집이 노년 생활의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집에 손을 댈 수는 없었다. 집은, 경순도 경순이었지만 강이의 미래이기도 했다. 부족한 생활비를 메꾸기 위해 받기 시작한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금은 나날이 늘어만 갔다. 강이 앞으로 들어가는 돈 역시 다달이 늘고 있었다. 더 나이가 들어 활동지원사 일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경순 자신은 그렇다 쳐도 강이만 생각하면 앞이 안 보이고 숨만 턱턱 막혔다.

미경이 처음 그 얘기를 해줬을 때, 경순은 겁이 나는 한편 안개가 자욱하던 머릿속이 맑게 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단속도 형식적이어서 꽤 많은 사람들이 별 문제없이 이런 저런 방식으로 바우처를 부정수급 하고 있다는 말은 소심하기만 한 경순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크로스로 일을 맞바꿔 하는 장애인 부모들도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당장 맞춤형 자리 구하기가 힘들지. 바우처 시간이 길 땐 두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등록만 해놓고 한 사람이 다 받아가기도 하고. 아닌 척해서 그렇지, 다들 이렇게 저렇게 머리들을 쓰면서 살고 있다니까. 사실, 내가 안 먹으면 그냥 버리고 말 돈인데 못 찾아 먹는 사람이 바보지 뭐. 안 그래?”

미경의 말엔 지금껏 자신이 너무 안일하게 살아온 것 같아 괜스레 부끄러워지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래선 안 되는 거였다. 아무리 사는 게 펍펍해도, 몇 년씩 안 걸리고 잘 타 먹는 사람들이 싸고 썼다고 해도, 경순은 아예 발을 들여놓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경순은 길바닥에 쓰레기 하나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남다른 사명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버리는 족족 남의 눈에 띄어 빈축을 샀기 때문이다. 무단 횡단도 못했다. 시도만 하면 크고 작은 사고로 이어졌다. 한마디로 그놈의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라도 선 밖으로는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 물론, 극단적으로 소심한 성격도 한몫했다. 선 밖으로 발끝만 내밀어도 가슴이 두근대고 겁이 나서 지레 초주검이 되기 일쑤였다. 경순은 이번 일을 벌이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잊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따름이었다.

실제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활동지원사가 출근하는 걸로 기록만 남기면 센터 모르게 급여를 나눠가질 수 있다고 했다. 강이의 바우처를 급여로 환산하면 이백만 원이 조금 못 됐다. 그 돈에서 소개 받은 활동지원사 선생에게 오십만 원을 떼어줘도 경순의 급여보다 많은 돈이 남았다. 그 정도면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금도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을 터였다. 어차피 사람이 안 구해져서 경순이 오롯이 감당해온 일이었다. 설사 구해진다 해도 오래 못 갈 게 뻔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마음을 비우고 자신이 꼭 감당하면서 바우처 급여라도 타 먹을 수 있으면 더 없이 좋을 것 같았다.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어서인지, 나쁜 짓을 한다는 생각보다 어차피 누가 해도 할 일에 대한 보상을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찾아 받는 것뿐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전화기를 든 경순의 손이 벌벌 떨렸다.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로 일이 이렇게 되어버릴 줄은 몰랐다. 몇 년씩 아무 일 없이 잘 해먹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던데, 고작 석 달 만에 걸릴 건 뭐란 말인가. 어쩌면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경순은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뭐래요?”

작은 방문이 열리더니 강이가 휠체어를 밀고 나왔다. 경순이 고개를 들어 멍한 얼굴로 강이를 바라보았다.

“환수 결정이 났다고 그러네.”

경순의 말끝에 한숨이 딸려 나왔다. 환수금액은 거의 육백만 원이나 되었다. 그 돈은 또 어떻게 구하나. 평생 아등바등 살아왔는데도 말년에 단돈 육백만 원에 벌벌 떠는 처지가 한심스러워서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강이의 돈에 손을 댈 수는 없었다. 사고 당시 강이의 생명보험금으로 지급받은 돈 2억이 있긴 했다. 아무 것도 없는 것보다야 나았지만, 강이의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다. 경순이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혹은 더 나중에 경순이 죽고 나서 강이 혼자 남겨졌을 때, 강이가 그 돈으로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암담하기만 했다. 결국 집을 줄여가며 살다 막다른 길에 이를 공산이 컸다. 또다시 한숨이 내려 했다. 자꾸 한숨을 쉬어 버릇하면 들어올 복도 멀리 달아난다던데. 경순은 강박적으로 미경의 말을 떠올리며 차오르는 숨을 억지로 눌러 삼켰다.

“어떻게든 되겠지. 넌 걱정할 거 없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경순이 그때까지 들고 있던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마치 다짐이라도 하듯 말했다. 강이는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입을 달싹였지만 끝내 더 말을 보태지는 않았다.

“대변보자. 방에 가서 컴퓨터 끄고 매트로 나와.”

경순이 매트 위에 늘어놓았던 물건들을 주섬주섬 치웠다.

“정리하고 나온 거예요.”

강이가 휠체어를 밀고 매트 쪽으로 다가와 매트 옆에 휠체어를 붙였다. 경순이 허리를 굽혀 강이의 두 다리를 휠체어 발판에서 차례로 내려놓았다. 그리곤 강이의 등 뒤로 가서 바지뒤춤을 단단히 그러쥐었다. 경순이 하나, 둘, 셋 구령을 붙여 강이와 동시에 강이의 무거운 몸을 들어올렸다. 손목에서부터 어깨까지 찌릿한 통증이 감전되듯 타고 올라왔다. 이번 일로 앞으로 이 년간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적어도 이 년 동안은 꼼짝없이 강이에게만 매여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 년 후면 경순의 나이 예순일곱이 된다. 예순일곱은 예순다섯보

다 얼마나 더 까부라진 나이일까. 경순은 잠시 생각하다 체머리를 흔들었다. 이 년 후보단 당장 돈 육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급했다. 인생이란 게 마치 끝도 없이 이어지는 장애물 달리기 같다고, 경순은 강이의 늘어진 엉덩이를 벌려 항문에 좌약을 밀어 넣으며 생각했다. 미경에게 돈을 빌릴 수 있을까. 일이 이 지경이 된 걸 뻔히 아는데, 설마 모른 척이야 할까. 경순은 자신보다 열댓 살은 어려 보이는 미경의 팽팽한 얼굴을 떠올리며 습관처럼 긴 한숨을 내쉬었다.

<끝>

## 기본소득을 말하는 한국교회: 성취와 남은 토론거리

이건민

계간 《기본소득》편집위원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기본소득에 대한 신학적, 사회과학적 논의를 집대성한 책이 나왔다. 『한국교회, 기본소득을 말하다: 기본소득에 관한 신학과 사회과학의 대화』(정미현, 강원돈, 곽호철, 김유준, 김회권, 야닉 판데르보흐트<sup>Yannick Vanderborght</sup>, 전강수, 정용한 저, 정미현 책임편집, 새물결플러스, 서울, 2022)가 바로 그것이다. 2020년에 『시민기본소득: 기독교적 사회정책』(토리, 2020)이라는 책이 출간된 바 있지만, 이는 외국 학자가 쓴 책을 번역한 것이었다. 필자가 알고 있기로 국내에서 교회와 기본소득의 관계를 다룬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는 강원돈 교수의 2010년 논문 “기본소득 구상의 기독교윤리적 평가”(『신학사상』 150, 177-215)이니, 그로부터 근 12년 만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한 전문서가 나온 셈이다.

\*\*\*

이 책은 총 5장과 부록(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기독교인의 기본소득 인식 설문조사”에 관한 결과 보고서)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연구의 방법과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제시한다. 2장인 “기본소득에 관한 성서적 근거와 함의”에는 김회권의 “기본소득의 두 토대: 자연법과 구약성서”와 정용한의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바라본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살후 3:10)을 위한 성찰”이라는 두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3장인 “기본소득에 관한 역사적 윤리적 여 성신학적 고찰”은 세 논문으로 구성되는데, 김유준의 “루터와 칼뱅의 경제사상으로 보는 기본소득: 희 년 사상을 중심으로”, 박호철의 “기독교윤리의 시각에서 본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방향성: 타자윤리학 을 중심으로”, 정미현의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여성신학적 성찰”이 바로 그것이다. 4장인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사회윤리적 제안과 사회과학적 고찰”은 세 논문, 곧 강원돈의 “생태학적 지향의 기본소득 에 관한 사회윤리적 구상: 국민경제 수준의 소득 분배 계획에 바탕을 두고서”, 전강수의 “좌우파 기본 소득 모델과 변동형 기본소득제”, 야닉 판데르보흐트의 “아웃사이더 친화적인 정책?: 부분적 기본소득 과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화 완화”로 이루어져 있다. 5장인 결론에서는 연구의 성과를 요약하고 한국교 회를 향하여 몇 가지 중요한 개선 혹은 개혁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부록의 앞부분은 설문조사의 배경, 목적, 설계, 내용, 응답자 특성 등 설문조사의 개요를 제시하였으며, 뒷부분은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신 앙적 성향에 따른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 기본소득 도입 여부와 재원 마련, 신앙적 견해에서 본 기본소 득 도입 여부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2~4장에 있는 여덟 논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2장의 첫 번째 논문인 “기본소득의 두 토대: 자연법과 구약성서”에서 김희권은 기본소득의 최초의 주창자인 토마스 페인<sup>1)</sup> Thomas Paine과 토마스 스펜스<sup>2)</sup> Thomas Spence에게서 토지의 만민 귀속 및 만민 향 유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법적 토지 사상이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페인이 “특정 개인의 토지 소유권은 토지 그 자체가 아니라 그가 토지를 경작하거나 개량한 부분에만 한정”되며, 그러므로 “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절대적 순수 사유자로서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기초 지대 ground-rent’를 사회에 지불해야” 한다고 보았음을 강조한다(54면). 또한 그는 페인이 “토지란 만인의 공동 재산인 만큼 그 토지로 인한 이익의 상당 부분은 사회 구성원 전체가 나눠가져야 하며 따라서 그 것은 유력자가 열등자에게, 혹은 국가가 인민에게 시혜적으로 베푸는 인위적 공여물이 아니라 땅에 태 어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누려야 할 자연적 권리”라고 생각했음을 역설한다(56면). 여기서 더 거슬러 올라가 그는 모세 오경의 땅 선물 신학은 이러한 자연권 사상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본소득의 성서적 토대로 제시한다. 저자는 “성서는 아웨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토지 소출의 향 유권을 보편적으로 누리도록 규정”하며 “레위기 25:23(땅은 하나님의 것!)과 신명기 15:11(어느 누구 도 토지 소출의 향유에서 배제되면 안 된다)은 성서에 나오는 기본소득 사상의 대현장과 같다”고 주장 한다(59면).

2장의 두 번째 논문인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바라본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살후 3:10)을 위 한 성찰”에서 정용한은 성서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적 전제로서 본문과 관련한 세 가지 세계, 곧 폴 리 쿼르가 제안한 본문 뒤의 세계, 본문 안의 세계, 본문 앞의 세계를 채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3:10(“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에 대한 성찰을 시도한다. 데살로니가후서 3:10 뒤의 세계를 살펴보면, 당시 바울 공동체 내에서 상당수의 교회 및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 에 놓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초기 교회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을 도왔다는 사실, 친로마적 분위기가 팽배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우려를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데살로니가후서 3:10 안의 세계를 들여다보 면, 바울 스스로가 교인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스스로 일하고자 했으며 자비량과 후원은 필요에 따

라 선택적으로만 사용하고자 했다는 점, 모금을 통해 부족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신앙인으로서의 연대와 공동체성을 높이하고자 했다는 점, 초기 교회가 임박한 종말의 기대 속에서도 빈민 구제에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권면은 개인의 태도를 문제시하거나 고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경제적 부담과 교회에 대한 사회적 오해를 염려하면서 교회의 공동체성과 안정성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드러난다. 데살로니가후서 3:10 앞의 세계를 보면, 심화되고 있는 노동의 소외와 불안정성, 취업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조건 하에서 비자발적 실업과 자발적(?) 구직 포기 of 만연, 기계(로봇)가 노동을 대규모로 대체할 것이라는 위기감의 팽배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은 노동 본연의 회복, 즉 자아실현으로서의 노동, 자신에게 걸맞는 자유로운 선택에 기반한 활동으로서의 노동을 가능케 하는 대안을 요구하고 있음이 명백해진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맥락에서 진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는 우리 시대의 대안으로 떠오른다. 저자는 이를 바탕으로 “데살로니가후서 3:10의 가르침은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근거 본문으로 여겨지기보다 한국 사회의 경제적 주체성, 공동체성, 대체성을 한 번 더 고민하게 하는 본문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103-104면).

3장의 첫 번째 논문인 “루터와 칼뱅의 경제사상으로 보는 기본소득: 희년 사상을 중심으로”에서 김유준은 루터와 칼뱅의 경제사상에서 희년 사상에 토대한 지공주의적 요소를 발견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상이 토지세를 비롯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한 기본소득 지급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시한다고 역설한다. 저자는 루터가 “십일조를 최상의 지대<sup>zinß</sup>로 보면서 1/10로 한정하지 않고 창세기에 언급된 요셉의 예를 통해 1/5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면서 만사가 형통하면 지대의 1/5이 적당한 액수”라고 했음을 환기시키면서(134면), 루터의 희년 사상이 기본소득의 여러 자원 중에서 토지세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는 칼뱅이 “상품의 소유권은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것이라고” 보았으며 “재산이 사회적 억압의 근거로 탈바꿈하지 않도록 일정한 연한이 되면 땅을 재분배하고 채무를 변제해주는 일을 제도화한 고대 유대의 법, 즉 희년법 사상을 인용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142면), “희년의 원리에 기초한 칼뱅의 지공주의적 경제사상은 기본소득을 제도화하고 토지세를 비롯한 각종 불로소득 환수의 강화를 통하여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사상적 근거를 제시한다”고 주장한다(143면).

3장의 두 번째 논문인 “기독교윤리의 시각에서 본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방향성: 타자윤리학을 중심으로”에서 곽호철은 기독교에 대한 한국 사회의 비판적 평가를 검토하고, 기독교의 본래적 가르침이 약자를 위해 부와 재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논증하고, 타자윤리학을 통한 기독교적 기본소득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있다. 그는 “기본소득의 바탕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다고 전제한다면, 현실 기독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 인식과 기본소득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소극적 태도는 현재 기독교가 성서와 기독교 전통의 가르침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진단한다(159~160면). 그리고 “기독교는 약자에 대한 경제적 도움을 소유권을 제한하면서까지 요청해왔”다는 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서뿐만 아니라 교회 전통은 특별히 소유의 나눔에 대하여 오늘날 교회의 인식보다 더 근본적인 타자중심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160면). 저자가 볼 때, 기본소득은 선택적 복지에 비해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 잘 도울 수 있고 성서의 가르침에 더 부합한다. 첫째, 선택적 복지에서는 행정적 사각지대가



광범하게 존재하는 데 비해 기본소득에서는 행정적 사각지대가 없다. 둘째, 선택적 복지와는 달리 기본 소득은 수혜자에게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주지 않는다. 셋째, 선택적 복지가 노동 의욕을 크게 감소시키는 반면, 기본소득은 그렇지 않다. 끝으로 그는 Van der Veen and Van Parijs(1986: 648[2006: 17])에 나오는 래퍼곡선과 기본소득 지급 수준에 관한 그림을 제시하면서, 타자윤리학을 통한 기독교적 기본 소득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판 데어 빈과 판 파레이스가 제시한 네 기준, 곧 (1)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의 기본욕구를 충족하는 지급 수준이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성장지향형 기준, (2) 지속가능한 최대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롤스주의적 기준, (3)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의 기본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지급 수준이어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자유왕국”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맑스주의적 기준, (4) 기본소득 지급 수준이 (2)와 (3) 사이에 놓임으로써 (2)에 비해서는 형평성을 더 고려하고 (3)에 비해서는 효율성을 더 고려한 평등지향형 기준 중에서, 저자는 (3)이 (2)에 비해서 비록 기본소득 지급수준과 선택할 자유의 질 면에서는 더 낮지만 자아실현을 위한 자유의 질 면에서는 더 높으므로 기독교적 시각에서 더 우월한 기본소득 분배 기준이라고 주장한다. 타자에 대한 책임적 자세를 요청하는 타자윤리학적 시각에서 보자면, (2)와 (3) 사이에서 (3)에 가까워지도록 지향함으로써 개인의 실질적 자유를 최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3장의 세 번째 논문인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여성신학적 성찰”에서 정미현은 기본소득이 기존의 불평등한 노동 구조와 문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기본소득 담론과 개혁주의적 기독교 사상 사이에 연결점이 발견되며, 여성신학적 시각에서 기본소득이 지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하나님 은혜의 보편성, 노동윤리의 기반으로 은사, 생명과 살림을 중심으로 한 신학과 경제학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개혁신학적 패러다임 전환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기본소득이 경제적 불평등 감소에 기여하고, 무급 혹은 저임금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되며,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노동시간 유연화를 촉진함으로써 은사에 따른 여성의 사회 참여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따라서 개혁주의적 기독교 사상과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기본소득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4장의 첫 번째 논문인 “생태학적 지향의 기본소득에 관한 사회윤리적 구상: 국민 경제 수준의 소득 분배 계획에 바탕을 두고서”에서 강원돈은 생태계와 경제계 간 에너지-물질 순환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사회 정의와 생태학적 정의의 관계를 논하고, 국내외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린 뉴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 경제 수준의 소득 분배 계획을 토대로 생태학적이고 사회적인 기본소득 자원 마련 방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생태학적 정의와 사회 정의가 상호 긴밀히 결합되어 있으며, 경제계와 생태계 간 에너지-물질 순환 관계에서 볼 때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자본의 무한한 이윤 추구로 인해 자본주의 경제에서 일반화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는 자원의 고갈과 생태 위기를 일으키는 동시에 사회적 가난도 초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생태학적 정의와 사회 정의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태학적이고 사회적인 경제민주주의를 기초로 자본과 노동의 민주적인 파트너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자본 축적 및 팽창 기제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생명체와 무생물체들이 생태계의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네트워크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신의 자리에서 현존할 권리를 인정하고, 그와 같은 ‘자연의 권리’를 주장하는 주체를 법률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36면). 또한 그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지에서 추진되는 ‘그린 뉴딜’ 또는 ‘그린 딜’ 기획이 기본적으로 녹색 케인즈주의에 기반하여 자본주의적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문제와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은 채 국가의 신용 창출에 주로 기

대고 있다는 점, 그리하여 자본주의 경제를 지지할 정도의 탄소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 경제 수준의 생태학적이고 사회적인 소득 분배에서 핵심은 생태계, 노동, 자본 사이에서 자본의 잉여가치를 적절히 분배하는 문제라고 보며, 이를 “생태계로부터 에너지와 물질을 경제계로 끌어들이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알맞은 형태로 변형시키는 생산에 대한 자본 투입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생태계와 사람의 생명과 복지를 돌보기 위한 자본 투입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집약한다(249면). 소득 분배의 이러한 기본 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자본 축적의 상당한 몫을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확보하는 것(예컨대 GDP의 6%), ②전체 잉여가치 중 생태계의 몫을 제하고 남은 부분을 국민경제 차원에서 생산과 소비의 거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배분하는 것(차선택으로는 자본에 귀속된 몫의 일부를 노동의 몫으로 이전하는 소득재분배 과정을 수립하는 것), ③잉여가치에서 노동과 가계에 귀속된 몫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일부는 개인에게 충분한 액수의 기본소득으로 분배하고, 나머지는 시장임금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저자는 “기본소득 제도는 국민 경제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본격적인 소득 분배의 틀이 마련되어야 제대로 설게될 것”이며, “그것은 국민 총생산을 생태계의 몫, 미래를 위한 저축, 자본의 감가상각 비용, 임금 소득, 기본소득 등 다섯 개의 큰 항목으로 알기 쉽게 나누고 그 비율을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역설한다(263면).

4장의 두 번째 논문인 “좌우파 기본소득 모델과 변동형 기본소득제”에서 전강수는 지금까지 제출된 기본소득 모델을 판 바레이스로 대표되는 실질적 자유 보장을 추구하는 좌파 기본소득 모델, 밀튼 프리드먼(Milton Friedman)으로 대표되는 빈곤갭 형태(Poverty Gap Type)의 음의 소득세를 선호하는 우파 기본소득 모델, 토마스 페인, 토마스 스펜스, 헨리 조지(Henry George)로 대표되는 지공주의에 입각한 정통파 기본소득 모델로 구분하고, 좌파 기본소득 모델에 기초한 고정액수 제시형 기본소득제의 오류를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정통파 기본소득 모델에 기반한 변동형 기본소득제를 제안한다. 저자는 충분한 액수를 강조하는 좌파 기본소득 모델이 “‘정당한 자원 발굴 → 예상 수입 계산 → 1/n씩 분배’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기본소득 지급 목표액 설정 → 소요 예산 계산 → 활용 가능한 자원 확보’의 순서를 따라 모델”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순서를 역으로 밟아 계산하는 셈”이며, 따라서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고 비현실적일뿐더러 정책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275면). 우파 기본소득 모델에 대해서는 양의 소득세 부분을 무시하거나 경시하고 있다는 점,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 간 경제학적 동등성 조건을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비판하고 있다. 그는 기본소득의 액수보다 정당한 재원을 앞세우는 정통파 기본소득이야말로 논리적으로 더 정당하며 사회적인 수용성을 확보하기에도 더 용이하다고 본다. 아울러 기본소득 연계형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 연계형 탄소세와 같은 정통파 기본소득 모델에 기반한 정책이 실제 도입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을 복지정책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특정 시점에서 기본소득이 고정된 액수로 미리 제시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4장의 세 번째 논문인 “아웃사이더 친화적인 정책? 부분적 기본소득과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화 완화”에서 야닉 판데르보흐트는 노동시장의 ‘인사이더’(표준적 고용관계에 속한 정규직 노동자)와 ‘아웃사이더’(실업자 또는 낮은 수준의 임금, 보호, 혜택, 사회보장을 누리는 노동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소득과 양질의 고용복지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기본소득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는 경제력을 분산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자유를 제고하며, 각자가 자신에게 맞는 ‘좋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그는 완전기본소득보다는 부분기본소득이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노동시간 감축을 위한 보조금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 인적자본 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구하는 아웃사이더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부분기본소득이 특히나 아웃사이더들의 노동과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논증한다. 아울러 부분기본소득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양질의 구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향후 토론을 위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부자나 정치공동체의 가난한 사람에 대한 부조의 의무로부터 기본소득을 끌어내려는 시도와 관련한 것이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시도 자체가 결코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논하기보다는 필요성에 기반한 논변이라는 점, 빈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다른 대안들과의 비교와 경합 속에서 치열한 토론대상이 된다는 점, 그러므로 우리에게 추가적인 논증 부담을 요구하는 논변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우선 금민(2020b)이 잘 지적하고 있듯이, “현재의 법률적 소유관계가 어떠하든지 대지와 자연물은 원래 모두의 것이라는 개념”을 의미하는 ‘원천적 공유’로부터 공유부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이 곧바로 이끌어지는 것은 아니다(37~38). 토마스 페인 이전의 사상가들은 원천적 공유 개념에서 부자나 정치공동체의 가난한 사람에 대한 부조의 의무만을 끄집어냈을 뿐이다(금민, 2020b: 38). 물론 여기서 3장 두 번째 논문에서 곽호철이 제시한 바와 같이, 기본소득이 공공부조와 같은 선택적 복지에 비해 가난한 사람을 더 잘 도울 수 있다는 논변을 추가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는 있겠다. 실제로 기존의 선택적 복지는 낮은 수급률, 수치심과 낙인 부여 효과, 노동의욕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 저축을 줄이는 효과 등 다양한 한계를 보여 왔다. 자선에 기대는 방식 역시 빈곤을 줄이는 데 태부족임은 역사가 잘 보여준다. 그렇더라도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부와 재물을 내어놓는 방식이 왜 자선이 아니라 조세와 복지급여를 통한 공적 제도화의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sup>1)</sup> 공적 제도화의 방식을 취한다는 전제하에서도 공공부조 등의 다른 제도의 형태가 아니라 왜 기본소득의 형태를 취해야 하는지가 적어도 개인의 동등성이 강조되는 맥락이 아니라 부조의 의무가 강조되는 맥락에서는 신학적으로 논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러한 논증은 기본소득의 정당성이라기보다는 필요성에 기반한 논변이라는 점, 더 구체적으로는 빈곤 개선을 위해 고려될 수 있는 대안이 반드시 현존하는 선택적 복지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비록 현존하지는 않지만 가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음의 소득세, 일자리보장 등과도 비교·경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상당한 추가적인 논증 부담을 지을 수 있다. 특히나 음의 소득세의 경우, 기본소득과 적어도 경제학적으로는 동등한 형태의 음의 소득세가 설계될 수 있으며(Van Parijs and Vanderborght, 2017: 36~37; 이견민, 2022: 46), 빈곤

1) 여기서 비록 반사실적 가정이라는 하지만, 모두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부와 재물을 내어놓는, 곧 가난한 사람에 대한 부조의 의무를 따르는 상황을 상정해보자.

개선 효과 면만 고려되는 맥락에서는 음의 소득세에 비한 기본소득의 장점을 내세우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 다음으로 실제로 그러할 것인지의/그래야 하는지의 문제와는 무관하게, ‘필요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복지’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에 비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 그리고 특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사람들의 직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Van Oorschot, 2006; Aarøe and Petersen, 2014). 이러한 이유로, 부자나 정치공동체의 가난한 사람에 대한 부조의 의무로부터 기본소득을 끌어내려는 시도는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논하는 시도에 비해 덜 유망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밝히는 방식(금민, 2020b: 1장), 혹은 기본소득의 신학적·기독교적 옹호론을 본격적으로 펼치는 방식(토리, 2020)이 이미 제시된 바 있다. 금민(2020b: 1장)은 토마스 페인의 지적 혁명을 ‘이중적 소유권 이론’ 곧 사적 소유 성립 시 원천적 공유가 사적 소유로 변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 소유’와 ‘인공적 소유’로 이중화된다는 이론으로 정식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페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공유부배당으로서 기본소득 개념이 등장할 수 있었음을 명확히 밝혔다. 말콤 토리(2020)는 기본소득이 기독교적 사회정책임을 다음과 같이 19가지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① 하나님의 풍성함을 찬양한다. ② 은혜의 행위이다. ③ 우리의 개인성을 인정한다. ④ 하나님이 우리를 동등하게 다루심을 인정한다. ⑤ 가난한 자를 돕는다. ⑥ 심판하지 않는다. ⑦ 끊임없이 용서한다. ⑧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지불받도록 한다. ⑨ 언약적 기초이다. ⑩ 우리를 공동 창조자로 만든다. ⑪ 인간의 원초적 의와 원초적 부패를 이해한다. ⑫ 우리의 상호의존성을 인정한다. ⑬ 더욱 공정한 사회를 가능하게 한다. ⑭ 자유를 촉진한다. ⑮ 가족을 상대화하고 높인다. ⑯ 섬김의 의무를 가능하게 한다. ⑰ 환영이고 친절이다. ⑱ 우리가 가진 것은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부과되지만 한다면 기본소득의 자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은 기독교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sup>2)</sup> ⑲ 사랑의 행위이다.

둘째, 국민 경제 수준의 생태학적이고 사회적인 소득 분배에 대한 강원돈의 구상과 관련한 것이다. 그는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를 ①자본 축적의 상당한 몫을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확보하는 것, ②전체 잉여가치 중 생태계의 몫을 제하고 남은 부분을 국민경제 차원에서 생산과 소비의 거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배분하는 것(차선책으로는 자본에 귀속된 몫의 일부를 노동의 몫으로 이전하는 소득재분배 과정을 수립하는 것), ③잉여가치에서 노동과 가계에 귀속된 몫을 기본소득과 시장임금의 형태로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 제시한 점은 탁월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①의 과정은 이를 수행할 법제도와 관련 기구를 창설하고 사회적, 정치적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하더라도, ②와 ③의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②와 관련하여 보론인 “생태계 보전과 기본소득의 연계를 위한 국민 소득 분배의 모의 실험”에서 “생태계 보전을 위해 공제한 뒤에 남는 국민 소득은 국민 경제의 발전 방향과 성장 속도를 충분히 고려해서 노동 측과 자본 측이 6:4로 나누기로 합의하고”라고 쓰고 있다(261면). 필자의 부족한 상상력으로는, 자본과 노동의 민주적인 파트너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수립된 경우를 상정한다 하더라도 사전적인 계획에 의하여 거시경제 수준에서 노동과 자본의 몫을 어떻게 미리 결정할 수 있을지의 상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 개별 기업 등의 미

2) 여기서 제시된 ⑱은 번역서의 해당 부분 독서를 바탕으로 필자가 새롭게 붙인 것이다. 참고로 ⑱의 원서에서의 제목은 “시민기본 소득 지급하기”이고, 역서에서의 제목은 “지급에 적합한 세원”이었다.

시적인 경제 주체 수준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분배 비율을 사전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리라 생각되고, 그러므로 이것을 집계<sup>aggregation</sup>했을 때의 총 노동과 총 자본의 몫 역시 미리 결정되기란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물론 여러 번의 시행착오<sup>trial and error</sup>와 실행을 통한 학습<sup>learning by doing</sup> 과정을 거치면서 총 노동과 총 자본의 몫이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생각되고(예측이 정확해질수록, 범위를 더 좁힐 수 있을 것이다), 저자의 뜻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짐작할 뿐이다. ②에서와 마찬가지로, 필자의 부족한 상상력으로는, ③의 경우도 기본소득과 시장임금의 몫을 사전적으로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리라 판단한다. 시장임금 자체가 기본소득의 지급 수준에 영향을 받으며, 영향을 받는 정도가 특정 시공간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②와 ③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되는 것인지에 관한 저자의 고견을 듣고 싶다.

셋째, 좌파 기본소득 모델과 정통파 기본소득 모델의 구분을 바탕으로 고정액수 제시형 기본소득제의 오류를 지적하고 변동형 기본소득제를 제안한 전강수의 논의와 관련한 것이다. “기본소득의 정당한 재원은 무엇인가?”, “기본소득의 가능한 재원들 중에서 정당성 혹은 우선순위 면에서 위계<sup>hierarchy</sup>가 존재하는가?”는 사실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기본소득의 정당한 재원은 존재한다는 입장, 혹은 최소한 기본소득의 재원들로 거론되는 후보들 내에서 정당성 차원에서 위계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당한 재원을 발굴한 것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1/n로 나누는 것’이 기본소득의 본래 정의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기본소득 및 기본소득 재원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정책적인 효과를 낳거나 기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재원의 정당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기본소득 연계형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 연계형 탄소세가 다른 정책보다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고정액수 제시형 기본소득제에서 요구되는 일반회계로부터 기본소득 특별회계로의 전입, 기본소득 특별회계 부담의 일시차입이 불필요해진다는 것이다(안효상, 노호창, 서정희, 이견민, 2021: 25, 30). 셋째, 고정액수 제시형 기본소득에 비해 이중적 의미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다른 제도와의 비교, 경합 문제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본소득의 지급액수를 생계유지에 필요한 수준 또는 그것의 일정 비율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크게 네 가지 점에서 저자와는 견해를 달리한다. 첫째, 토마스 페인과 헨리 조지를 저자가 말하는 ‘정통파 기본소득 모델’이라는 하나의 이름 안에 묶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토마스 페인은 산업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이 막 태동하던 시기에 살았기에, 아무래도 당대의 변화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세밀하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웠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그가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토지’에만 주목했던 것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의 ‘이중적 소유권 이론’은 토지를 비롯한 자연자원을 넘어서 빅데이터, 그리고 일상적인 경제활동의 소산인 소득, 재산, 소비까지도 확장하여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토마스 페인을 지공주의에 입각한 ‘정통파 기본소득 모델’로 범주화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

둘째, 만약 기본소득의 정당성이 ‘원천적 공유’에서 곧바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소유’와 ‘인공적 소유’가 개념적으로는 구분되지만 양자가 완전히 서로 분리될 수는 없다는 점, 그리고 가치 창출과 증식이 사회적 협동의 결과라는 사실에서 찾아진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금민, 2020b: 1장; 이견



민, 2020: 84), 기본소득의 정당한 재원이 토지를 비롯한 자연자원, 환경, 특권 독점으로 인한 이익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금민(2020a; 2020b)은 기본소득을 자연적, 사회적 공유부로부터 얻은 경제적 수익을 평등하게 배당하자는 아이디어로 정식화한 바 있다. 여기서 공유부 수익은 “원래 모든 사람에게 속한 자연적 공유자산의 수익이나 또는 지식, 정보, 빅데이터 등과 같은 인공적 공유자산의 수익처럼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따질 수 없고 어떤 특정인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수익”을 뜻한다. 또한 우리는 사회 내 및 사회 간 소득 차이의 주 요인으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접근을 지목하고 이것의 대부분은 외부성의 산물이라고 본 허버트 사이먼(Simon, 2000)의 주장을 떠올려볼 수도 있을 것이다. Simon(2000)은 이러한 외부성이 선진국에서 소득의 90% 이상을 창출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전체 사회 구성원이 공동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90% 혹은 70% 비례소득세를 바탕으로 한 기본소득 지급과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들의 운영이 정당화되는 것이다(Simon, 2000).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토지보유세, 탄소세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세, 소득세 등도 기본소득의 정당한 재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저자가 지공주의에 입각한 기본소득 옹호론을 ‘정통파 기본소득 모델’로 명명한 것도 이론의 여지가 많으며, 기본소득의 다양한 가능한 재원들 내에서 정당성을 기준으로 위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어떠한 형태의 기본소득이 현실에서 먼저 도입되어야 할지는 재원의 정당성 여부 혹은 위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의 시급성, 정치적 지지와 실현가능성 등의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다.

셋째, 변동형 기본소득제가 고정액수 제시형 기본소득제에 비해서 제도의 도입과 운용 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예측가능한 유의미한 액수의 기본소득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을 무화한다는 점에서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동형 기본소득제에서는 일반회계로부터 기본소득 특별회계로의 전입이나 기본소득 특별회계 부담의 일시차입이 불필요하고, 기본소득의 지급액수를 미리 제시할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국토보유세나 탄소세를 재원으로 한 기본소득 지급은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지급될 수 있는 기본소득 액수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으며 기본소득 액수의 변동성도 클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자체가 교정과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세금의 목적과 기대효과에 맞게 토지가격이 하향안정화되거나 탄소 사용이 크게 급감하게 될 경우, 기본소득 지급액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하거나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 기본소득이 예측가능한 유의미한 액수가 될 때에만 사람들이 ‘빈곤의 덫’, ‘불안정의 덫’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 공동체, 국가 수준에서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들을 산출할 수 있음을 고려해볼 때(Van Parijs and Vanderborght, 2017; 스탠딩, 2018; 금민, 2020b; 정상훈, 2020), 제도의 도입과 운용 면에서의 상대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정액수 제시형 기본소득제가 변동형 기본소득제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넷째, 변동형 기본소득제를 제안한다고 해서 다른 제도와 비교, 경합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예컨대 국토보유세나 탄소세를 재원으로 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 제안에 대해, 국토보유세나 탄소세로 확보한 세수의 전부 혹은 일부를 기본소득이 아니라 다른 방식, 곧 공공임대주택 건설이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에 쓰자는 반론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것이 사실이다(장



석준, 2019; 홍대선, 2021). 모든 사람이 기본소득 재원의 정당성, 또는 특정 재원으로 마련된 세수를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저자와 동일한 의견을 갖지 않는 이상, ‘정책의 가성비’ 등을 따지면서 기본소득을 다른 제도와 비교, 경합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전강수의 진지하고도 중요한 문제제기와 관련해서는, 이 글에서의 논의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좀 더 치열하고도 정치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기본소득에 관한 신학과 사회과학의 진지한 대화의 출발점이 된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이 책은 기본소득에 관한 신학적 옹호론, 특히나 기독교적 옹호론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필독서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금민(2020a). 기본소득 재정원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월례 쟁점토론회 (8) “기본소득의 재정원리와 시민소득세” 발표문 초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금민(2020b).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지금 바로 기본소득』. 서울: 동아시아.

스탠딩, 가이(2018). 『기본소득: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안효상 역. 파주: 창비.

안효상, 노호창, 서정희, 이건민(2021). 기본소득법 발의, 기본소득을 향한 의미 있는 첫발을 떼다. 계간 《기본소득》 7, 22-36.

이건민(2020). 지금 바로 기본소득의 형태로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계간 《기본소득》 6, 83-89.

이건민(2022).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는 어떻게 다른가. 계간 《기본소득》 11, 44-51.

장석준(2019). 농지개혁 70주년, 이제 ‘제2의 토지개혁’이다 - [장석준 칼럼] ‘무소속’이 성공시킨 1949년 농지개혁. 《프레시안》. [3월 12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32134>

정상훈(2020). 『동네의사와 기본소득: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김포: 루아크.

토리, 말콤(2020). 『시민기본소득: 기독교적 사회정책』. 박기주 역. 서울: 도서출판 해남.

홍대선(2021). “탄소세 거둬 전국민에 배당” vs “상품값 올라 저소득층 피해”. 《한겨레》. [6월 22일]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0346.html](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0346.html)

Aarøe, Lene and Michael Bang Petersen (2014). Crowding Out Culture: Scandinavians and Americans Agree on Social Welfare in the Face of Deservingness Cues. The Journal of Politics 76(3), 684-697.

Simon, Herbert A. (2000). A Basic Income for All: UBI and the Flat Tax. Boston Review: A Political and Literary Forum. [1 October 2000]

Van der Veen, Robert J. and Philippe Van Parijs (1986). A Capitalist Road to Communism. Theory and Society 15(5), 635-655.

Van der Veen, Robert J. and Philippe Van Parijs (2006). A Capitalist Road to Communism. Basic Income Studies 1(1), Article 6. [Reprint]

Van Oorschot, Wim (2006). Making the Difference in Social Europe: Deservingness Perceptions among Citizens of European Welfare Stat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6(1), 23-42.

Van Parijs, Philippe and Yannick Vanderborght (2017). Basic Income: A Radical Proposal for a Free Society and a Sane Econom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돌봄혁명

이지은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 1. 소개

이번 호에서는 지난 계간지(10호)에서 다뤘던 ‘탈성장과 돌봄’의 연장선에서, 독일의 ‘돌봄혁명’을 소개한다. 돌봄혁명은 그 논의의 일부가 국내에 소개된 이후(권김현영, 2021; 안숙영, 2021; 정은희, 2021a 등), 돌봄혁명의 제안자 중 한 명인 가브리엘레 빈커Gabriele Winker 박사가 가사돌봄사회화공동행동(준)의 초청을 받아 2022년 2월 24일 돌봄혁명에 대해 강연<sup>1)</sup>을 하면서 한국 사회를 혁신시킬 대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1990년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한 이후 독일에서는 뜻밖에도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흐름이 강화된다. 에너지재공영화 운동, 부동산 대기업 사회화 운동,<sup>2)</sup> 그리고 돌봄혁명이 그것이다(정은희, 2021a). 2014년 3월 베를린에서는 ‘좋은 삶과 더불어! 전 세계의 모두를 위해!’를 테제로 ‘돌봄혁명 집단행동회의’ Aktionskonferenz Care Revolution가 개최되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80여 개 이상의 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유급의 돌봄노동자뿐만 아니라 일상공간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정치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돌봄혁명 네트워크’ Care Revolution Network를 결성했다. 의료, 간병, 보육, 교육, 주거, 가사

1) 정은희(2021a). 독일의 ‘돌봄혁명’ 논의와 쟁점. 제1회 가사돌봄사회화포럼 발표문.

2) 정은희(2020). 독일 함부르크, 에너지 재공영화로 ‘기후’도 ‘노동자’도 지킨다. 《참세상》. [2020년 12월 18일]. 정은희(2021b). 베를린 대기업 부동산 사회화운동 성공... 56.4% 찬성. 《참세상》. [2021년 9월 27일].

노동, 성노동과 같은 사회재생산 영역의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더불어 페미니스트 단체, 반세계화 그룹, 자율주의 개입주의 좌파, 통합서비스 노조, 교사노조, 노동단체 등이 참여했다. 10개 이상의 지부가 있으며 매년 정기포럼을 개최해왔다. 작년부터는 ‘돌봄을 위한 광장’ Platz für Sorge 운동을 발의했다. 가브리엘레 빈커는 돌봄혁명의 주요 논지를 확립한 학자이자 활동가로 현재 돌봄혁명 프라이부르크Care Revolution Freiburg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돌봄혁명은 경제성장과 이윤극대화를 벗어나 인간의 필요를 사회 경제의 중심에 두는 민주사회를 지향한다. 돌봄혁명은 지역적·초국적 단위에서 함께 수행되어야 완수할 수 있는 정치적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실존적 고통에 벗어나 자신의 방식에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의 물질적 자원과 시간을 지금 당장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크게 4가지 전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노동시간 단축이다. 둘째, 연대적 지원구조 건설을 위해 조건 없는 기본소득과 무상 돌봄을 보장한다. 셋째, 민주적 참여형식의 발전이다. 이를 위해 돌봄위원회 설립 등 국가 기반시설을 민주화하고,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활성화하는 등 돌봄 영역을 민주적으로 재구성한다. 또한 기업과 기관들을 사회화하고 지역 돌봄위원회를 신설한다. 넷째, 다양한 생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연대적 조직 형태의 공유지commons를 지원한다.

돌봄혁명 운동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돌봄혁명은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완전고용 중심의 재생산 모델이 전지구적 노동분업에 기초하여 기능할 뿐임을 폭로하며, 가능한 모든 사람의 고용가능성의 양과 질을 높이는 방식이 아닌 돌봄노동을 중심으로 한 일사회의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필요needs를 중심으로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분할을 넘어, 사람들은 일 전체를 스스로 혹은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거대 프로젝트에서 기본소득은 인간의 필요를 일부 충족시키고 실존을 안정시키는 자원으로 기능한다.

둘째, 운동의 차원에서 연대 개념이다. 빈커 박사의 인터뷰(2018)에서 소개한 연대의 실천적·교차적·다차원적 접근처럼, 개인은 다차원적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연대하고 돌보는 존재로 그려진다. 돌봄 영역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단계에서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돌봄혁명은 풍부한 사회적 관계들을 개발·복원하고 나아가 반차별과 반배제, 반혐오를 원칙으로 한 연대사회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다른 운동과의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사회운동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경계 짓기의 방식이 아니라,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연대하려는 노력에서 시작한다. 일상의 작은 단위에서부터 초국적 단위까지 크고 작은 혁명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지난한 노력을 통해 더욱 강한 공통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고 개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돌봄혁명은 거대 프로젝트인 만큼 이제 초기 단계이고 모호한 부분이 많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연구하고 지지하는 시민으로서 이러한 접점을 확인하고 고민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사회를 출현시키는데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독일의 돌봄혁명가들은 기본소득을 어떠한 맥락에서 주장하고 있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 돌봄혁명의 주창자 중 한 명인 가브리엘레 빈커 박사의 인터뷰 전문을 싣는다. 이를 통해 돌봄혁명의 주창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맥락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들이 그리고 있는 ‘연대 사회’의 상과 실현전략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을 높일 수 있는데 단초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 [번역] 돌봄혁명<sup>3)</sup>

### 1) 서문

가브리엘레 빈커는 독일 함부르크 공과대학 노동-젠더-기술학(Arbeit-Gender-Technik) 교수이다.<sup>4)</sup> 빈커는 자신의 작업에서 항상 이론적 분석과 과학적 결과를 정치적 행동과 결합하려고 시도한다. 빈커는 ‘돌봄혁명’ 운동의 주요 창시자 중 한 명이다. 이 정치적 참여는 긴축정책의 맥락에서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에 대한 그녀의 분석을 근거로 한다. 돌봄혁명(Care Revolution)은 자본주의에 대한 심도 있는 비판을 포함하고 이를 연대 사회(solidary society)의 비전과 결합한다. 돌봄혁명은 돌봄 부문의 정치적 전환 전략(political transformation strategy)으로써, 중국에는 사회의 정치적 전환 전략으로써, 모든 돌봄제공자와 수혜자를 포함하여 사회운동, NGO, 노동조합 등에 헌신한다. 돌봄혁명은 다양한 조직과 개인들 간의 협력이 시작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정치적·과학적 관점을 결합하고자 한다. 평등, 다양성, 포용(Equality, Diversity and Inclusion)의 이번 특별 호에서 논의된 것처럼, 돌봄혁명은 경제, 정의,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므로, 우리는 가브리엘레 빈커를 초대하여 그녀의 이니셔티브, 배경, 아이디어, 실천, 관점에 대해 인터뷰하였다.

### 2) 가브리엘레 빈커와의 인터뷰

**아우렌바허, 리그라프:**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독일의 긴축정책에 의해 촉발된 돌봄과 돌봄노동을 주제로 한 저항운동 중 돌봄혁명 네트워크는 가장 주목받은 활동가 연합입니다. 돌봄혁명 개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고, 또 같은 제목으로 책을 저술했었죠.<sup>5)</sup> 동기는 무엇이며, 이 일을 통해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빈커:** 출발점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서 돌봄노동자의 사회적 제반 조건(framework conditions)이 완전히 불충분하고 여전히 돌봄노동은 정치 영역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직장가 가족의 삶에서의 요구들을 다뤄야 하는지를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그들 능력의 한계치까지 일하는 것을 요구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가령 지속적인 교육과 체력관리를 함으로써 자신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유지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피로도는 특히 여성이 수행하는 가족 돌봄 노동에서의 높은 요구들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실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숙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부터 건강한 식사를 보장하는 것까지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이미 성취에 대한

3) 2018년 <평등, 다양성, 포용(Equality, Diversity and Inclusion)> 저널에 실린 빈커 박사와의 인터뷰 전문을 번역하였다. 인터뷰어는 오스트리아 린츠 요하네스 케플러 대학의 사회 및 사회 분석학과 교수인 브리기테 아우렌바허(Britte Aulenbacher)와 독일 파더보른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인 비르기트 리그라프(Birgit Riegraf)이다. (감수: 안효상)

4) 2003년~2019년까지 함부르크 공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였다. 이후 돌봄혁명의 전환전략에 관한 출판과 정치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2021년 4월에는 『연대적 돌봄경제: 돌봄과 기후를 위한 혁명적인 현실정치(Solidarische Care-Ökonomie: Revolutionäre Realpolitik für Care und Klima)』를 출간하였다.

5) Winker, G., Aulenbacher, B. and Riegraf, B. (2018), “Care Revolution”, Equality, Diversity and Inclusion, Vol. 37 No. 4, pp.420-428.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가정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은 부모가 무력한 자녀를 만납니다. 그들 모두는 홀로 또는 함께 보내는 여가, 다시 말해 그들 자신이 선택한 대로 보내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삶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스스로 부당한 과부하를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중국에는 정신질환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지난 10년 동안 독일에서 번아웃과 중독성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우울증이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돌봄 직종에서 불균형적으로 더 자주 발생합니다. 비용에 대한 압박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돌봄노동자들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관심을 기울일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함으로써 이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보상하려고 하며, 어떤 경우에는 무급으로 초과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돌봄노동의 제반 조건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업과 정부정책은 현상유지에 집요하게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의 최대 가치증식 valorisation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성장과 가능한 한 최고 수익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또한 독일의 가족정책을 규정합니다. 돌봄노동자를 지원하지 않으며 주로 여성의 고용을 늘리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정책의 목표는 경제정책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돌봄노동 조건의 개선 방향에 있어 모든 단계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돌봄 운동은 끈기 있는 인내와 현재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의 진정한 혁명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제가 2009년에 처음 개괄한 돌봄혁명 개념의 접근방식입니다. 2012년 대항 세력이 필요하며, 이 대항 세력은 사회운동에서 출현해야만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정치 영역에서 동료활동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돌봄혁명은 관점의 근본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는 전환 전략transformation strategy입니다. 동시에 일상적인 돌봄 관계에서 돌봄노동자와 사람들 사이의 정치적 네트워킹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돌봄혁명은 이윤극대화 대신에 인간 필요의 실현the realisation of human needs을 사회 및 경제활동의 중심에 두는 도전에 관한 것입니다. 나아가 다른 누군가를 희생하지 않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며 포괄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재생산 노동에 대한 페미니스트 정치의 통찰을 기반으로 하는 돌봄혁명은, 돌봄노동의 근원적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정치 전략이나 지배적인 경제 이론에 등장하지 않는 돌봄노동이 사회변화의 준거점으로 선택됩니다. 가족적, 자발적, 전문적인 모든 형태의 다양한 돌봄 관계caregiving relationships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봄혁명의 첫 번째 목표는 환자, 실업자, 난민, 한부모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 실존적 고통에 벗어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물질적 자원과 시간을 지금 당장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관심사는 돌봄 노동이 더 이상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돌봄 책임을 맡은 사람들과 돌봄 노동에 의존하는 사람들 모두의 요구에 따라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봄혁명의 목표는 인간의 필요를 지향하는 근본적으로 민주적인 사회이며, 특히 유급 돌봄노동과 무급 돌봄노동의 구분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서로를 돌보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저는 이를 “연대에 기초한 사회society based on solidarity”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우렌바허, 리그라프:** 돌봄혁명은 정치 프로그램이고 활동가 연합은 다양한 그룹과 이니셔티브로 구성됩니다. 누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목표의 공통적 요소와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줄 수 있습니까?

**빈커:** 돌봄혁명 네트워크에는 다양한 정치적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이니셔티브들이 있습니다. 스펙트럼은 돌보는 친척 이니셔티브에서 장애인의 이익을 대표하는 그룹, 부모 이니셔티브와 이주조직에서 간호와 아동돌봄 직종의 노동조합 지부, 아탁<sup>attac</sup>과 같은 사회운동 단체에서 쿼어 페미니스트 및 급진 좌파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2014년 베를린에서 열린 전국 활동가 회의에서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80개 협력파트너가 돌봄혁명 네트워크에 합류했습니다. 독일에는 대도시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10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상적인 돌봄 관계에서 돌봄 노동자의 이익과 사람들의 이익을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돌봄혁명으로 대표되는 이니셔티브의 상당 부분은 페미니스트 또는 쿼어 페미니스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1970년대부터 페미니즘의 두 번째 물결의 일환으로 무급 재생산 노동의 재평가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오늘날, 돌봄자원의 개선을 위한 투쟁 차원으로서, 활동가들은 세대를 아울러 페미니스트 의제를 사회의 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재구성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 중 하나는 학자들이 정치적으로 자신을 위치시키는 “더 많은 돌봄을 *Care.Macht.Mehr*”입니다. 일부 그룹에서는 활동가들이 반자본주의와 페미니스트 입장을 결합하고 구조적 위기와 관련된 자기 삶의 상황을 논의하기도 합니다. 후자는 블록큐파이<sup>Blockupy</sup> 시위에 참여한 돌봄혁명 그룹이기도 합니다.

또한 돌봄혁명 네트워크의 일부는 최근 몇 년 동안 돌봄기관<sup>care-institution</sup> 노동쟁의에 관여해 온 노동조합 지부입니다. 예를 들어, 베를린에서 가장 큰 병원인 샤리테<sup>Charité</sup>의 통합서비스 노조<sup>ver.di</sup> 지부와 직원협의회<sup>staff council</sup>는 간호사를 위한 최소 직원 보장에 대한 독일 최초의 단체협약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노동쟁의는 “베를린 거주자에게 더 많은 의료인을 *Berlinerinnen und Berliner für mehr Personal im Krankenhaus*” 협회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 협회는 현재 샤리테의 통합서비스 노조 지부와 함께 돌봄혁명 네트워크의 협력 파트너입니다. 협회는 잠재적 환자의 이익 관점에서 명시적으로 연대 시위를 단행했습니다. 시립 아동돌봄 시설에서의 분쟁도 초기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15년 총파업 당시 요구사항 중 하나는 아동돌봄 시설과 사회서비스 영역의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적어도 임금인상의 형태로 인식되었습니다. 부모를 파트너로 동맹에 참여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이 있었고 이는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돌봄혁명의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자치시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세탈<sup>Lossetal</sup> 데이케어 센터에서 일하는 돌봄노동자들이 있는데, 이 데이케어센터는 1986년에 니더카우퐁엔<sup>Niederkaufungen</sup>에 설립된 코윈 내에 있는 직장입니다. 이 코윈에는 약 80명이 함께 일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포함해 다양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데이케어센터에는 코윈의 다른 구성원, 이웃, 친척이 가능한 광범위하게 참여합니다. 한편으로 이는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전략이며, 다른 한편으로 지역에서 상부상조자는 사람들의 사회적 이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전문적인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데이케어 센터가 이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가족 돌봄노동의 예를 들자면, 독일에서 “Wir pflegen-Interessenvertretung begleitender



Angehöriger und Freunde(우리는 돌본다 – 동반 친척 및 친구의 이익의 대변)” 협회에 의해 “돌봄을 통한 빈곤Armut durch Pflege” 이니셔티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의 목적은 피해를 입은 가족, 그들의 어려움과 요구사항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아마도 상당한 돌봄수당의 형태로 돌보는 친척을 위한 물질적 개선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하는 것입니다. 협회의 요구사항은 항상 돌봄을 받는 사람들의 인간 존엄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며, 이것은 지불능력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니코스팜Nicos Farm 협회는 다른 방법을 통해 유사한 목표를 추구합니다. 이것은 장애로 인해 평생 돌봄에 의존해야 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그 부모 자신이 돌봄에 의존해야 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그들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협회는 독일의 뢰네부르거 하이데Lüneburger Heide, 뢰네부르거 숲에서 숙박, 고용, 치료 기회를 포함하는 관련 프로젝트를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돌봄혁명과 협력하는 이니셔티브들의 한 가지 강점은 이질성heterogeneity입니다. 돌봄이라는 주제는 매우 다른 배경, 즉 매우 다른 정치적인 생각, 삶의 개념, 욕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 활동가 회의, 그리고 지속적인 지역 활동 속에서 이러한 다양성이 서로에 대한 상호 존중 및 호기심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항상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현실에서 다양한 이니셔티브 간의 협력은 쉽지 않습니다. 확실히 실제적이고 다면적인 투쟁과 대안 프로젝트가 돌봄노동의 모든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다른 그룹들과 개별 돌봄혁명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국제 노동자의 날)에 여러 도시에서 돌봄혁명 네트워크 활동가들이 보이지 않는 돌봄노동의 악명 높은 제반 조건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 많은 활동가들은 기쁘게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의, 종종 실존적 투쟁은 필연적으로 이니셔티브 활동의 중심이 됩니다. 많은 돌봄활동가들이 경험하는 시간과 돈의 부족, 지속적인 돌봄 책임 또는 불안정한 생활조건으로 인한 유연성 부족은 더 많은 문제에 대해 집단적으로 행동하기가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집단적 노력이 실제로 더 성공적이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경험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재 돌봄혁명이 사회운동으로서 더 많은 대중에게 출현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아우렌바히, 리그라프:** 돌봄혁명에 대한 당신의 책에는 독일의 돌봄 및 돌봄노동 조직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과 자기 돌봄과 돌봄caregiving의 근본적인 재구성을 위한 정치적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탈자본주의 또는 신사회주의 사회, 연대 기반의 평의회 민주주의의 비전council-democratic vision of a solidarity-based에 통합됩니다. 돌봄과 돌봄 노동의 재구성을 위해 특히 중요하게 보이는 학문적 분석과 정치적 비전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빈커:** 물론 모든 돌봄노동자들에게 실존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몇 가지 개혁들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조건적 기본소득unconditional basic income의 도입, 유급 근무일을 크게 단축하여 무급 돌봄노동뿐만 아니라 보다 편안하고 창의적인 여가시간을 위한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고,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현재 겪고 있는 실존적 불안 없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반적으로 일work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분배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과 논쟁들 속에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영구적으로 평가절하된 돌봄노동과 시민사회 및 정

차적 참여는 유급노동과 함께 좀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또 다른 결정적인 문제이자 돌봄혁명의 핵심목표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 민주적으로 다양한 돌봄 부문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특히 돌봄의 공동 조직은 실존적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사람들은 사회기반 시설로부터 매우 다양한 것들 원합니다. 가령, 아동돌봄, 노인돌봄, 예방 의료 또는 교육과 같은 영역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발언권을 부여하고 집단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프로비전<sup>provision</sup>을 개발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에 더해, 특히 돌봄 기관들의 경우, 지원이 필요한 대부분의 사회기반 시설이 도시 지역이나 마을에 분산적으로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을 비교적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민주화의 전제조건은 돌봄 시설을 사적소유에서 회수하여 자본주의적 가치증식 과정에서 철회하고 다시 일반 대중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어떻게 돌봄을 받고 치료 받으며 교육받을 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구체적으로 돌봄 부문의 민주적 재구성을 위해서는 두 가지 경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원탁회의, 지역 총회 또는 돌봄협의회를 설립하여 돌봄노동자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 기반 시설을 민주화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지역사회 프로젝트는 지역사회나 마을에서 풀뿌리로 설립되는 것을 의미하며, 자금마련에 대한 의무 없이 세금으로 재정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센터, 다세대<sup>multigenerational</sup> 주택 프로젝트, 보건센터,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유치원 등과 같이 수많은 프로젝트가 이미 존재합니다. 목표는 각 지역 안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두 경로 모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돌봄시설의 조직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전문가로서 이야기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형태의 자치정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돌봄을 잘 조직한다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한데 어울려, 다른 능력과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겪어나갈 수 있습니다.

돌봄 부문을 민주화하는 것에서부터 돌봄 원칙에 따라 사회 전체를 조직하는 것은 그리 큰 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 국가, 가족 전체의 민주화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를 인간의 필요에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한 필수 전제조건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접근입니다. 따라서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질적/양적으로 적절한 일 프로세스에 따라 사회적 수준에서 맞춰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활동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확장하는 수단으로 간주된다면, 무언가를 하는 것 그 자체가 필요<sup>needs</sup>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특히 저는 이것을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 전체, 즉 현재 유급과 무급노동은 모든 사람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스스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사람은 기반 시설 건설, 공동주택 건축, 유기농 식품 혹은 무공해 제품의 생산, 또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데 자신의 기술<sup>skill</sup>을 얼마나 투여할지의 여부와 정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체적인 공유지 기반 동료생산 프로젝트에서 그러한 공존의 획기적인 형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사람들은 일의 조직과 분할, 일의 결과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집단적으로 그리고 동료로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더 나은 돌봄조건을 위한 돌봄 투쟁에서 얻은 경험은 포괄적 사회화<sup>comprehensive socialisation</sup>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돌봄 부문을 넘어 확장할 수 있으며, 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모든 목표는 퀴어-페미니스트적 통찰에 근거하여 성별, 성적 지향, 사회적/민족적 배경, 국적, 신체적 능력과 같은 사회적으로 확고한 범주에 기반한 배제와 차별에 매우 일관되게 저항해야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를 돌보는 개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경우, 우리의 정치적이고 여러 다른 활동들에서 우리와 다르게 구성된 사람들에 관해 우리 자신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장기적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 규모를 포함하여 집단과 개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모욕에 저항하고 열린 협력 문화를 실천하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경쟁이 아닌 연대를 핵심 조직원칙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돌봄 혁명의 목표인 ‘연대에 기초한 사회(society based on solidarity)’입니다.

**아우렌바허, 리그라프:** 당신의 책에서 학술연구와 정치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며 때로는 명시적으로 때로는 더 암묵적으로, 현재의 돌봄 체제에 대한 분석이 끝나고 대안적 비전이 시작되는 곳을 그려냅니다. 당신은 돌봄혁명을 정치적 프로그램으로 언급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학자로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당신은 주제를 스스로 정하지 않고, 사회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오래된 논쟁에 뛰어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학문은 사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학문과 정치, 또는 사회학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이해한 것이 당신이 돌봄혁명에 참여하는 데 기반이 되었습니까?

**빈커:** 학자로서 제 역할에 대해 스스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수행한 분석과 경험적 결과가 사회의 인간화(humanisation of society)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내 방법론적 관점은 항상 주체지향적 연구(subject-oriented research)였습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에 따라 2009년에 니나 데겔레(Nina Degele)와 저는 실천학적 교차적 다차원 접근 방식(praxeological intersectional multilevel approach)에 대한 책을 출판했습니다.<sup>6)</sup> 이 책에서 우리가 제안한 것은 이론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으로 알려진 사회 분석에 기초하여, 사회적 실천들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위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정하고, 그들이 어디에서 방해물을 확인하고 차별과 억압을 경험하며 또한 저항을 실천하는지를 알아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통찰을 출발점으로 삼아, 이 경험적 과정에 관련된 사람들은 자신을 둘러싼 구조와 규범에 직면한 결과로서 각자의 사회적 위치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통찰을 얻기 위해 공동연구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연구를 통해 완성된 주체 구성에서 자신을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결과적인 사회적 지위, 차별과 불평등의 근본적인 의미, 그리고 이것이 현재 사회의 형성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교차적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인식하고 그들의 사회적 실천과 행동방식이 일으킬 변화에 대해 생각한다면, 이러한 통찰들은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공동행동을 취함으로써 자신의 이념에 따라 삶의 환경을 바꾸기 시작하도록 점차적으로 돕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이 행위 연구(action research)의 원칙에 따라 공동

6) Winker, Gabriele: Degele, Nina: Intersektionalität. Zur Analyse sozialer Ungleichheiten. Bielefeld: transcript, 2009

연구자로서 적어도 잠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한, 인터뷰 대상자는 자신의 제한적인 행동이 어떻게 삶의 전망을 확장하는 데 제약이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들의 행동을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성찰할 수 있습니다.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공동행동을 취함으로써 이에 대해 차츰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는 대학의 경계를 넘어 정치와 연구의 연계를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령, 매년 돌봄혁명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돌봄혁명 활동가들이 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과 이를 정치화할 기회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사회적 재생산 위기에 대한 분석이나 연대에 기반한 사회를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집단적 사고 작업을 하는 동안, 저는 나의 학문적 통찰력을 정치적 행동의 준거점으로 삼는 것 외에 학문의 다른 어떤 방식을 상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스 홀츠캠프<sup>7)</sup>의 비판심리학<sup>critical psychology</sup>에 따라 논하자면, 저는 비판적 학문이 주체의 실천으로부터 발전되어야 한다면, 저 역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주체로서 제 분석의 더 나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저는 열정적인 학자로 남아있습니다. 정치 영역에서 (가능한 자주 협력하여) 사회의 구체적인 측면과 씨름하고 책상에서의 분석적 성찰과 결합하는 것만이 저를 비판적 학자로 발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우렌바허, 리그래프:** 오랜 시간 동안, 전지구적 발전과 지역적 발전의 관계는 사회학에서 성찰해온 일반 주제였습니다. 세계화<sup>globalisation</sup>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지난 세기 말 이후 초국적<sup>supra-, inter-, trans-</sup> 그리고 국가적 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얽혀 있음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연구주제로서 돌봄과 돌봄노동은 결코 지역적이거나 국가적<sup>national</sup>이지 않았으며, 오늘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돌봄혁명의 아이디어에 대한 당신의 관점에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정치적 프로그램으로서 돌봄혁명에서 그리고 사회 분석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빈커:** 돌봄혁명의 전환 전략은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에 대한 제 사고로부터 분석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저의 출발점은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 임금 노동과 무급의 재생산 노동의 결합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산방식은 재생산 비용이 과도해지지 않으면서 가능한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매우 유능한 노동자들을 요구합니다. 특히 글로벌 경쟁으로 인해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감축하려는 시도가 현재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임금을 낮추고 임금노동의 강도가 강화되고, 야간 및 휴일까지 임금노동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별, 혼인 여부, 부양자녀와 친척 수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가능 연령의 사람들은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꾸려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게다가, 사회 분야의 국가 급여가 줄어들고 사회적 이전지불의 개인 안전망이 제한됩니다. 한편, 자신의 고용가능성을 유지하는 일은 점점 더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은 가족의 맥락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재생산 노동을 수행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자녀와 친척을 돌보는 일이 무보수로 진행되고 고립되어 사적으로 수행된다는 사실은 이러한 발전이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그러나 기업과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성공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현재 노동

7) Holzkamp, Klaus: Grundlegung der Psychologie. Frankfurt/New York: Campus, 1983

력 재생산 비용에 대한 하방 압력이 있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유능한 노동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윤 극대화와 노동력 재생산 사이의 모순이 심화되는 한, 노동자의 양적/질적 가용성(availability)에 극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자본의 가치증식 조건을 상당히 악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저는 과잉축적 위기 분석에서 훨씬 더 많은 논의가 되어야 하는 사회적 재생산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자본은 근본적으로 재생산 비용을 지속적으로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가는 데이케어 시설을 확충하는 것처럼 아주 가끔씩만 대응합니다. 이것은 비용이 상승하면 독일 자본의 가치증식에 실질적 기초가 되는 무역 수지 흑자가 더 이상 동일한 수준으로 달성될 수 없다는 사실과 직결됩니다.

정치적으로 이것은 돌봄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돌봄 운동은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현재 사람들의 삶과 종종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조건 속에서 진정한 혁명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공적인 돌봄 혁명은 또한 돌봄노동자를 위한 더 나은 제반조건을 위해 지역적으로 싸우면서 전 세계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에만 활동구성원이 있는 오늘날의 독일어 사용지역 돌봄혁명에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기 분석에 글로벌 경쟁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설명했지만, 이러한 사회적 재생산 위기의 영향은 국경을 넘어 관찰될 수 있으며, 돌봄혁명이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는 돌봄노동 분야에서 매우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국제기준에 따라 임금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숙련 노동자의 부족은 가령 돌봄 직종에서 외국인 숙련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독일의 직업훈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출신 국가에서 숙련노동자가 고갈되면 해당 국가의 사회적 재생산 위기는 악화됩니다.

가정 안에서 이뤄지는 이주 가사도우미 또는 24시간 돌봄노동자 중에서 보수가 좋은 개인은 신자유주의 재생산 모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상당한 임금 격차로 인해, 부유층은 돌봄 노동의 요소를 상업화하여 고용조건이 불규칙한 이주 여성에게 돌봄책임을 떠넘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보장 혜택이 없고 최저임금 미만으로 일하며 병가나 유급휴가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가사 영역에 24시간 고용된 돌봄노동자에게는 독일 노동시간법이 정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원하는 재생산 모델(고용가능한 모든 사람들의 완전하고 지속적인 고용)은 매우 부당한 전지구적 분업에 기초하여 기낼 뿐입니다.

**아우렌바허, 리그라프:** 돌봄혁명에 대한 초기 생각들을 돌아보고 앞으로를 바라본다면, 돌봄혁명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또 어떠한 변화를 원하고 의도하고 있습니까?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빈커:** 돌봄혁명 네트워크가 정치적으로 활성화된 지난 3년 동안, 돌봄에 대한 담론뿐 만 아니라 돌봄 혁명에 대한 담론에 뚜렷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역 활동을 통해 점점 더 헌신적인 개인과 정치단체가 우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정당이나 교회 단체 그리고 좌파와 페미니스트 이니셔티브에서 온 청년과 같이, 매우 다양한 조직에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는 폭넓은 독자층을 보유한 여성잡지 브리짓 우먼Brigitte Woman과 좌파 논쟁의 중요한 저널인 “분석과 비판Analyse und Kritik”에서 우리의 관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돌봄노동자의 초기 물질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의 다음 목표는 지역과 도시에서 우리의 지역 활동을 상당히 증가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병원의 간호 직원을 위한 구호 동맹으로 알려진 단체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돌봄혁명가로서 우리는 가능한 많은 잠재적 환자들이 순전히 자신의 이익에 기반하여, 더 높은 의료인의 수준을 요구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돌봄노동자의 더 나은 노동조건을 위한 투쟁은 모두를 위한 노동 및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과 부모, 환자와 가족구성원의 이익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캠페인이 끝나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동맹에 참여했던 그룹은 이후에 계속 협력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대응으로, 지역 돌봄협의회의 설립이 향후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인 프라이부르크 돌봄혁명 지부는 이러한 돌봄협의회<sup>care council</sup>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돌봄협의회의 회의들은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공개됩니다. 사람들은 전문가로서 일상생활, 노동조건,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 알릴 것입니다. 주제에 따라 이들은 유치원 교사, 부모, 돌봄노동자, 환자, 돌보는 친척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페미니스트 활동가 또는 직원 평의원도 될 수 있습니다. 돌봄위원회는 돌봄 이슈에 대한 공적 담론을 지속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부정의 사례에 대해 주의를 끌 수 있으며, 이러한 불의의 원인을 폭로하고 다른 정치적 이니셔티브와 협력하여 구체적인 요구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 지금까지 다소 산발적이었던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돌봄 분야에 헌신하는 사람들 사이의 접촉을 영속화하고, 그리하여 향후 공통의 방식<sup>common approach</sup>에 대한 토론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가장 시급한 과제는 돌봄혁명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탈성장 운동과 같은 다른 사회운동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회/생태지향적 정치 실천에는 공통적으로 몇 가지 핵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필수<sup>necessities</sup>를 중심에 두고, 전반적으로 삶/생명<sup>life</sup>에 관심을 두며, 풍부한 사회적 관계를 중요시하고, 아무도 배제하지 않는 사회적 제반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강조점이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핵심을 구성합니다. 이것의 핵심은 자본주의 발전이 낳은 다양한 결과, 즉 생태계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모두를 파괴한 것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합니다. 이것은 연대를 기반으로 한 삶/생명 프로젝트를 담론적이고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기반이 됩니다. 개인의 투쟁들은 다른 사람과 사회적 대안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개별운동에서 온 매우 다양한 행위자들이 만나 정치적으로 활동하게 될 때, 그들이 오래되었든 새로운 것이든 배제를 피하면서 대안적 사고와 실천에 대해 서로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

#### 참고문헌

권김현영(2021). 산업혁명 넘어 돌봄혁명으로. 문화일보. 《문화일보》. [2021년 1월 4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0401031312000001>

안숙영(2021). 독일에서의 젠더와 돌봄혁명 논의. 『세계지역연구논총』 39(1), 137-164.

정은희(2020). 독일 함부르크, 에너지 재공영화로 ‘기후’도 ‘노동자’도 지킨다. 《참세상》. [2020년 12월 18일]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622>

정은희(2021a). 독일의 ‘돌봄혁명’ 논의와 쟁점. 제1회 가사돌봄사회화포럼 발표문.

정은희(2021b). 베를린 대기업 부동산 사회화운동 성공... 56.4% 찬성. 《참세상》. [2021년 9월 27일]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263&page=1>

정은희(2022). 독일 ‘돌봄혁명’ 제안자 가브리엘 빈커, 강연자로 나선다. 《참세상》. [2022년 2월 22일]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540>

Winker, G., Aulenbacher, B. and Riegraf, B. (2018), “Care Revolution”, Equality, Diversity and Inclusion, Vol. 37 No. 4, pp.420-428.

[https://www.gabriele-winker.de/pdf/Interview\\_Care\\_Revolution\\_EDI.pdf](https://www.gabriele-winker.de/pdf/Interview_Care_Revolution_EDI.pdf)

돌봄혁명 홈페이지 <https://care-revolution.org/english/>

가브리엘레 빈커 홈페이지 <https://www.gabriele-winker.de/english/index.html>

# 「프란치스코 교황과 기본소득. 가톨릭 사회교리와 신학의 맥락에서」

Papst Franziskus und das Grundeinkommen  
im Kontext von Katholischer Soziallehre und Theologie

마르쿠스 슬라니트바이트 Markus Schlagnitweit

소개글: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번역: 이관형 계간《기본소득》편집위원

코로나 팬데믹 1년차였던 2020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 세계 사회운동 단체 대표자들에게 보낸 부활절 서한에서 기본소득이 인간적이고 그리스도교적 이상을 구체적으로 보장해 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기본소득에 관한 교황의 입장은 같은 해 연말에 출간된 대화록『꿈을 꾸자!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Let us Dream: The path to a better future)』(Simon and Schuster, 2020; 21세기북스, 2021)에서 보다 분명하게 표현된다. 해가 바뀐 후 2월 한국에서는 부활절 서한이 명백하게 기본소득 찬성을 뜻하는가와 관련하여 정치인들 간의 논쟁이 벌어졌다.

서한에 등장하는 표현인 ‘보편적 급여(retribuzione universale)’는 기본소득을 뜻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부활절 서한의 문맥 및 2020년 말에 출간된 대화록을 참조할 때 교황이 기본소득을 지지한 것은 명백하다는 주장이 등장했고 이 논쟁은 기본소득이 정치적 의제로 떠오른 당시의 정세와 맞물려 주요 언론에서 다루어졌다. 이 논쟁은 일종의 해석 논쟁 또는 번역 논쟁처럼 전개되었지만, 『꿈을 꾸자!』를 참조할 때 기본소득에 대한 교황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책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단호하게 말한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한 우리들의 사고를 바꾸는 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임금소득이 없는 사람들의 일이 사회에 큰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점이야말로 내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탐구해야 할 시간이 도래했다고 확신하는 이유이다.”

나아가, 교황은 기본소득의 효과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힌다. “기본소득은 노동시장의 관계들을 새로 형성한다. 기본소득은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동조건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존엄을 보장해 줄 수 있다. 기본소득은 복지주의의 낙인성을 제거하며 기술 중심의 노동유형의

점증하는 요구에 맞춰서 직업 간의 이동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기본적 보장을 부여해 준다. 보편적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은 사람들이 시간을 임금 획득을 위해 사용하는 것과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pp. 131-132) 기본소득에 대한 교황의 입장은 명확하며, 기본 소득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이보다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여기에 번역하여 올린 글은 기본소득에 관한 교황의 입장을 가톨릭 사회교리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다룬다.<sup>1)</sup> 저자는 오스트리아 가톨릭 사회아카데미(Katholische Sozialakademie Österreichs) 대표인 마르쿠스 슈라니트바이트 박사(Dr. Markus Schlagnitweit)이다. 오스트리아 가톨릭 사회 아카데미는 오스트리아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대표적 단체 중의 하나이며, 이 글은 원래 2021년 9월 28일 오스트리아 주간지《DIE FURCHE》에 실렸으며<sup>2)</sup> 저자의 허락을 받아 특별기고 형식으로 계간《기본소득》에 번역 게재한다.

종교의 관점에서도 기본소득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2016년 서울에서 개최된 기본소득지구 네트워크 대회에서는 종교인 라운드 테이블이 열렸으며 장로교, 성공회, 불교의 종교인들이 참여했다. 같은 해 『가톨릭 평론』 4호는 기본소득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2019년 한국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NCCK) 신학위원회는 토론회 〈기본소득이 신앙이다〉를 개최했고 2020년에도 기본소득 이야기마당을 열었다. 경기도가 중심이 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서도 ‘종교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 주제로 특별 세션이 열렸으며 가톨릭 개신교 불교 천도교의 종교인들이 참여했다. 2021년 11월에는 ‘하나님의 공의실현을 위한 그리스도교기본소득포럼’이 발족하였다. 이론적 작업으로서는 올해 초에 출판된 강원돈, 정미현 외 『한국교회, 기본소득을 말하다』(새물결플러스, 2022)를 들 수 있다. 앞으로 계간《기본소득》도 이와 같은 종교 관점에서의 기본소득 논의의 전개에 대하여 꾸준히 관심을 가질 것이다.

(소개글 금민, 번역 이관형)

1) 프란치스코 교황의 부활절 서한 이전에 독일어권에서 가톨릭 사회교리의 보조성의 원리와 사회국가의 보충성 원리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논한 글로서는 이미 가톨릭 신학교수인 Schramm(2008)을 들 수 있다. Schramm, Michael. “Subsidiäre Befähigungsgerechtigkeit durch das Solidarische Bürgergeld”. In Straubhaar, Thomas (eds.)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und Solidarisches Bürgergeld – mehr als sozialutopische Konzepte. Hamburg: Hamburg University Press, 2008, pp. 177-218.

2) 원문은 <https://www.furche.at/religion/papst-franziskus-und-das-grundeinkommen-6222652# timeline>. 교황 서한 이전에 이미 저자는 가톨릭 사회교리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옹호한 바 있다. 다음 글을 참조하라. Schlagnitweit, M (2007).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Zugänge aus Katholischer Moralthologie und Soziallehre”. In Gerechte Arbeitswelt. Globalisierung, Flexibilisierung, Armutsbekämpfung?, ed. K. Poier/F. Prettenhaler, Schriftenreihe des Dr. Karl Kummer-Instituts, Bd. 4, Graz: Leykam, pp. 249-256.

## [기고문에 대한 저자의 배경 설명]

아래 기고문이 유럽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교류와 토론을 촉진시키기 바란다. 특히 가톨릭적인 맥락(katholischen Zusammenhängen)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다고 그 맥락에서만 촉진되기를 바라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인권으로 이해되는 기본소득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텍스트가 기본소득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 유럽 시민 행동 Europäischen Bürgerinitiative의 “EU 전역의 무조건적인 기본 소득”에 대한 비준을 통해서, 또한 유럽 미래위원회의 틀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를 통해서 말이다.

2021년 9월 28일. 비인에서

마르쿠스 술라니트바이트, 가톨릭 사회아카데미 대표

## 프란치스코 교황과 기본소득

### - 가톨릭 사회교리와 신학의 맥락에서 -

이제 교황도 참여하고 있다. 1년 전인 2020년 부활주일의 한 서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활동하는 대중 운동(movimientos populares) 구성원들과 그들의 숨은 노고(Arbeit)에 경의를 표했다. 그는 그 구성원들로 노점상, 환경미화원, 농업노동자, 소농, 건설노동자, 간병인(여성과 남성 모두를 의미함)을 꼽았다. 교황은 사회적 공생에서 그들의 중요한 공헌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들은 시장 지향적 메커니즘을 지닌 경제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노고는, 그들을 보호하는 법적 보장은 고사하고 적절한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런 사회현상이 라틴 아메리카에만 국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제 노동 기구(IL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의 사람들(그 중 3분의 1은 여성)이 질병, 사고, 실업에 대한 보장이나 연금 없이 일하고 있다.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글로벌 팬데믹과 그에 필요한 대책의 맥락에서 보자면, 바이러스 자체보다도 사회보장의 부족으로 인한 기아, 빈곤 및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유엔개발계획(UNDP)은 세계 최빈국의 노동자 10명 중 7명<sup>3)</sup>이 사회부조를 받을 자격이 없는 비공식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을 위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교황도 그의 서한에서 위태롭거나 비공식적인 상황에 일하고 있는 사

3) 프란치스코 교황, 『꿈을 꾸자! 자신감을 가지고 위기를 벗어나는 꿈을』, 원헌(원제) 2021, ISBN 978-3-466-37272-0.

람들을 위하여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지지하였다. 그것도 팬데믹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만이 아니라 극복된 이후에도 시행되는 기본소득을 말이다.

· 이러한 기본소득은 “매우 인간적인 동시에 매우 그리스도교적인 요구 즉 권리 없는 노동자는 없다”라는 요구를 충족시킨다.

불과 6개월 후인 2020년 가을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널리스트 오스틴 아이버리Austen Ivereigh와의 대화를 바탕으로 현재 독일어로도 출간된 그의 책 『꿈을 꾸자!』에서 그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감한 길을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세계 질서 내지 포스트 코로나 세계의 사회 재편을 요구한다. 거기에서 ‘보편적인 무조건적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재차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한 교황의 가장 중요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기본소득은 노동시장의 관계들을 변화시키며 사람들에게 빈곤을 지속시키는 고용조건들을 거부할 수 있는 존엄성을 보장한다.
- 따라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을 제공하고 나아가 가부장적인 동시에 의존을 지속하게 만드는 복지국가의 낙인을 제거하며
- 뿐만 아니라 기술 중심의 노동유형이 점점 더 요구하는 직업 간 이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 궁극적으로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생계를 위한 벌이와 커뮤니티 참여를 서로 결합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서한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상술하지는 않는다. (만약 상술을 했더라면) 기본소득에 기반한 사회시스템의 보다 구체적인 형태에 대한, 즉 그 사회시스템이 금융에 그리고 교육·건강 등과 같은 여타의 사회영역에 미치는 효과들에 대한 정치적 논쟁에서 매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교황의 기본소득 옹호에 대한 수많은 비판적 논평들은 그가 현실성을 결여하였다고 여기며, 그의 전문성을 의심하거나 그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그의 발언을 상대화한다. 교황의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은, 아마도 교황이 그의 전임자들보다 더 많이 배려하는 이 세계의 가난한 지역의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삶의) 개선을 가져올 정도의 낮은 수준의 세계적 차원의 사회적 최소보장인 듯한데, 유럽 사회의 맥락에서는 사실 논의할 거리가 되지 못하는 수준일 것이다.<sup>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중심사상은 가톨릭 사회교리Katholische Soziallehre가 중심적 토대가 될 수밖에 없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가톨릭) 교회내부의 기본소득 논쟁에 대해 강력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공교롭게도 사회교리는 종종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여 제시된다. 내 의견에 따르면 매우 부당하게도 말이다.

4) 독일 가톨릭 기업가 연맹BkU U. Hemel 회장의 2020년 12월 4일 Domradio.de와의 인터뷰에 따름(<https://www.domradio.de/nachrichten/2020-12-04/wirtschaftlich-unrealistisch-bkuzu-papst-forderung-nach-bedingungslosem-grundeinkommen>).

## 1.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성

2020년 부활 주일 교황의 서한은 또한 교회 내에서 폭넓은 공감을 얻었다.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캐나다와 미국 예수회 회의 회장인 티모시 케시킴<sup>5)</sup>의 반응은 특히나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 같다. 그는 단호하게 교황의 (기본소득) 의제를, 출간된 지 130년이 된 가톨릭 교회 최초의 사회 교서인 *레룸 노바룸*<sup>6)</sup>과 같은 반열에 위치시켰다. (교황이 간청한 지) 다시 1년이 흘렀다. 기본소득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하는 데 본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사실 레룸 노바룸이래 현대 교회의 사회적 선언의 근본에는 정의에 대한 요구가 있다. 즉 모든 노동자들과 그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동수입만으로도 삶을 안심하고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곧 “가족임금”). 그런데 충분한 임금인상을 보장하는 동시에 질병, 사고, 고령, 교육, 실업이나 여타의 이유로 인해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저 모든 이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도 마련하려는 이 요구를 노동자들의 연대 투쟁만으로 충족시키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 같다. 이에 비해, 위에서 언급한 ILO 및 UNDP의 보고는 - 팬데믹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왜곡과는 무관하게 - 불안정한 고용관계에 처한 사람들의 수가 점증하는 데에 주목한다. 이 사람들은 일자리는 있으나 자신과 자신이 부양해야 하는 사람들의 생존을 보장할 정도의 소득을 벌어들일 수가 없다. 하물며 (지금처럼) 치명적인 소득 저하를 발생시키는 사건(팬데믹;역주)으로 인한 경우해야 무슨 말이 필요하랴.

그러나 그 보장<sup>Garantie</sup>이라는 것도 그저 생존보장 정도의 가계소득 - 그 소득이 유급노동 *Erwerbsarbeit*에 의한 것이든 유급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응분의 사회적 급여이전에 의한 것이든 - 일 뿐이어서 레룸 노바룸의 본래적인 근본 의제<sup>Anliegen</sup>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 최초의 사회교서는 산업노동자계급의 사회적 통합이라는, 당시로서는 필수불가결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했다. 이 통합문제가 단순히 생존보장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전혀 아님은 물론이다. 즉 반세기 후인 1948년 세계 인권 선언 22조에서 공식화한 것처럼, 이 문제는 오히려 일반적인 시민적 기본권과 자유권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기본권의 보장에서 그 답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세계 인권 선언 22조)<sup>7)</sup>. 23조는 이 권리를 상술한다. 즉 노동, 자유로운 직업선택, 합당하고 만족스러운 노동조건 및 실업 보호에 대한 각인의 권리를 명시한다. 하지만 그럼으로써 그 조항은 현대의 유급노동사회들에 대한 역사적으로 발전한(그렇지만 결국은 우연적인) 이해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그 이해대로라면 인간 노동은 유급노동과 단순히 동일시되며 그 조항의 실

5) 2020년 12월 4일자 “행동하는 신앙”을 참조할 것. (<https://faithinaction.org/news/pope-francis-sends-letter-to-movement-leaders-on-easter-sunday-amid-covid-19-calls-on-world-to-consider-universal-basic-wage/>).

6) 레룸 노바룸은 1891년 5월 15일 교황 레오 13세가 내린 공개서한 형식의 교서이다. <자본과 노동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새로운 사항들에 관하여 of the new things’ 적고 있다.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인 변화들revolutionary changes’을 담고 있다. 노동과 자본, 정부와 시민의 관계와 상호 의무를 다룬다. 현대 가톨릭 사회교육의 기본텍스트로 간주된다.(역주) ([https://en.wikipedia.org/wiki/Rerum\\_novarum](https://en.wikipedia.org/wiki/Rerum_novarum))

7) 외교부 홈페이지 번역문에 따름(역주) ([https://www.mofa.go.kr/www/brd/m\\_3998/view.do?seq=30333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0](https://www.mofa.go.kr/www/brd/m_3998/view.do?seq=30333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0))



행은 동시에 “정상적인 경우”를, “필수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향유하기” 위한 생존보장 Existenzsicherheit 내지 전제의 회복으로써 제시한다. 23조에 명시된 모든 사람의 노동권은 유급노동의 권리로 되며 거의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자유 시장경제 형식의, 따라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거래 가능한” 노동의 권리가 된다.

그런데 자유로운 직업 선택, 합당하고 만족스런 노동조건과 실업 보호와 같은 여타 기본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생존보장적인 유급노동권의 보장은 곧바로 시장 경제적 근본원리와, 특히나 수요 공급의 자유로운 작동이 지니는 중심적인 조절기능과 논리적·실천적 모순에 처한다. 이 아포리아에 대해 현대의 유급 고용 사회들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한다. 유급노동사회 자체의 논리 그 자체가 인간의 생존적 기본 욕구가 되는, 생존보장적인 유급노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으려면 한편으로 경제성장의 정도가 더 이상 다른 기본적인 욕구들의 충족을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유급노동(고용)의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sup>8)</sup> 다른 한편으로는 유급노동사회들의 특징인 유급노동소득을 통한 생존보장이라는 규범적 전제 하에서 노동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 유급노동(고용)에 대한 의무로 전락한다. 그래서 가령 실업에 대처하기 위한 노동시장정책적 조치들의 개발 및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에 대한 장기연구는 유급고용을 받아들이는 때 합당한 조건의 지속적인 침식과 약화를 보여준다.<sup>9)</sup> 아울러 실업에 처했을 경우의 사회권적 급여이전의 수급 자격을 노동실적의 제공과 결부시키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으로 필요하거나 유용한 반대급부의 제공이 없이는 실업급여(어차피 그것도 사회보장 비용 납부를 통해 자격이 얻어지는 것인데)를 더 이상 부여하지 않는 구체적 모델들이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거나 여러 곳에서 이미 실행되어 왔다. 사실상 이러한 경향들은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노동권의 이행에 비해 노동의무의 증명이 우선적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여하간 유급노동사회에서는 노동의 권리보다 이러저러한 노동의무를 앞세우는 공간이 분명하고 끊임없이 존재한다.

그러나 특히 국가적인(사회법의) 입법은 그러한 공간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국가 내부 시민에 의한, “좋은 삶”의 다양한 기획들에 대해 국가에게 요구되는 중립성을 고려할 때, 가능한 한 가지 삶의 방식을, 즉 역사적으로 우연적이며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유급노동 사회의 노동윤리를 일반에게 구속력을 지니는 규범으로 삼고 사회법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대신 모든 사람이 사회의 부 Reichtum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Möglichkeiten를 개발하고 보장하는 것이 세계관적으로 중립적인 국가의 임무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언급된 두 인권 조항은 역사발전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신뢰 가능한 가치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에 명시된 노동권 선언은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 산업 사회의 사회사적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술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불필요하다는 것을 아울러 고려할 때 선언은 완전한 대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생계보장소득에 대한 권리”를 보완해 넣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기본 소득은 사회

8) “일자리 보장 및 확대를 위한 경제 성장”은 과잉 생산, 불 보듯 뻔한 제품의 노후화, 인위적인 소비 촉진으로 시작하여 재앙적인 생태학적 결과에 이르는 일련의 격변을 수반하는 경제 정책 슬로건이다.

9) E. Tálos/H. Obinger, Sozialstaat Österreich (1945-2020), Innsbruck (Studienverlag) 2020, ISBN 978-3-7065-6052-8을 참조하라.

보장 및 사회 참여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을 유급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적어도 물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다.

## 2. “노동”이란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우연적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현실 사회정책을 여전히 지배하는 현대 유급노동사회 노동윤리의 의문적 성격은 무엇보다도 관련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에 따라 지불되는 서비스로 노동개념을 협소화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 유급노동과 생계보장의 이런 규범적 동조화 Koppelung를 옹호하는 사람은 종종 “성서적인” 원칙을 - 특히 그리스도교적 맥락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논의할 때 - 끌어온다.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일하지 않으려는 자는 먹지도 말라”<sup>10)</sup> 라고 한다. 성서의 규정에 따르면 일을 하지 않으려는 자만이 부양받을 자격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성서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일을 하려고 하지만 적절한 생계를 보장하는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거나 가질 수 없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성서 구절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처음 온 품꾼과 끝에 온 품꾼에 관한 성서의 비유<sup>11)</sup>에서 모든 사람은 하루가 끝날 때 동일한 생계보장(가족) 임금을 받는다. 일과日課가 거의 끝날 무렵에야 비로소 일거리를 찾았기 때문에 짧게만 일을 하여 당연히 상응하는 실적이 경미한 사람이 이미 (때로는 상당히) 작업Leistung을 더 오랫동안 수행한 나머지 사람들과 똑같은 임금을 받았던 것이다. 여기서 언급된 생계보장적인 생활비에 대한 권리는 수행된 실제 노동 실적이나 수행된 노동의 시장 가치 또는 수익에 의해 측정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노동하려는 의지에 의해서만 측정된다. 그런데 언급한 비유는 그 내적 논리에 따라 그 이상의 해석이 가능하다. 수행된 노동의 시장가치가 성서적인 의미의 정의개념으로 볼 때 (생계보장적인) 임금지급의 타당한 근거로 제시될 수 없거나 그것과 분리된다면 인간 노동의 시장성은 일반적인 임금지급 근거로 통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도대체 어떤 노동 형식이 지급 자격을 창출하느냐는 질문에 적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성서는 노동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사회보장권의 전제 조건으로 인정하지만 결코 이것을 “시장성 있는” 노동과 동일시하지는 않는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0년 부활절 서한에서 강조한 것이 바로 이점이다. 그는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고 중요하며 심지어 필수적이지만 분명 시장성은 없는, “거래 가능한” 노동을 수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다. 그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사회보장적인 생계보장을 요구한다. 사실, 전통적인 사회시스템에서 사회보장과 시장지향적이고 “거래 가능한” 유급노동의 동조화는 역설적인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불합리한 것인 동시에, 어떤 경우에도 불공정한 차별로 이어진다. 즉 요리사, 교사, 간병인은 자신의 활동에 대한 임금을 받기 때문에 “노동”을 한 것이다. 반면 주부, 어머니, 자신의 노부모를 돌보는 딸은 대체로 동일한 “노동”을 한 것이지만 전통적인 사회시스템에서 통용되는 노동의 의미 및 여타 사회적 자격 기준에 따르면 “노동을” 안 한 것이거나 기준 미달일 뿐인 “노동을” 한 것이다. 널

10)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1) 마태복음 20장 1-16절

리 인정받는 국민경제학적 연구들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무급으로 제공되는 사회적 필수 내지 유용 sinnvolle 서비스는 최소한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며 그 대부분은 여성들이 수행하고 있다. 즉 가사나 봉사활동 등의 형태이다. 이 서비스들은 - 프란치스코 교황도 자신의 책 『꿈을 꾸자!』에서 암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 사회적 공생 Zusammenleben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삶의 질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그러나 지배적인 의식이든 실제 사회시스템이든 그것들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항상 노동과 소득의 동조화라는 유급노동사회 패러다임의 틀 내에서, 사회보장급여를 계산할 때 가족노동 시간도 산입함으로써, 이런 부당함 Ungerechtigkeit에 대항하려는 시도들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첫째, 여기에는 많은 여타의 무급노동 서비스가 여전히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무급노동 서비스의 (가능한 한) 전체적인 포함은 곧바로 모든 삶의 영역의 거의 예외 없는 경제화(상품화)로 나아갈 것이며 이는 가톨릭 사회교리와 배치될 것이다. 사람들 간의 무상 서비스 제공이야말로 연대의식의 직접적 표현인 동시에 교육의 장이며, 사회적 결속의 필수불가결한 “기본 비타민 Grundvitamin”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노동이 인간적인 인격 menschlichen Person의 계발에 필수적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없이 성서적인 간상에 부합하며 가톨릭 사회교리에도 부응한다. 가톨릭 사회교리는 이런 맥락에서 “노동의 존엄성” 까지 이야기하며 주저하지 않고 각자의 가능 정도에 따른 노동을 모든 인간의 윤리적 의무로 규정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옹호하면서 이에 대해 결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물론 성서의 노동개념과 이에 기초한 가톨릭 사회교리는 프란치스코 교황도 마찬가지로 유급노동이라는 협소한 개념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가톨릭 사회교리에서 노동은 생계를 보장하거나 생계를 유지하는 데 복무하는 자연적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신적인 창조 작업(종교적 차원)에 동참하는 것 Mitwirkung으로서 우리를 둘러싼 세계인 환경 Umwelt 및 우리가 함께 사는 세계라 할 동시대인 Mitwelt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인간이 노동을 통해 창조신 創造神의 형상대로 자신의 인격적 존엄성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노동은 개인적 차원을 지닌다.<sup>12)</sup> 노동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사회적으로 결합하며 가치 인정 및 사회 참여와 동참의 기회를 유발한다. 시장경제의 지배 하에서 가톨릭 사회교리가 요구하는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차원의 노동은 대체로 거부되는데, 적어도 무급 노동에서는 전적으로 그러하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거론하고 가톨릭 사회교리가 확인한 윤리적 노동의무는 어떤 경우든 가톨릭 사회교리가 요구하는 참된 인간적 노동의 차원들이 서로 균형 관계를 이루는 노동 형태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예컨대 자연적 기능이 일반적으로 여타의 모든 차원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노동 시장에 공급되는 모든 형태의 유급노동이 자동적으로 인류의 발전 Entfaltung에 도움이 되는 “선하고” 존엄한 노동인 것은 아니며, 그것을 특정한 사람에게 도덕적 moralisch 의무화할 수는 없다. 게다가 가톨릭 사회교리의 관점에서는 이 노동의무의 이행을 오로지 유급노동시장(=고용시장)으로의 통합만을 기준삼아 측정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개입하는” 사회 시스템에 대해 어떤 비판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역으로 기본소득의 실현은 사회보장과 사회참여의 동조화를 끌어내고, 노동개념을 협소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부정의와 여타의 왜곡을 유발하는 시장순응적인 유급노동에 제동을 거는 데에 가치 있는 공헌을 할 수 있다. 오히려 경험이 보여주는 바에 의하면, 기본소

12)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물론 예컨대 유급 활동으로는 결코 충족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환경 파괴적이며 사회적으로는 부정의를 증대시키거나 노동자 자신에게는 심각한 해를 입히거나 굴욕을 줄 수 있다.

득을 둘러싼 토론은 그 자체로 이미 인간적인 인격의 계발뿐만 아니라 사회적 결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늘 새롭게 다시 제기되는 노동의 의미, 존엄성, 중요성을 둘러싼 논쟁을 촉진한다.

### 3. 개인적 책임으로부터의 해방

가톨릭 사회교리의 보조성의 원리는 사회적 상위단위가 하위의 사회단위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대신 떠맡는 것을 일절 금한다. 그렇지만 동시에 상위단위는 하위단위가 과도한 부담을 지는 곳에는 - 보조적이라는 본래의 뜻대로 - 개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보수적인 논박은 바로 기본소득과 가톨릭 사회교리의 기본원리와의 모순을 지적한다. 그들의 비난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사람에게서 스스로 자신의 생계를 꾸리는 능력을 박탈한다. 즉 그 사람은 도리어 전혀 필요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을 수 있는 급여이전을 통해 “행복을 강요받는다”.

이 비난<sup>13)</sup>의 순전히 형식논리적인 결함은 논외로 하고도 위에서 서술한 것만으로 분명한 것은, 지배적인 시장 경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전혀 창출하지 못하며 그것의 “좋은”. 노동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가톨릭 사회교리적인 의미와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그 자신의 논리에서 볼 때 시장경제는 원래부터 이런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기본소득은 오히려 가톨릭 사회교리의 보조성 원리와 모순되기는커녕 그 반대로 그것으로부터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톨릭 사회교리적인 의미의 “좋은” 노동에 대한 기회와 더불어 인간적이고 사회적으로 정당한 생계보장 형식을 제공하는 일에 시장경제가 실패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소득은 말뜻 그대로<sup>14)</sup> 보조적으로 subsidär 작용한다. 개인은 기본소득을 통해 비로소 가톨릭 사회교리의 요구를 충족하는 “좋은” 노동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를 얻으며 그런 노동에 대해서만 도덕적 의무화가 가능하다. 자신의 책 『꿈을 꾸자』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증과정에서 근거로 삼은 것도 바로 보조성의 관점이다. 즉 존엄성을 위협하며 가난을 지속시키거나 생계상의 생존압력이 수용을 강요하는 고용조건들을 거부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은 노동시장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것이며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자유<sup>15)</sup>를 보장할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의 책에서 교황은 기본소득 반대자들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다. 그들은 기

13) 그와 반대로 현대의 기본소득 안들은 통상적으로, 누진세를 바탕으로 고소득자들이 자신의 기본소득을 소득세를 통해 여하간 다시 일반대중에게 “번제하게” 되는 소득세 개혁을 계획한다는 사실은 논외로 하고, 기본소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도 자기의 기본소득을 기부하든 증여를 하든 완전한 재량이 주어진다.

14) 라틴어 subsidium(보조)은 독일어 Hilfe(도움), Unterstützung(지원)과 같은 말이다.

15) 보수적 서클에서는 흔히 가톨릭 사회교리의 보조성 원리를 “개인적 책임의 원리”로 축소한다. 그럼으로써 기본적인 윤리적 패러다임에 따라 책임은, 제한이나 외부적 영향 요인 없이, 다양한 활동옵션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의미에서, 자유를 필수불가결하게 전제한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간과한다. 이러한 기본적 자유의 부재는 오히려 “책임”에 대한 어떠한 연사도 무의미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 기본적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기본적 자유가 - 보조성 원칙의 적용을 위한 전제 조건인 동시에 그것의 토대로서-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본소득이 사회적 온정주의Bevormundung 내지는 복지국가적 가부장주의Paternalismus의 발로라고 비난하려 든다. 교황은 마찬가지로 가부장적인 동시에 의존을 지속하게 만드는 복지국가의 낙인찍기에 대해 경고하며 기본소득이 바로 그 해독제라고 본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자유의 여지Freiheitsraum와 더불어 책임의 여지를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하지 않고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교황의 견해에 따르면, 기술 중심적인 작업방식이 점점 더 요구됨에 따라 기본소득은 직업 간 전환을 더 용이하게 할 것이다. 이 사실은 앞서 언급한 두 갈래의 접근방식과 함께 교황이 기본소득을 온전히 가톨릭 사회교리적인 의미로 이해된 보조성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시의적절한 “보조 subsidium”로서 이해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 4. 연대의 강화

연대는 사회적 결속의 “기본 비타민”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가톨릭 사회교리는 기본적으로 연대를 도덕적 요청으로 이해하지도 연대적 태도를 도덕적 미덕Tugend으로 이해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기정사실Seinstatsache로서, 즉 사회생활에서 기능하는 구성요소이자 기본조건으로서 이해한다. 유일한일자唯一者인 개인이,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지원하고 보호하며 보장하는 한에서 그 정당성을 지니는 모든 사회제도의 “근본이유이며 [...] 버팀목이자 목표인”<sup>16)</sup> 만큼이나 인간 개인의 자유도 다시 그만큼이나 그 자체로 존립하는 자기 목적이 아니라 그 전제조건으로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개인이 지니는 윤리적 의무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달리 말하자면 사회와 그 제도들은 인간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이는 다시 사회적 삶의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공동적 형성에서 발전한다.

기본소득 비판자들은 바로 가톨릭 사회교리의 근본원리인 이 연대가 기본소득으로 인하여 두 가지 방식으로 위험해진다고 본다.

- a)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구의 비율이 점점 더 작아지면, 이는 연대 의지를 과도하게 압박하여 결국은 사회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노동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고전적인 유급노동만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으로 인정하는 유급노동사회 패러다임의 노동 개념 및 가치창출 개념에서만, 이미 제시한 바와 같이 노동을 협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의심스러운 노동개념에서만 유효하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는 (심지어 대부분이) 임금 없이도 창출된다. 이에 대해서는 2020년 교황의 부활절 서한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대부분 또는 아예 전적으로 임금보상 없이 사회 공헌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적 연대의 표현이지 연대에 위협에 빠뜨리는 일은 아닐 것이다.

16) 제2차 바티칸공의회, 기쁨과 희망, 25.(Vaticanum II, Gaudium et spes, 25.)

b) 기본소득이 사회의 상당 부분에서,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의 생산적 기여를 회피하기 위해 오용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실제로는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인간의 연대행동은 크게 보면 사회적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로부터 자기가 존중받지 못하고 착취당하거나 배제되는 것을 겪은 사람들만이 자신을 “나쁘게 대하는” 이 사회에 무엇인가를 자발적으로 되돌려 줄 동기가 희박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역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 예를 들어 기본소득(!)을 통해 - 무조건적인 존중과 포용의 신호를 주는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자신을 “ 좋게 대하는” 사회에 더 많은 것을 되돌려 주고자 하는 용의를 가질 것이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할 수는 없는 것일까? 바로 그것을 통하여 기본소득은 연대적인 태도, 연대적인 행동 내지 활동의 차원에서 사회적 연대의 수준을 엄청나게 올려놓을 것이다.

기본소득이 누구든지 자유롭게 생활비 벌이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을 병행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주장은 바로 이러한 맥락을 지정한 것 같다. 교황은 사회생활의 이 두 측면(생활비 벌이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을 매우 당연한 것이자 똑같이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 같다. 양자는 인간 개인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서로 영향을 미친다. 기본소득은 어떤 경우에도 양자 사이에 필요한 균형을 유급고용사회보다 훨씬 더 잘 보장할 수 있다. 유급고용사회는 생계 벌이를 우선시하는 동시에 그만큼이나 삶에 필수적인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성과는 무상으로 가져간다.

## 5. 최고의 윤리적 요구

마지막으로 자유와 윤리적 책임 간의 상호 의존성에 대해 원칙적인 논평을 하자면, 기본소득 비판자들은 언제나 사회의 성과주의 노동윤리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기본소득이 있으면 아무도 더 이상 노동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여 제 발등을 찍는다.<sup>17)</sup> 그 말을 통해 그들이 극히 비판적인 인간상을 드러내서만이 아니다.<sup>18)</sup> 여기서 사용하는 도덕 개념도 극히 의심스럽다. 여기서 인간이 외부의 압력이나 제재를 통해서만 도덕적으로 정직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윤리적 행위의 첫 번째 기본조건, 즉 자유는 무시된다. 도덕적 책임은 자유를 전제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유 역시도 책임 있는 행사를 필요로 한다.)

부연하자면, 오용의 위험은 자유가 있는 곳에는 항상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가 법적 압력이나 제재 위협을 통해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하는가? 교육학적 경험은 경계를 긋고, 규칙을 정하고, 제재를 실행하는 데 국한되어 어느 누구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교육은 여하한 경우에도 도덕적으로 정직한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결과는 기껏해야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조종당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부단히 허용되는 것, 그러나 그 자체로는 결코 좋지 않은 것의 경계를 아슬아

17) 본문은 “그들은 악마를 벽에 그린다[sie malen den Teufel am Wand]이다. 그런데 이 말은 관용적으로 “악마를 그려 넣는 실수를 범한다”, 즉 “제 발등을 찍는다”는 의미로 쓰인다.(역주)

18) 모든 사람이 가끔은, 비록 “물어두고는” 있지만, 자신의 삶을 의미 있거나 목적의식적인 것에서 시작하려는, 원초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그들은 믿지 않는가? 그리고 무엇이 “의미 있는” 것으로 경험되고 간주되는지는 물론 경험에 달려 있지만 주변의 인정여부도 크게 좌우한다.



슬하게 따라라는 가지만 온전한 의미, 즉 내면의 통찰과 자유에서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경지에는 결코 이르지 못한다. 사회적 공생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들Rahmenbedingungen과 기준을 세우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 법률 시스템의 임무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윤리는 사회 질서를 단순히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다. 오히려 목표는 항상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발전, 즉 자유를 가지고 또는 자유 안에서 사람들을 책임감 있게 다루는 것이어야 한다.

아무튼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본소득이 어떤 경우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의 여지를 증대시켜 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리스도교 사회윤리에 의거하여 평가하자면 이러한 증대된 자유의 여지는 공동도덕에 대한 위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 정반대로 - 윤리적 주체들로서 사회 구성원 전체에 대한 사회의 도덕적 요구가 현저하게 증대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가 구성원들에게 개인적 활동여지Gestaltungsspielräume의 의미에서 자유를 허용하고 보장하면 할수록 사회에 해로운 행위를 엄격하게streng 제재하는 것도 정당화된다.<sup>19)</sup>

기본소득이 반사회적이라거나 개인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조장한다는 주장은 따라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반대로 기본소득이 전통적인 사회모델보다 개인에게 훨씬 더 큰 윤리적 요구를 부과한다고 확정할 수 있다. 기본소득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더 이상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사실 저는 제 인생과는, 혹은 제 인생에서 완전히 다른 것을 하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기본소득이 부여하는 자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변론의 여지없이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한 물음에 직면하게 만든다. 아마도 이 점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생각할 때 -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 우려하고 때로는 심지어 두려워하는 점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하겠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원칙적인 반대 논거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교육시스템의 중요한 과제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공공 기관의 교육목표는 노동 시장의 요구 사항보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성에 맞춰져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한 물음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6. 기본소득의 신학

“기본소득 개념은 현실적인 인간상에 기초한 것이며 성서에 근거한, 인간의 죄악적인 파괴성을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가?” 이는 결국 기본소득의 이념에 대한 결정적인 신학적-인류학적 질문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기본소득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는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도록 반사회적이지 않게 행동하기 위해, 즉 주어진 자유를 자기 자신 내지 사회에 해가 되지 않도록 행사하기 위해 인간에게 는 감독 당국과 기타 압력 수단이 필요한 것 아닐까?

이와 관련하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훨씬 더 광범위한 근본물음을 제기한다. 성서 인류학은 인

19) 그것은, 기본소득 사회에서는 특히 미신고노동Schwarz-Arbeit과 부패 등에 적용된다.

간의 “자연적이고 원천적인 선함”에 대한 순진한 낙관론을 맹종하지 않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기본소득 회의론자들의 인류학적 비관론에도 동조하지 않는다. 그런 관점을 가진다면 성서 전체의 메시지, 특히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정치적으로) 부적절하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비난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사상과 기본 동력은, 인간이 언제나 무조건적인 신의 보살핌과 사랑의 체험을 통해 치유되고, 이 체험에 응하여 자기중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거듭하여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보는 데 있다. 이것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서 특히 예수의 복음에서 핵심 내용이다! – 따라서 기본소득의 인간상을 비현실적이고 순진하며 그릇된 것으로 일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교 신학의 관점에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에 따르면, 신이 자신의 사랑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인간에게 기대할 때 -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다시 말해 선행급부<sup>20)</sup> 없이, 반대급부 Gegenleistung 없이. 다른 공로<sup>Verdienst</sup> 없이 오직 인간은 신의 이 무조건적인 선행급부에 적합한 응답을 찾을 능력이 가지고 있다는 믿음만으로 - 이런 잘못된되고 비현실적인 인간상을 가지고 있다고 신에게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본소득의 개념은 성서의 기본 범주인 무조건성을 직접적인 사회정책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사회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람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자유의 기회<sup>Freiraum</sup>가 부여되고 열리는데, 사람들은 이 긍정적인 선행급부(=기본소득)에 걸맞게 행동하고 성공적인 사회적 공존에 기여할 수 있거나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기본소득과 함께 개인에게 기대되는 개별적 책임은 성과관리나 징벌과 결합된 남용금지 위에 설계된 다른 모든 사회 모델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나 바로 이 - 확실히 위험한 - 자유와 책임의 부과는 그 모범을 성서의 하느님 그 자신이 인간에게 기대하고 넘겨주는 저 무조건성에서 발견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긍정적인 진술에서 명시적이라 할 만한 신학적 언급을 전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가 기본소득의 이념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처음으로 표현한 것이 공교롭게도 부활절 서한이라는 사실은, 기본소득에 대한 교황의 옹호는 명시적인 신학적 논증에 근거를 둔다는 점을 시사한다.

## 7. 요약

물론 하느님 나라의 최종 계시와 현실화는 아직 진행 중이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종말론적 긴장 속에서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정치적인 방법은 타협과 중간 단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본소득 사회는 하루아침에 실현될 수 없을 것이지만, 여러 사회정책 영역에서 영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실행단계가 필요하다. 물론 그것들을 나열하거나 서술하는 것이 이 기고문의 과제는 아니다. 기본소득 개념은 오히려 현실정치와 관련된 방향 또는 목표에 대한 사

20) 대가(代價)를 받기에 앞서 미리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 ‘선지급, 선분배, 선금’ 등으로도 번역가능하며, 여기서는 ‘기본소득’을 가리킨다. (역주)

회정치적 요구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는 현실정치를 맹목적인 실용주의로 이해하지 않고 의미 있고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수적인 모든 단계들을 관철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한에서 그러하다.

동시에 분명히 해 두어야 할 점은 기본소득의 도입이 단선적인 경로를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기본소득이 사회적으로 “퇴출”되어 불안정한 인구 집단을 더욱 주변화하는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례 없는 생산성의 조건에서 - 특히 기술로 인해서 - 사회조직과 사회정책을 오히려 현대화하여 그들을 산업사회적인(그렇지만 동시에 역사적으로 우발적인) 유급노동 패러다임에 의해 야기된 왜곡과 부당함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인지는 결코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이 사회적 결속과 사회 정의의 모든 문제와 도전을 단번에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순진한 일일 것이다.

이 순진함은 분명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기본소득을 분명하게 옹호하고 - 이 글에서 보여주려고 했듯이 - 그림으로써 교회의 사회교리의 토대 위에 확고히 서 있다고 생각할 만하다. 기본소득 개념과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저에 놓여 있는 인간상과 사회상을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톨릭 사회교리의 기본 원리들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나아가 성서 신학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이 글은 적어도 그리스도교인들이 - 그들의 정당 선호나 이해관계 정치의 선호에 상관없이 - 진지하게 기본소득과 대면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 네오오페라이스모의 기본소득론

⋮

진성철 서울대 철학과 박사과정 수료

## 1.

이 글은 네오오페라이스모(neo-operaismo) 이론가들의 기본소득론을 소개한다. 1960년대 초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오페라이스모(노동자주의)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노동계급이 놓여 있는 구체적 현실에 입각해 자본을 비판·극복하려는 운동이다. 이 운동을 추동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노동-자본 관계의 비대칭성, 즉 창조는 언제나 노동에서 시작되며 자본은 단지 이에 반응하며 움직일 수 있을 뿐이라는 직관이다. 이는 오페라이스모가 자본주의의 역사적 변형을 자본의 자기변신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투쟁에 맞선 자본의 대응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 잘 드러난다. 이 점에서 비대칭성은 노동이 지닌, 자본으로부터 자율적이 될 잠재력의 긍정이다. 나아가 그들은 이 잠재력의 현실화가 자율적 주체성의 구성과 조직화에 달려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것의 조건을 생산의 지형에서 찾다는 점에서 오페라이스모는 맑스주의 전통에서 있다. 그들은 자본의 극복을 위한 물질·주체적 토대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자체로부터 나온다는 맑스의 통찰을 공유한다. 요컨대 오페라이스모는 세계를 짓는 유일한 힘으로서 산 노동이 지닌 자율성의 긍정에서 출발해 생산지형의 분석에 기반하여 자율성의 현실화를 모색하는 것을 통해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운동이다. 오늘날 오페라이스모 전통의 이론가들이 자신을 ‘네오’ 오페라이스모라 칭하는 것도 바로 이와 관련된다. 네오라는 접두사는 현대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1960년대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기에 이론의 갱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표현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네오오페라이스모는 현대 생산양식을 인지자본주의, 삶정치적(biopolitical) 생산으로 특징짓는다. 인지자본주의론은 지식, 정보, 언어, 소통, 정동(affect)과 같은 인지적 요소가 현대의 주요한 생산 수단이자 대상이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부의 생산이 개별 노동자의 직접적 노동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력과 협력에 기반한 사회적 노동에 의존하게 되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변화는 맑스가 말한

자본의 “토대를 하늘로 날려버릴 물질적 조건들”이 오늘날 전면화되었음을 의미한다.<sup>1)</sup> 같은 맥락에서 삶정치적 생산은 삶 자체가 가치의 원천이 됨에 따라 오늘날 생산의 모델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생산”이 되었음을 강조한다.<sup>2)</sup> 이는 주체성이 자본과 노동 사이의 주요한 투쟁의 지형이라는 인식과 관계된다. 맑스에 따르면 자본은 자기증식하는 가치일뿐 아니라 무엇보다 사회적 관계이며 따라서 자본의 재생산은 자본주의적 주체성의 (재)생산에 의존한다.<sup>3)</sup> 그렇다면 주체성을 생산하는 역량이 노동의 편에 있음을 의미하는 삶정치적 생산은 더 이상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를 재생산하지 않는 자율적 주체성의 생산 가능성을 함축한다.

이는 물론 오늘날 자본의 지배가 사라졌다거나 심지어는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거꾸로 자본은 이러한 해방의 조건을 더욱 심화된 착취의 수단으로 전용한다. 따라서 오페라이스모는 현 시기 생산양식 못지않게 착취양식의 변화를 분석하는 일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인지자본주의론자들이 지식경제라는 용어에 반대하고 인지‘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sup>4)</sup> 사회적 노동의 확대가 자본에게 사회적 생산력에 무임승차하는 기회가 된다. 자기 생산적 주체성이 신자유주의적 주체성인 자기 자신의 기업가로서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변질된다. 신자유주의가 놓는 불안정성의 덫은 대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생활을 점점 더 부채에 의존하게 만들면서 화폐를 통한 노동에의 종속을 가능하게 한다.<sup>5)</sup> 이 핵심에 금융이 있다. 금융은 자본으로 하여금 생산과정의 외부에서 사회적 협력을 착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한편 저 노동에의 종속을 심화하면서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를 재생산한다. 요컨대 오늘날 변화된 생산양식에서 자율적 주체성의 잠재성을 발견할 수 있는 만큼이나 그 현실화를 가로막는 요소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이 네오오페라스모의 기본소득론이 제기되는 맥락이다. 네오오페라이스모 이론가들은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오늘날 생산양식의 변화 즉 사회적 노동의 확대에서 발견한다. 나아가 기본소득이 제공할 생활의 보장이 신자유주의의 지배 수단인 화폐를 통한 노동에의 종속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 2.

네오오페라이스모 이론가들은 기본소득이 “소득의 재분배와 결부된 사회부조의 형태로 이해될 수

1) Karl Marx, Martin Nicolaus(trans.), *Grundrisse: Foundations of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Rough Draught)*, Penguin Books, Harmondsworth, 1993, p. 706.

2) 안토니오 네그리 · 마이클 하트 지음, 정남영 · 윤영광 옮김, 『공통체』, 사월의 책, 2014, 199면.

3) “우리가 부르주아 사회를 장기적인 시각에서 전체로서 고찰하면 사회적 생산 과정의 최종 결과는 그 언제나 사회 자체, 즉 사회적 관계 안의 인간 자신으로서 나타난다.” *Grundrisse*, p. 712.

4) J.-M. Monnier & C. Vercellone, “The Foundations and Funding of Basic Income as Primary Income”, *Basic Income Studies* 9(1~2), 2014, p. 62.

5) A. Fumagalli, “Cognitive Biocapitalism, the Precarity Trap, and Basic Income: Post-Crisis Perspectives”, in Garcia Agustin Oscar, Ydesen Christian (eds.), *Post-Crisis Perspectives: The Common and its Powers*, Peter Lang, New York, 2012.

없으며 [...] 대신에 생산과 직접적으로 결부된 일차소득(primary income, 본원소득)으로 이해되고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6)</sup> 이는 사실 자본 자신의 논리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자본주의는 임금노동-소득 고리의 관철에 기초해있다. 생활수단에 접근할 수 없게 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에 판매하여 얻는 임금을 통해서만 생존을 위해 필요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여기서 임금은 노동시간을 척도로 개별노동이 전체 생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계산된다. 주지하듯 노동력과 임금의 교환은 처음부터 불평등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생산이 전체 생산물에 대한 개인의 기여분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사회적 협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삶정치적 생산의 국면에서 위와 같은 척도와 그에 기반한 계산은 자본 자신의 논리에 반하는 것이 된다. 오늘날 “그 계산이 나를 합리적일 수 있는 유일한 규모는 사회 전체이다. 다시 말해 노동이 집단적이고 사회적이라면 소득 또한 집단적이고 사회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과 소득 사이의 관계를 그것의 논리적 귀결까지 뒤쫓음으로써 우리는 사회적 소득, 시민 소득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개인적 노동과 소득 사이의 일체의 관계를 폐지한다. 마치 높이 오른 후에 사다리를 밀쳐버리는 것처럼 말이다.”<sup>7)</sup> 노동 없이 소득 없다는 자본의 으름장은 기본소득의 요구 속에서 부메랑이 되어 자본에게 돌아간다. 생산이 있는 곳엔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일차소득으로서 기본소득의 요구는 임금노동과 소득의 고리를 끊음과 동시에 생산의 사회적 성격을 단언하는 것이 된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은 늘 우리 주위에 존재하지만 소유에 의해 가려져왔던 부의 공통적 성격을 감각할 가능성을 제공하면서 대안 근대를 향한 기획 속에 배치될 수 있다. 네그리와 하트에 따르면 근대의 부르주아 사회는 경제, 정치 심지어는 주체의 개념마저 소유권에 기반해있는 소유 공화국이다.<sup>8)</sup> 고전주의 경제학에서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관념은 소유권의 정당화를 고립된 직접적 노동에서 찾는다. 인류 공동의 것으로 주어진 토지에서 ‘이 만큼이 나의 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가 그 땅에 나의 노동력을 투입했다는 사실이다. 반면 “공통적인 것은 먼저 사적인 것이든, 공적인 것이든 소유에 대립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나아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메커니즘과 함께 부에의 평등한 열린 접근 구조를 지칭한다.”<sup>9)</sup> 대안 근대로의 이행이 소유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통적인 것 안에서 공통적인 것을 민주적·자율적으로 생산·관리하는 것에 있다고 이해할 때 기본소득은 공통적인 것의 감각을 확대하는 계기로서 이 이행의 가속기로 기능할 수 있다.

### 3.

이행 전략으로서 기본소득의 핵심은 그것이 화폐를 통한 임금 노동에의 강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6) “The Foundations and Funding of Basic Income as Primary Income” p. 65.

7) M. Hardt, “Guranteed Income, or, The Separation Of Labor From Income”, Hybrid 5, 2000, p. 27.

8) 소유 공화국으로서 근대 사회에 대한 분석은 『공통체』, 29-53면 참조.

9) M. Hardt & A. Negri, Assembly,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p.97. 사실 네그리(와 하트)의 사유에서 ‘공통적인 것’은 정치·경제적인 것을 넘어 존재론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을 포괄하는 근본적 개념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윤영광, 『네그리의 공통주의와 공통적인 것』, 『범한철학』 제104집, 2022를 참조.



는 데서 발견될 수 있다. 화폐를 교환수단으로만 간주하는 관점에서 벗어나면 화폐는 특정한 사회적 관계가 체현된 제도로 나타난다. 자본주의적 화폐는 “축적과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분할 즉 자본-노동 관계의 재생산의 제도적 기등”이다.<sup>10)</sup> 공유지의 종획과 시초축적의 결과 발생하는 화폐 접근의 계급 간 비대칭성, 즉 자본은 노동과 관계없이 화폐에 접근할 수 있는 반면 노동자는 오직 노동력의 판매를 통해서만 화폐 접근이 허락되는 사정은 노동에의 강요와 자본-노동관계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강요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아래서 새로운 형태로 그러나 한층 더 강화되어 나타난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업률의 증가, 사회보장제도의 축소, 고용의 불안정화 등으로 인해 삶의 재생산을 점점 더 부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바 이는 삶정치적 생산의 시기에 자본에게 자본-노동 관계의 재생산과 착취를 보장하는 주요 수단이다.<sup>11)</sup> “오늘날 자본가는 현장에서 저 멀리 축출되었고, 노동자들은 더욱 자율적으로 부를 생산하고 있다. 자본가는 이윤이 아니라 지대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다. 이러한 지대는 대개 금융의 형태를 취하고 금융 수단들이 이것을 보증한다. 바로 여기가 생산 관계와 착취를 통제하고 유지하는 무기로서 채무가 무대로 올라오는 곳이다. 오늘날 착취는 주로, (평등한 혹은 불평등한) 교환이 아니라 빚에 기초하고 있다.”<sup>12)</sup>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삶의 재생산을 보장하면서 다중—공통적인 것 안에서 공통적인 것을 생산하는 대안적 주체성의 형상—의 편에서 노동에의 종속과 금융의 착취에 맞서는 무기가 된다.

이미 말했듯 화폐가 특정한 사회적 관계의 체현물이라면 우리는 자본주의적 화폐에 맞서 공통적인 것의 화폐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특이성들(singularities)의 자율적 협력을 통해 공통적인 것을 생산하며 그 생산을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사회적 관계를 체현할 것이다. 기본소득은 이 “공통적인 것의 화폐의 초석”이 될 수 있다.<sup>13)</sup> 그것이 제공해줄 공통적인 것에 대한 감각과 자본으로부터의 자율성은 공통적인 것 안에서 공통적인 것을 생산하는 사회적 협력의 발판이 될 수 있으며 이로부터 “독립된 생산자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협동하는 생산자들의 공동체의 내부에서 순환하는” 화폐, 즉 공통적인 것의 화폐를 상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sup>14)</sup> 중요한 것은 이 초석이 놓일 토대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자율적이게 된 삶정치적 생산 말이다.

10) L. Baronian & C. Vercellone, “Monnaie du commun et revenu social garanti”, *Terrains/Théories*, 1, 2015, p. 2.

11)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는 구조적으로 불안정성의 덧의 생산에 의존하는바 불안정성에 맞선 요구로서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를 원리 자체에서 침식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에서 기본소득은 개혁주의적 요구로 이해될 수 없다. “기본소득에 기초한 사회적 타협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기초, 진정한 토대 즉 생존을 위한 노동의 필요성과 축적의 원천으로서 사적 소유를 침식한다. 그러한 타협은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다.” A. Fumagalli, A. Giuliani, S. Lucarelli and C. Vercellone (eds.), *Cognitive Capitalism, Welfare and Labour: The Commonfare Hypothesis*, Routledge, New York, 2019, p. 72.

12) 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 지음, 조정환 옮김, 『선언』, 갈무리, 2012, 53면.

13) *Assembly*, p. 281. 네그리와 하트는 공통적인 것의 화폐를, 협력의 화폐, 특이화의 화폐, 사회·지구적 투자의 화폐로 특징짓는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Assembly* pp. 281-284 참조.

14) “Monnaie du commun et revenu social garanti”, p. 5.

## 4.

기본소득은 이렇듯 자율적 주체성의 성장의 발판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 성장의 표현이어야 한다. 이 점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수령자들에 관한 한 연구<sup>15)</sup>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연구에서 드러나는 수령자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은 당혹스러울 정도로 우리의 예상을 빗나간다. 수령자들은 기본소득을 경험한 후에도 노동이 소득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생각한다든가, 기본소득을 사회 부조의 하나로 심지어는 이후의 경제활동을 통해 갚아야 할 빚으로 받아들이는 등 기본소득운동의 이념과 상반되는 인식을 보였다. 물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특정 연령에만 해당되고 규모도 작았으며 그 취지에 대한 홍보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사례가 온전한 기본소득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설 불리 예측할 수 없겠지만, 그것은 기본소득의 진정한 성패가 새로운 감각, 새로운 주체성의 창조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본소득운동은 오늘날 등장 중인 대안적 주체성 즉 다중의 자기 구성적 기획으로 이해되고 수립되어야 한다. 이 기획은 먼저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다중의 창조적 역량의 소외를 탈신비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우리 모두가 공통적인 것의 생산에 참여하고 있음에 둘 때 가능하다. 이를 통해 열리는 공통적인 것의 감각 속에서 다중은 기본소득을 자본에 맞설 무기이자 자기 구성을 위한 수단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때 비로소 우리는 기본소득의 성공적 도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렇게 도입된 기본소득은 공통적인 것의 생산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 바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운동과 공통적인 것의 생산 사이의 일종의 선순환적 관계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기 구성적 기획의 물질적 조건은 이미 인간에 의한 인간의 생산으로서 삶정치적 생산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네오오페라이스모는 기본소득이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가능하고 유효한 자율의 요구임을 보여준다. 기본소득운동에서 네오오페라이스모의 기여는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5) 조문영, 조민서, 김지현, 『안전과 열망의 의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령자들의 서사』, 『한국문화인류학』 54-1, 2021.

# 김종철과 기본소득

...

안찬수 책임논사회문화재단 상임이사

## 1.

『발언III』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한겨레> <경향신문> <민중의소리> 등에 김종철 선생이 썼던 글을 모은 것입니다. 이 책에는 현재 『녹색평론』 발행인 역할을 맡고 있는 김정현 씨의 머리말이 붙어 있습니다. “한국사회에 소속된 지식인으로서, 김종철은 육신의 기력이 다하는 순간까지 자신이 보기에 지금 이 땅에서 가장 절실하다고 느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계간 《기본소득》의 원고 청탁을 받고 여러 가지 글감을 생각하다가,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김종철 선생이 육신의 기력을 다하는 순간까지 ‘절실하게 말하고자 했던 것’을,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따라가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김종철 선생은 지난 2020년 6월 25일 돌아가셨습니다. 선생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녹색평론』은 계속 발행되다가 2021년 11월 창간 30주년 기념호를 발간한 뒤 안타깝게도 1년간 휴간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격월간지 『녹색평론』은 휴간하였지만, 『비판적 상상력을 위하여(개정증보판)』(2022년 1월 25일)과 앞서 말한 『발언III』(2022년 4월 11일)을 이어서 출간하여, 출판사 녹색평론사의 활동은 지속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 2.

김종철 선생이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를 깊이 파고들어 탐구하고 이와 관련한 발언을 본격적으로 내놓은 것은 2013년~2014년 전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논의가 『녹색평론』 통권 제131호

(2013년 7~8월)에 강남훈, 박노완, 김종철 세 분이 「모두에게 존엄과 자유를—기본소득,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던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좌담회 중에 김종철 선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6년부터 『녹색평론』 지면을 통해서 지역통화운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료를 소개하는 도중에 이런저런 관련된 문제들, 예를 들어, 금융통화문제나 영국의 클리포드 더글러스가 제창한 사회신용(Social Credit)운동 등을 알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기본소득을 발견한 셈인데요.”라고. 김종철 선생의 기본소득 탐구 연원이 꽤나 깊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아무튼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를 뿌리에서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으로 과연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세상이 도래할까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공부라 할 것입니다.” 이 좌담회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종철 선생이 기본소득에 주목했던 것은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예를 들어 핵발전소이나 유해 산업시설, 골프장 등 지역사회를 파괴하는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결국 ‘돈’ 때문인데 만약 기본소득이 실현된다면 생존의 여유가 생기니까 그런 시설이 들어서지 않게 되리라는 것, 그래서 “효과적인 반핵운동은 기본소득운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육문제도 “대학에 가든 안 가든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만 된다면” 해결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안도 기본소득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셉 보이스의 “사람은 누구나 예술가이다”라는 발언을 언급하면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개개인이 예술가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잡념 없이 몰입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니까” 인간이 지닌 저마다의 독특한 예술가적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보았습니다.

### 3.

「‘기본소득’이라는 희망」(경향신문, 2014년 3월 6일)에서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이미 2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개념인 점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김종철 선생은 토머스 페인의 만년 저작 『토지 분배의 정의』(1797년) 속에서 행한 제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페인의 ‘국민기금’ 구상이 단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공적 부조나 자선 프로그램이 아니며, 토지라는 만인 공통재산으로 인한 이익을 사회구성원 전체가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것, 따라서 ‘국민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돈은 국가에 의한 생활지원금이 아니라 국민 각자가 응당 자신의 몫으로 지급받아야 할 ‘배당금’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기본소득’을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마땅한 권리로 주어져야 할 ‘배당금’이라고 볼 때, 우리가 오랫동안 길들여져 온 전통적인 노동윤리, 즉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노동윤리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7월 17일(수요일) 김종철 선생 강연회가 책읽는사회문화재단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 날 강연회는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2019년 6월 20일 초판)을 펴낸 뒤 녹색평론 독자 모임을 포함 해서 여러 독자와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김종철 선생은 이 자리에서 ‘근대’ ‘근대화’ ‘근대문명’에 대한 비판을 주로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강연회가 끝나고 맥주 집에서 독자들과 함께 뒤풀이를 하던 모습이, 제가 김종철 선생을 뵈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김종철 선생은 이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냥 절망 속에 빠져 있거나 체념에 잠겨 있을 수는 없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책임에 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장에 희망이 보이는 보이지 않든, 우리에게서 우리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데 전념하는 길 이외에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에 「탈성장시대, 기본소득, 은행의 공유화」라는 강연록(2014년 4월 25일 계간지 『말과행』이 주최한 독자모임에서 행한 이야기를 녹취하여 정리한 강연록)이 실려 있습니다. 이 강연록에서 “소득은 노동의 대가라는 생각”이 낡은 생각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노동신성(勞動神聖)이라는 관념은 생산성이 낮았던 시대의 유물”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람은 일을 해야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자유롭게 생을 영위할 권리와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전개 과정에서 가장 많이 부딪치는 질문이 “일을 하지 않고, 일을 할 의사도 없는 사람한테까지 왜 기본소득을 주며, 부자들에게도 왜 기본소득을 줘야 하는가”라는 의문입니다. 말하자면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김종철 선생은 기본소득은 “한 사회, 한 공동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주주’로 간주하는 토대 위에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게 논리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영구기금’의 예처럼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석유라는 자원을 주민 전체의 공유자원으로 인식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구성원 전원에게 배당금으로 고르게 분배해야 한다는 발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석유자원이 있는 지역이나 국가라고 해서 모두 알래스카영구기금과 같은 제도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김종철 선생은 알래스카식 기본소득 모델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경제학자 칼 와이드퀴스트를 소개합니다. 칼 와이드퀴스트는 “알래스카영구기금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석유자원(자원)의 유무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라는 논리를 폈다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생각하면 세상의 어떤 가난한 나라라 할지라도 기본소득제를 시행하지 못할 나라는 없다는 논리가 됩니다. 문제는 정치적 의지입니다.

기본소득을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로서의 ‘배당금’이며 문제는 정치적 의지라고 할 때, 그 공동체의 공유자산은 무엇인가. 김종철 선생은 일본의 경제학자 우자와 히로후미(宇澤弘文)가 말하는 ‘사회적 공통자본’도 결국은 ‘공유지’라고 지적합니다. “공동체의 경제·사회적 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한 인프라들도 알고 보면 전부 공유지 혹은 공유자산에 속하는 것” 즉 “철도, 도로, 항만, 공항, 가스, 전기, 통신, 의료 및 교육시설 등등”이 모두 공유지, 공유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기업에 대하여 도로라는 공공 인프라

를 통해서 획득한 이익의 일부라도 공공기금으로 내놓도록 설득하거나 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종철 선생의 공공자산에 대한 논의 중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공공자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있으니 그것은 바로 ‘화폐금융제도’라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화폐라는 것이 본래 공동체의 경제생활을 원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환수단인데 근대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사적 이익을 취득하는 수단이 돼버렸다는 것. 문제는 이자, 그것도 복리 이자입니다. 마르그리트 케네디라는 독일 학자의 논의를 보면 물가의 30~40퍼센트가 이자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자로 인해 소수의 부유층을 제외하고 대다수 시민, 소비자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끊임없이 부를 강탈당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돈은 민간 사립은행이 영리 목적으로 찍어내지 않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발행하는 관행이 확립된다면, 어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우선 이자를 비롯해서 화폐 발행으로 얻는 이익(그것은 ‘시노리지’라고 합니다만)은 전부 공익을 위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김종철 선생은 “해법은 금융시스템의 공공화 내지는 은행의 공유화”라고 말하면서 금융제도와 화폐라는 공공재를 다시 민중의 것, 주민의 것으로 돌리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 5.

스위스 국영방송 <에스에르에프>SRF는 2016년 6월 6일(현지시각) 기본소득 도입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 찬성 23%, 반대 76.9%로 부결됐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언론매체도 큰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평과 해설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김종철 선생은 「기본소득이라는 출구」라는 칼럼(경향신문 2016년 6월 9일)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이 아이디어가 이토록 급속히 확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기본소득이 실현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다. 일찍이 미국 클린턴 정부의 노동부장관을 역임한 로버트 라이시, 혹은 그리스 시리자 정부의 전 재무장관 야니스 바루파키스 등은 최근까지도 기본소득과는 무관한 경제학자들이었다. 그런 그들도 지금은 ‘자본주의의 안정화와 인간화’를 위해서도 기본소득의 신속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아무리 봐도 이것 말고는 출구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일 것이다.”

## 6.

「코로나 사태, 할로는 무엇인가」라는 글은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때인 2020년 5월 6일 발표한 글로 돌아가시기 약 한 달여 전에 발표한 글입니다.

김종철 선생은 이 글에서 ‘코로나 사태’가 제임스 쿤슬러라는 미국의 작가가 말한 ‘장기 비상상황’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인간의 역사에서 전혀 낯선 종류의 경험이 아니다. 고대, 중세의 역병과 다른 게 있다면 감염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그 범위가 전지구적이라는 점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는 자본주의의 폭주, 과잉 산업발전과 소비주의의 소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단순히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의 복귀를 바랄 것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가 무엇을 말하는지 좀더 근원적인 깨달음을 얻을 필요가 있다.” “코로나 사태의 원인은 기후변화의 원인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한다.”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인 화석연료 의존적 경제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와 자원의 순환적인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

김종철 선생은 코로나 사태라는 비상상황을 통해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기본소득이나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공생의 윤리가 새로운 상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단초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의 사회적 상식으로 떠올랐다는 것, 그리고 노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다고 생존에 필수적인 진짜 경제는 거의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수확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7.

코로나 사태가 끝나기도 전에 김종철 선생은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김종철 선생이 살아계신다면, 20대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일정을 우리 사회의 근원적인 ‘전환(轉換)’의 계기로 삼으면서, 더 나아가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던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의 서문은 이런 대목으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일망정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일념으로 물을 길어 붓기를 계속한다면 언젠가는 그 마른 나뭇가지에 푸른 싹이 돌아나는 기적을 보는 행운이 우리에게도 찾아올지 누가 알겠는가.” 이 어쭙지 않은 글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에 물을 길어 붓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 푼 돈? 내겐 ‘삶’을 살게 하는 돈, 기본소득 월 65만 원

윤희주

기본소득당 동물권생태의제기구 어스링스 운영위원

나는 20살부터 평화캠프 인천지부인 꿈샘 인연맺기 학교에서 자원활동을 했다. 이후엔 (지금은 평화캠프 소속이 아니지만) 노동당 당원으로 활동을 했다. 하지만 어디에나 갈등은 있는 법. 당내가 시끄러웠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확신이 없었지만, 나는 내 삶에 와닿는 이슈 기본소득에 끌렸다. 결국 노동당을 탈당했다. 그리고 ‘모두에게 모두의 것을, 기본소득 월 65만원’이라는 슬로건을 내 건 기본소득당 창당에 함께 했다. 이것이 기본소득과 나의 첫 만남이었다,

월 65만 원의 기본소득. 처음에는 저게 되겠냐는 의심, 기본소득을 받으면 무엇을 하지라는 설렘이 공존했다. 사실 너무 받고 싶었다. 누구에게 푼돈일지 모르는 65만 원은 한 달에 100만 원 남짓을 버는 내겐 삶을 살게 할 돈이었다. 아니 그보다 조금 더 적은 돈이라도 충분했다. 온갖 절차를 거쳐야 하는 수급 제도, 일정 근무 기간을 달성해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적성에 맞지 않는 취업성공패키지 등 국가정책들은 나에겐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힘들어도 어디 하나 기댈 곳 없었다. 나는 나처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기본소득이 소중했다.

생계를 위한 노동시간을 제외하곤, 당 활동에 참여하려고 애썼다. 그러다 기본소득당 동물권 생태의제기구 어스링스에서 활동도 시작했다. 처음엔 그저 동물권? 많이 들어봤는데. 이 정도의 호기심이었다. 나는 이 활동을 통해서 동물에 대해 알게 됐다. 늘 함께 살아가고 있었고, 늘 기대고 있었지만, ‘고기’라는 이름으로만 불렸던 이들의 눈을 보기 시작했다. ‘고기’가 아닌 ‘이름’으로 불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어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 그게 정치를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을 함께 공부해나갔다. 나 또한 육식 위주였던 식습관을 반성하고, 이를 변화시켜나가는 삶을 조금씩 실천 중이다. ‘모두의 것’이라는 기본소득의 슬로건이 누군가를 동등한 존재로 생각하고 대우하는 삶을 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기본소득은 내 삶의 전환점이 됐다.

어스링스 활동은 기본소득이 있는 삶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조금씩 구체화하는 계기도 됐다. 길거리 동물과 공존하는 삶이다. 난 흔히 말하는 ‘애견인’이었다. 27년 내 인생엔 늘 유기견이었던 반려견이 있었다. ‘공주’라는 이름을 가진 요크셔테리어다. 그는 전 주인에게 학대받았지만, 사랑을 멈추지 않았다. 내게 무한한 사랑을 줬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마음 깊숙이 가지고 있던 나에게 ‘온전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줬고 나를 치유했다. 누군가는 내가 공주를 키웠다고 하겠지만, 아니다. 우리는 서로를 키워냈다. 그러던, 2020년 2월 공주를 떠나보냈다. 사실 반려견을 떠나보낸 슬픔이 너무 컸다. 용기가 없어서 다른 반려견을 들이기도 어려웠다.

우연히 길 위의 유기묘와 연이 닿았다. 상가건물인 우리 집 뒷 마당에 고양이 여섯 식구가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처음에는 나를 경계하고 무서워했던 이들이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알아보기라도 하는지 이젠 개냥이가 다 됐다. 근처만 가도 내 옆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나를 귀찮게 한다. 며칠 전에는 새끼가 또 태어났다. 정말 기쁘기도 하고, 벅찬 느낌까지 들었다. 하지만, 한 편으론 부담도 됐다. 당장 생활비 걱정이 있는데 새로운 식구를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었다. 그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기본소득을 받으면 뒷마당에 유기고양이 몇 마리 더 와도 내가 챙길 수 있겠다.”

동물을 좋아하는 나로선 정말 행복한 상상이다. 다른 존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삶. 특히 한없는 사랑을 가진 동물들과 함께 하는 삶.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이처럼 기본소득 65만 원은 동물과 공존하는 우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

음을 느낀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하고 싶다. 누군가는 그들(유기묘)이 길거리의 장애물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그건 그들이 가져다주는 행복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오로지 ‘돈’으로 생산의 기준을 따질 것이 아니라, ‘행복’을 생산의 기준으로 바꾸자. 그럼 그들은 모두의 것을 만드는 존재들이다. 바꾸어 생각해봐라. 돈으로 생산하는 제품만이 존재하는 세상, 우리가 배경이라고 생각하는 자연, 동물들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봐라. 과연 우리는 행복할까. 기본소득은 돈이자, 우리 삶에 가려졌던 이야기들을 꺼내놓는 터널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젠 대선을 걸쳐 지선을 준비한다. 내가 사는 인천에도 기본소득당 후보가 있다. 나는 내가 사는 이곳에 기본소득이 도입되길 바란다. 누군가는 작은 울림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울림 뒤에는 수많은 삶들이 있음을 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며, 들리지 않지만 들리는 목소리가 있다는 걸 말이다. 나는 그런 작은 줄기들이 이어져서 큰 나무가 되리라고 믿는다. 오늘도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다.

## 기본소득, 존재의 권리

최진석

문학평론가/〈뉴래디컬리뷰〉편집위원

각종 선거철마다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도마에 오른다. 교실도 예외는 아니다. 현대 사회와 문화에 대한 수업을 하다보면 학생들 사이에서 기본소득을 놓고 자주 격론이 벌어지곤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본소득을 일종의 생활지원금 정도로 받아들이는 형편이다. 기본소득은 얼마나 주는가? 개인당 지급인가 가족당 지급인가?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가? 나아가 국가 전체의 부를 생각하며 기본소득의 과잉지출이 야기할 물가상승이나 실질임금의 하락을 걱정하는 말들도 나온다. 물론, 학생들 사이의 토론이니 정교한 경제학적 계산이나 논쟁으로 치달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나라에서 돈을 준다는 게 반갑지 않을 리 없다. 하지만 정말 가능한 일인지, 근거가 있는지 의혹에 빠지기도 한다. 주는 이유도, 받는 이유도 못 미덥기 때문일 게다. 기본소득을 왜 주는가? 이 질문에 대개 입을 다무는 것도 그래서일 듯싶다. 일하는 노동자도 아니고 은퇴한 퇴직자도 아닌데 대체 왜 돈을 준다는 말인가?

교활한 정치가들의 생색내기용 공약이라는 주장도 있고, 복지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정책이라는 입장도 있다. 그렇지만 어느 쪽도 기본소득을 왜 주어야 하는지, 아니 국민이 기본소득을 왜 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답하지 못한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가? 아니, 어떤 근거로 우리는 기본소득을 받아야 할까? 학생들 사이의 토론을 곰곰 되돌아보면, 이 두 질문 사이의 거리감, 그 차이야말로 기본소득에 대한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듯싶다.

전자 즉 국가가 기본소득을 베푼다는 생각에는 그 행위의 주체가 국가로 상정되어 있다. 국가가 국민에게 안전과 행복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가난했던 시절을 지나 이제 세계 경제 10위권의 선진국에 들어섰기 때문인가? 물론 그도 충

분한 이유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라도 선진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세계 경제 지표상의 순위가 추락한다면 기본소득은 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인가? 나아가 기본소득 제공의 주체가 국가이고 국민은 수여의 객체라면, 그것은 일종의 시혜적이고 과시적인 관료적 사무가 되기 십상이다. 주는 대로 받고, 감사하면 되는 피동적 대상으로 국민이 전락하는 것이다. 그런 국민을 주권의 담지자라 부를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후자에서 기본소득의 주체는 국민이다. 즉 국가가 주니까 감사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가기에 당연히 받는 것이다. 그럼 국민의 권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국민이면 무조건 국가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인가? 어떤 이유에서 국민은 국가로부터 기본소득을 받을 이유가 있다는 걸까? 핵심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소득의 근거를 노동에서 찾는다. 공장이든 회사든 생산의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는 관념이 그것이다. 당연한 말이다. 고용주와 계약을 맺고 노동하는 것은 개인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국가라는 거대한 공동체가 작동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국가는 노동을 국민의 권리라고 부른다. 이 같은 노동을 남성들의 전유물로만 간주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가사도 노동이며, 비정규 알바생도 모두 정당한 노동자로 여겨지는 시대가 왔다. 우리 시대에 노동의 범주는 훨씬 넓고 크다. 이 말은 명시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일하는 것만이 노동에 속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가령 내가 편의점에 들러 콜라를 하나 샀다고 치자. 점원은 바코드 스캐너로 계산을 마친다. 이 장면에서 나는 한 명의 소비자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소비행위는 바코드 스캔을 통해 편의점의 재고관리 시스템에 입력되고, 이는 다시 콜라 판매 전산망에 일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콜라의 생산과 유통에도 기여할 것이다. 나는 나도 모르게 콜라 회사의 생산 시스템에 일정한 노동력을 제공한 셈이다. 실상 한 사회에서 모든 소비활동은 그것의 실현과 동시에 생산에 포함되는 일련의 연속적 과정에 속해 있다. 개인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소비행위가 한 기업의 생산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전체 생산에도 관련되어 있으며, 아마 세계 시장의 흐름에도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생산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에 머물지 않는다. 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이 생존하고 활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어쩌면 그의 존재 자체가 전체의 지속과 성장에 불가결한 요소라 말해도 틀리지 않을 성싶다. 이러한 존재의 권리, 그



것을 구체적인 국가적 정책으로 표명한 것이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국민을 불쌍하게 여겨서 쥐어주는 시혜성 자금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국가의 존속과 번영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공하는 의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 즉 개인은 자신의 존재 자체로 인해 기본소득을 받을 이유가 충분하다. 주권자 없는 국가는 생각할 수 없지 않은가? 그런 주권자의 생존과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기본소득은 현대를 살아가는 개인이 누려야 할 존재의 권리이다. 더 이상 우리는 국가를 위해 복무하지 않는다. 우리의 존재로 말미암아 국가가 있고, 국가는 국민이 생존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우리가 당차게 요구하고 떳떳하게 받아야 할 존재의 권리, 주권자의 몫인 셈이다.

## 성남시 청년배당의 정치적 궤적

김지현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졸업

안녕하세요.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류학과 석사 김지현입니다. 저는 「청년배당의 쟁점과 기본소득의 궤적: 정책-연결망의 형성과 변형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학위논문에서 성남시 청년배당의 제도화 과정을 연구하였습니다. 기본소득의 쟁점을 미리 상정하고 그에 대한 찬반을 논하기보다,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오늘날 한국에서 실제로 어떠한 행위자들을 끌어모았으며 이들이 연합하거나 경합하는 과정을 거쳐 무엇이 기본소득과 사회보장의 쟁점으로 떠올랐는지 귀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가 2015년에 발표한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청년에게 4분기에 걸쳐 총 100만 원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2016년 1월부터 시행되어 2019년 4월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정책의 제도화 과정은 19세기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를 경험한 서구 국가들이나 1990년대 이후 조건부 현금지급 프로그램이 주요한 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해 온 남반구 국가들과 다른 경로를 밟아 온 한국에서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주목받게 된 맥락과 그것이 현실 세력 관계 속에서 쟁점화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저는 정부 여야의 정치인과 관료, 언론, 소상공인, 기본소득 운동단체 등이 청년배당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했는지 살펴보고 이들이 동맹을 맺거나 갈등하고 타협하면서 청년배당의 쟁점이 변화해 온 과정을 추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인물이나 담론, 지표가 다수의 행위자를 대변하는 강력한 고리가 되는 한편, 어떠한 행위자가 동맹에 실패하거나 이 정책이 놓인 연결망의 주변부에 남게 되었는지 드러냄으로써 구체적인 비판과 개입의 계기를 마련해보려 했습니다.

연구의 내용은 크게 청년배당의 도입 배경, 구상, 청년배당이 발표된 후 이 정책을 둘러싼 정치의 과정으로 나뉩니다. 청년배당은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기본소득 운동과 2010년 무상급식 논쟁 이후 활성화된 복지정치의 흐름이 맞물리며 도입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청년배당이 어떠한 정치적 지향 속에서 도입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기본소득 운동진영에서 기본소득을 ‘공유부의 배당’으로 보자

는 합의가 형성된 과정과 민선 6기 성남시정에서 기본소득을 무상복지를 대신하여 국가의 사회보장에 대한 의무를 공론화할 수단으로 논의한 과정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각기 다른 계기로 기본소득을 주장해 온 맑스주의 경제학자와 철학자, 사회복지학자, 생태주의자들은 2013년경부터 기본소득을 공유부의 배당으로 정당화하는 데 합의를 이룹니다. 정당화 논변으로서 공유부 배당론이 어떤 논변보다도 강력하게 기본소득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 자원 모델로서 공유부 배당 모델이 효과적으로 부의 불평등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 이러한 합의를 가능케 한 주된 이유였습니다. 한편, 2014년 민선 6기 성남시정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한 배경은 “무상복지”라는 구호의 흥망성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2010년 무상급식 논쟁 이후 무상복지는 범진보세력을 통합하는 슬로건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보수언론의 “복지포퓰리즘”이라는 공세와 민주당 내 경제관료 출신 의원들의 반발로 무상복지라는 슬로건은 점차 정치적 동원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선 6기 성남시정은 무상복지를 대신하여 부의 불평등 문제에 개입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에 대한 의무를 공론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본소득에 주목하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 시범적 기본소득제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운영진과 개별적으로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던 연구자들로 이뤄진 청년배당의 입안자들은 시범적 기본소득제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청년이라는 세대 범주와 공유부 배당의 개념, 지역화폐를 결합하였습니다. 이들은 기본소득을 2000년대 후반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주목받아 온 청년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청년세대론의 대중성을 활용하여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보편적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자 했습니다. 정부가 기존 청년실업대책에서 청년을 사회보장과 무관한 예비노동자로 보고 고용정책에 집중해왔다면, 청년배당의 입안자들은 모든 시민이 공유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며 공유부 배당을 정책의 핵심적인 원리로 기입했습니다. 또한 입안자들은 청년배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풀뿌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과 소상공인의 동맹을 형성하여 청년배당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높이하고자 했습니다.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발표한 후 경기도가 청년배당을 청년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까지 이 정책의 쟁점이 그려온 궤적은 세 국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국면은 박근혜 정부가 청년배당의 도입에 반대하면서 청년의 급여자격을 중심으로 논쟁이 시작된 시기입니다. 당시 지자체와 복지에 산을 두고 갈등하고 있었던 박근혜 정부와 여당, 보수언론은 노동을 통한 자립을 청년의 덕목으로 강조하며, 청년배당을 지자체장 개인이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청년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으로 비난했습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과 진보언론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세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청년배당을 옹호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전개된 논쟁에서 청년배당은 시범적인 기본소득제로 공론화되기보다는 청년이라는 특정 세대 집단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공론화되었고, 청년이 복지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국면은 2016년 봄 알파고 쇼크를 계기로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담론과 함께 대중적 관심을 받는 의제로 급부상하면서 청년배당이 놓인 정치의 지형이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재편된 시기입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연구자들은 복지국가 운동진영에 연대를 제안하며, 지자체에서도 실현 가능한 청년기본소득에서부터 시작하여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로 나아가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지국가 운동진영은 기본소득이 필요의 충족이라는 사회보장의 원칙을 위반하고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쓰여야 할 예산을 쓰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연대 제안을 거부하였습니다.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경향은 정치권과 언론에서 청년배당과 기본소득을 “이재명의 정책”으로 다루면서, 여러 행위자의 연합을 통해 등장한 청년배당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개인의 브랜드로 귀속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본소득 운동진영에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기본소득을 공론화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지만, 기본소득 의제가 정쟁의 문제로 축소될 수도 있는 위험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 청년배당과 유사한 형태의 정책을 도입하고자 했던 기본소득 운동가들은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들이 청년배당을 이재명의 브랜드로 여기며 관심을 보이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세 번째 국면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기조하에 청년배당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벌충하려는 기획과 연결하면서, 청년배당이 여러 지역에 지역사랑상품권 연계형 복지수당의 형태로 확산된 시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급권자의 선택권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이해 사이의 대립’이 새로운 마찰의 지점이 되었습니다. 청년배당의 입안자들이 성남사랑상품권을 매개로 수급권자와 소상공인의 복지동맹을 형성하고자 한 것과 달리, 성남시 아동수당 수급권자들이 아동수당을 현금이 아닌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에 반발하면서 이러한 대립 구도가 본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곧 무게중심은 수령자의 ‘소비자로서 편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졌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량을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대변하는 척도이자 재정적 지원 기준으로 제시한 것과 연관됩니다. 상품권의 발행량 자체가 지자체의 성과가 되면서 여러 지자체는 상품권의 발행량을 늘리기 위해 가맹점 제한을 대폭 완화했고, 이로 인해 지역사랑상품권 연계형 복지수당은 풀뿌리 경제를 활성화하기보다 대자본과 소자본 간 부의 불평등을 강화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연구에서 청년배당과 함께 형성된 사회보장 공론장의 정치적 지형을 그려보고, 정치의 과정을 거쳐 부각된 정책의 내용은 무엇이며, 반면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거나 가려지게 된 내용은 무엇인지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여전히 청년기본소득을 둘러싼 정치의 지형은 변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 연구의 후반부에서 청년배당이 지역사랑상품권 연계형 복지수당의 형태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의 지점을 드러내는 데 집중했다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기본소득 운동가들이 참여하고, 청년기본소득 담당 공무원들이 이 정책을 홍보 및 실행하고,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하고, 경기연구원과 기본소득 연구자들이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등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또 다른 행위자들의 연결망이 형성되는 양상과 이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기본소득과 통화제도 개혁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청년배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되게 된 경위를 조사하며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 선생님의 사회신용론에 기반한 기본소득론을 접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기본소득과 통화제도 개혁, 민주주의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행 통화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그 돈은 민영은행이 대출로 신용을 창출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굴레에 종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으로 급격히 달라지고 있는 오늘날의 통화공간은 20세기 초 사회신용론이 제기되었던 상황과는 또 다른 질문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어떤 통화제도를 지향해야 하는지를 두고 경합하고 있는 여러 대안화폐의 모델과 운동을 살펴보면서 어떤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이 출현하고

있는지 분석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연구가 한국에서 기본소득과 청년배당이 촉발한 사회보장 공론장의 정치적 지형 변화를 탐구하려는 분들에게도, 기본소득의 해방적 가능성과 현실적 조건 사이에서 접점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 지역에서 기본소득 운동이 나아갈 길

### 이재섭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공동자원론을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지난 5년간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에서 공동자원론에 대해 공부하면서 마을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며 지역에서 공동자원을 활용한 시민배당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 기본소득 논문 작성 동기

많은 연구자들이 기본소득은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이행전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제주에서야말로 시급한 이행전략이 필요합니다. 제주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의 개발을 멈추고, 생태환경을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생태환경을 지키는 데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여러분이 지켜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환경을 지키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때 가장 큰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역 공동체의 주민들입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의 자유와 참여를 실질적이고 평등하게 보장할 수 있는 기본소득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동부’에 대한 모든 사회 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이 필요하고, 이때 단순히 우리들의 권리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이자 주민으로서의 책무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공동자원Commons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 뿐 아니라 대한민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동체들이 공동자원을 상실하고 공동체가 해체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동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때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며, 지역에서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이 고민은 공동자원과 기본소득, 즉 시민배당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마을 공동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주목했고, 그 물적 토대가 지역에 있는 공동자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을 공동체와 공동자원은 여전히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지역과 마을의 역할은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직적으로 내려 주는 기본소득을 기다리는 수동적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역의 공동자원을 활용해서 해체 위기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그 몫의 일부로 시민배당을 실현할 수 있다면 공동자원과 공동체도 지속 가능하리라는 고민들을 논문에 담아냈습니다. 그렇게 지난 2월에 「공동자원론에 입각한 시민배당과 기본소득론의 확장: 조세론적 기본소득론의 한계와 공동자원론에 입각한 해결 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완성하였습니다.

## 논문 소개

제 연구는 공동자원론에 입각해 기본소득론에 현실성을 부여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도 일부 확인했듯이 조세론적 기본소득론은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조세론적 기본소득론의 한계를 제시하고, 기본소득론을 확장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동자원을 활용한 시민배당을 검토할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였습니다. 물론 기본소득론은 현실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 자유를 증진할 수 있는 효율적 정책이기는 하지만 현실성을 확보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공동자원론에 입각한 논의는 ‘나와 공동체, 공동자원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자각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역을 둘러싼 공동자원과 그 공동자원을 중심으로 삶을 이어온 공동체입니다. 공동의 것을 공동체로 돌리고, 자율적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결국 공동자원을 기반으로 살아온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공동자원을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되기도 합니다. 공동자원론에 입각한 시민배당은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잃어버린 공동자원을 회복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시민배당이 지급된다면 공동체와 공동자원과의 관계가 되살아나고, 둘의 연결 고리는 더욱 촘촘해질 수 있습니다. 모두의 권리와 책무를 바탕으로 한 공동자원론에 입각한 시민배당은 사회적 합의 도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조세론에 입각한 기본소득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공동자원과 시민배당의 총위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나 중앙 정부 단위에서는 주로 조세를 기반으로 기본소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 같은 경우는 시민과 도민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환경보전기여금이라든지 지하수, 천연자원 등의 많은 공동자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시민배당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알래스카 주정부의 영구금배당금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마을 공동체입니다. 유독 제주도에는 마을의 공동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주민들에 의해서 관리되고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마을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원도 없고 자산도 없어서 마을의 운영을 멈췄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잘 운영되는 마을의 사례를 통해 시민배당의 가능성에 대해 모색해 보려 하였습니다.

가이 스탠딩은 ‘기본소득은 우리에게 부과된 환경 비용에 대한 부분적 보상으로 사회 정의의 문제

로도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환경보전기여금은 도입되어야 하며, 도입된다면 환경수용력과 도민의 삶의 질이 같이 향상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기여금의 재원 중 일부가 도민들에게 배당되면 환경배당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배당이 실현되면 제주도민들도 모두가 아름다운 제주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논의해야 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공동자원의 시각에서 시민배당을 바라볼 때 매우 다양한 공동 자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배 구조가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들은 공동자원 이용의 정당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이게 주민들의 것인지, 왜 제주도민들의 것인지, 왜 대한민국 사람들의 것인지를 문제들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수익에 대해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체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람이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논쟁의 대상이지만, 마을 내 수익을 어떻게 분배하는지도 마을에 따라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민은 필요하지만 기존의 마을들은 마을 공동체가 유지되어 오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어떤 기여를 했느냐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여소득과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참여소득은 개인에게 소득을 주기 위해 공동체 내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고, 개인이 올바르게 수행했는지에 대해 감독을 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공동자원론에 입각한 시민배당의 중점은 공동체에 있으며, 공동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운영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공동체 내에 존재하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해 내면 됩니다. 이는 별도의 생산을 위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차원과는 다른 형태로 보아야 합니다. 결국, 공동자원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마을 공동체의 협력이 요구되며, 시민배당이라는 시민의 권리와 시민이 지역에서의 역할들을 담당했을 때 공동자원도 유지되고 마을 공동체도 지속 가능해질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우리의 삶도 지속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제주도의 마을 사례를 통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공동자원론을 기반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공동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며, 왜 시민배당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주목하였습니다. 지역의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역의 공동자원 관리와 유지,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할 의지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 구성원의 관심과 노력이 공동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개인이 늘어나야 마을 공동자원이 관리되고, 마을의 자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조세를 기반으로 한 기본소득은 중앙 정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동자원을 활용한 시민배당 논의를 활성화해야 함을 제안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마을의 기반이었던 공동자원을 상실한 공동체는 예로부터 끈끈하게 이어져 내려온 공동체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공동자원은 단순히 공동의 자산이 아닌, 마을의 관계를 이어온 연결 고리였습니다. 공동자원을 통해 끊어진 마을과 사람들을 연결해야 지역에서의 삶도 되살아날 것입니다. 공동자원론에 입각한 시민배당을 통해 마을 공동체가 공동자원을 새롭게 인식하고,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마을의 자치를 이루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제주라는 지역에서 생활한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참여는 하지 못하고 있으나 네트워크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다양한 논의들이 제게는 큰 자양분이 되었고, 앞으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제주에서 ‘기본소득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으며, 학회 및 다양한 공간에서 기본소득을 알리고, 지역에서 기본소득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에서의 기본소득 논의는 각 지역이 처한 환경과 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세부적인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저는 향후 네트워크가 지역 네트워크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의 특수성에 기반한 지역에서의 기본소득 연구와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제주라는 지역에서의 연구를 꾸준히 이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공동체와 공동자원에 지속가능성에 대해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시민배당으로 연결하면서 탈성장 문제와 공동체의 돌봄 문제로 이어져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통해 공동자원과 공동체, 돌봄과 시민배당의 연결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론적 논의와 제주라는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동체 차원의 노력을 결부시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 기본소득의 실현에도 작게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9 772733 812007  
ISSN 2733-8126



22



기  
보  
문  
화  
2022 여름  
#012  
소  
문  
화